ISSN 1739-5593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2005년 제2호

국제협력동향

KOICA
한국국제협력단

국제협력동향

2005년 제2호

한국국제협력단

목차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Ⅰ. 논단

1. 캄보디아에서의 달러 사용의 득과 실 ····· 11
   강기원_서원대학교 교수
2. 한국국제협력단 프로젝트 건축분야 CM제도 활용현황과 발전방향 ····· 23
   고영배_한국국제협력단 IT협력팀

Ⅱ. 개발협력동향

1. OECD/DAC 및 국제기구 원조 동향
   - 취약국가 지원 관련 논의 동향 ····· 31
   - OECD/DAC2004년 ODA 통계 ····· 39
   - 제833회 OECD 개발원조위원회 정기회의 결과 ····· 41
2. 공여국 원조 동향

1) 선진국 개발원조 개관

   - 노르웨이 대외원조 개관 ····· 44
   - 핀란드 대외원조 개관 ····· 53

2) OECD/DAC회원국 ODA 현황

   - 독일의 ODA 현황 ····· 65
   - 미국의 ODA 현황 ····· 68
   - 벨기에의 ODA 현황 ····· 70
   - 포르투갈의 ODA 현황 ····· 72

3) 선진국 원조동향 보고

   - 對모로코 미국 원조 동향 ····· 74
   - 서부발칸에 대한 EU의 원조 동향 ····· 76
   - 對에티오피아 일본 원조 동향 ····· 80
   - 뉴질랜드 원조정책 검토회의 결과 ····· 82

3. 수원국 원조동향
   - 동티모르 원조공여국 회의 결과 ····· 85
   - 몰디브 원조공여국 회의 결과 ····· 93
   - 파키스탄 개발포럼 개최 결과 ····· 97
   - 2005년 필리핀 개발포럼 및 제26차 필리핀 원조공여국 회의 결과 ····· 100

Ⅲ. 기타

1. 지역연구
   - 對필리핀 원조 동향과 KOICA의 협력방향 **최성호**_한국국제협력단 필리핀사무소장 ····· 107
2. 개발협력 관련 국제기구 소개
   - Colombo Plan **김태형**_Colombo Plan 민간부문개발프로그램 과장 ····· 117
3. 개발NGO 소개
   - 한국보건복지협회 **윤영옥**_국제협력팀 ····· 128

I. 논단

캄보디아에서의 달러 사용의 득과 실

강 기 원 / 서원대학교 교수

요 약

캄보디아는 1992년 달러화를 통화로 사용하기 시작한 이래 12년이 지난 2004년 말 현재 금액으로 볼 때 총통화 중 달러화가 점하는 비중은 약 70% 이상에 이르고 있다. 이 때문에 캄보디아 정부는 상당부분 통화발행 권리를 상실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잃어버린 가치는 2004년 말 현재 682백만불에 이른다.

한편 매년 경제성장에 따른 통화증가분 발행 권리의 상실 및 외화를 보유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상실 등으로 61백만불 상당의 가치도 추가적으로 잃고 있다.

한편 캄보디아 정부는 상당부분 통화발행권 상실로 인하여 화폐정책과 재정정책 그리고 대외무역정책을 구사할 수 없는 등 거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고 나아가 소득분배의 불균형 심화까지도 참아야 하는 반면 달라화를 통용시킴으로써 물가 안정과 통화위기 시에 국가부도 위험의 감소와 같은 정도의 혜택을 얻고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달러 사용에 따른 손실이 혜택보다 큰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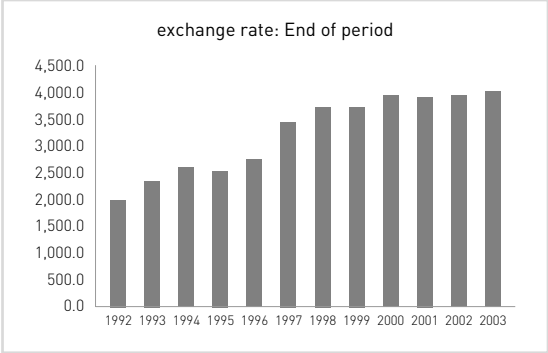
한편 달러화를 통화로 사용하는 것을 억제하는 방법에는 달러화 통용을 법으로 금하는 정책과 달러화의 통용은 허용하되 법으로 달러 사용 편익보다 달러 사용에 수반되는 비용을 더 크게 만드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국민 전체의 84% 이상이 리알화를 사용하고 있는 캄보디아 현실을 감안하면 법으로 달러 통용을 금해도 소수의 수입업자를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통화로 달러화를 쓰지 못한다는 사실에 불편을 느끼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Ⅰ. 서 론

1960년대 아시아 국가로서는 부유한 나라 중에 하나였던 캄보디아는 전쟁과 내전으로 수백만 명이 사망하는 30여년간의 격동기를 거치면서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궁핍한 나라 중의 하나가 되었다. 그러나 1998년 연립정부를 구성하여 정치적 안정을 되찾은지 만 6년이 지난 현재 캄보디아인들은 새로운 경제적 번영을 위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이 글은 캄보디아 정부가 화폐정책과 재정정책 그리고 대외무역정책 등을 실시하면서 경제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해서는 현재 통화로 자국통화인 리알화와 함께 달러를 사용하고 있는 데에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고, 리알화 전용의 경제로 복귀하는 것이 캄보디아에 유리할지 아니면 이런 문제를 안고서도 달러화를 통화로 사용하여 경제 안정을 기하는 것이 유리한지를 캄보디아 정부가 판단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쓰여졌다. 이를 위해서 달러를 통화로 사용함으로써 캄보디아가 치러야 하는 비용으로 통화발행권 상실, 화폐정책 상실, 대외경제정책 상실과 소득분배의 왜곡 심화를 논했고 이익으로는 물가 안정과 통화위기때 국가부도 위험의 감소 등을 검토했다. 그리고 달러 사용을 금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하였다. 이 글은 통화에서 달러화의 사용비중, 달러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과 이익, 탈 달러화 경제를 위한 조치, 그리고 결론으로 구성되었다.[1)]

Ⅱ. 달러화의 사용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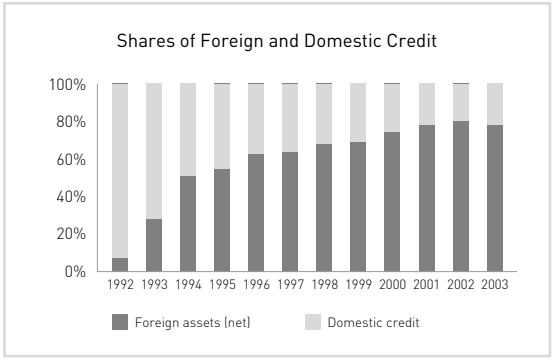


1991년 공산체제 붕괴 후 캄보디아 경제가 자유경제체제로 편입되던 1993년의 캄보디아 GDP는 2,891.8백만불이었다. 이로부터 10년이 지난 2004년 캄보디아의 명목 GDP는 1993년보다 51%가 증가한 4,390.6백만불을 기록했다.[2)] 그러나 이를 캄보디아 통화 리알화로 평가하면 캄보디아 경제는 지난 10년 사이 3배 이상 성장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화폐단위에 따라 차이가 나는 까닭은 리알화의 가치가 1달러당 1992년 말 2000리알에서 1997년에는 3500리알, 그후 2004년에는 4000리알로 절반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3)] 지난 10년 사이 캄보디아 통화가

1) 이 글은 필자가 2004년 12월 20일부터 2005년 2월 20일까지 한국국제협력단에서 파견한 캄보디아 총리 경제자문관으로 캄보디아 총리실에서 근무할 때 쓰여졌다. 총리실의 H.E. Sok An 부총리, H.E. Yim Molla 장관 이하 총리실 직원들의 협조에 감사드린다. 특히 이 글을 쓸 때 많은 조언을 해준 타나 차관에 감사한다.

2) 1997년부터 2003년까지의 GDP성장률이 계속된다는 가정하에 2004년 GDP값을 추정했다. 자료는 ADB의 Key Indicators 2004 (www.adb.org/statistics) May 2004 참조.

그 가치의 절반을 상실하지 않았으면 캄보디아는 지금 1인당 국민소득에서 베트남 수준을 추월하고 있을 것이다.[4] 그러나 이는 90년도 중반까지 일부 지역에서 내전이 지속하는 등 정치적 혼란을 겪은 것을 감안하면 그 기간동안 캄보디아 경제는 놀랍게도 상당한 안정을 유지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어떻게 캄보디아 경제가 그런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나? 이는 주로 캄보디아 정부의 노력과 국제기구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었겠지만 통화로 달러화가 리알화와 함께 통용된 사실에서도 그 상당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캄보디아에서 달러화가 사용된 것은 1988년부터 정부가 국내에서 국제기관 직원들을 비롯한 외국인들의 달러화 사용을 묵인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되었다.[5] 특히 유엔의 지원하에 선거를 치른 후인 1993년부터는 많은 외국인이 캄보디아를 방문하면서 캄보디아 국내에서 사용되는 달러화의 규모가 급속히 늘었다. 그리고 캄보디아인들도 달러화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1992년에는 순외화자산과 국내신용의 합계에서 순외화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8%에 불과했다. 그러던 것이 1993년에는 25%, 94년에는 50%로 증가했고 2000년에는 74.1%, 2003년에는 77%까지 늘었다.[6] 현재에는 통화 사용 금액으로만 보면 외국화폐인 달러가 캄보디아의 통화이고 정작 캄보디아 통화인 리알화는 지방과 도시의 중하층 계급에서 쓰이는 보조화폐로 전락한 셈이다.

그럼 캄보디아 경제에서 얼마나 달러화가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가? 즉 총통화(M2)에서 외국통화 비중은 얼마가 되는가? 이 비중이 순외화자산과 국내신용의 합계에서 순외화자산이 차지하는 비중과 같다고 가정하면 캄보디아에서 달러화가 얼마나 통용되고 있는지 쉽게 계산할 수 있다.[7] 1992년에는 캄보디아 총통화 124백만불 중에 외국통화는 10백만불에 불과했다. 이것이 2003년에는 총통화의 77%를 점하는 642백만불까지 늘어났다.[8]

---

3) 캄보디아 통화 리알화의 평가는 1986년 1달러당 19.6리알에서 2003년에는 무려 3,973.3리알로 폭락했다. 자료의 제약으로 기간 평균값을 취했다. ADB, Key Indicator 2004, www.adb/statistics 참조.
4) 2003년 1인당 국민소득이 캄보디아는 314불, 베트남은 478불이었다. ADB, Key Indicator 2004, www.adb/statistics 참조.
5) 캄보디아 총리실의 OBESE에 근무하는 타나 차관의 설명 참조.
6) 캄보디아인들은 화폐가치의 저장을 금에서 사용과 보관이 편리하고 이자가 붙는 달러표시 재산으로 바꾸기 시작한 것으로 해석된다.
7) 통상 자료의 부족으로 보통 총통화 중에 외화자산의 예금 비율을 총통화 중에 외국통화의 유통비율(이 비율로 계산하면 2002년 69.3%가 된다)로 잡고 있으나 이 경우에는 시중에서 거래되는 외국통화가 계산에서 누락되는 결점이 있다. 여기서는 순외화자산과 국내신용의 합계에서 순외화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총통화 중 외국통화의 비중(이 비율로 계산하면 2002년 79.9%가 총통화 중 외국통화의 비중으로 된다)으로 간주했다. Dollarization of Cambodia, http://www.moc.gov.kh/intergrated_framework/component_report_b3.htm, 참조.
8) 순외화자산과 국내신용의 합계에서 순외화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총통화에서 달러화가 사용되는 비중이라고 가정하여 계산한 값이다. 2004년에는 886백만 불의 총통화 중에 달러화가 681백만 불이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2004년 총통화(M2)는 1997년부터 2003년의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회귀분석)하였고 외화사용비중은 2003년 순외화자산과 국내신용의 비중이 2004년에도 변하지 않았다고 가정하였다.

여기서 하나의 의문이 발생한다. 이렇게 총통화 중에 외국통화인 달러화의 사용비중이 높아도 괜찮은가? 캄보디아 정부는 국내에서 외국통화가 지배통화가 되고 있음에도 이런 현상을 그대로 방치해도 좋은가? 아니면 캄보디아 국내에서 달러화 사용을 억제해야 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외화의 국내 통용을 허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과 이익을 계산할 수만 있으면 쉽게 얻을 수 있다.

Ⅲ. 달러 사용의 비용과 이익[9)]

1. 비용

1) 통화발행권 상실

가. 통화발행권의 상실 1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의 통화를 함께 사용한다는 것은 자국의 통화발행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것이다. 이는 곧 자국에서 외국통화를 사용하는 정도만큼 자국의 독립적인 금융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집행 및 외환과 환율제도를 통한 대외 경제정책의 집행을 제약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외국통화의 통용을 허용함으로써 한 국가가 경제 ·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잃는 정도에 비례하여 금액으로 따질 수 없을 정도의 거대한 경제 ·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통화발행권 일부의 포기에 따른 직접적인 비용은 외국통화를 사용함에 따라 자국통화를 발행하지 못하는 총액에서 그 총액에 해당하는 통화를 제조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제한 잔액이다. 가령 종이와 인쇄 비용으로 1리알을 들여 1000리알짜리 화폐를 한 장 발행했다면 이 경우 1000리알짜리 화폐 한 장을 발행하는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은 999리알이 된다.[10)]

통화발행권은 경제 · 사회적 주권을 갖는 모든 국가의 특권으로서 지폐를 발행하는 나라로 하여금 통화를 발행하는 규모에 비례하는 거대한 사회적 저축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이들 국가들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대한 사회적 저축을 자국의 경제개발을 위해 활용할 수 있다. 캄보디아는 현재 총통화 중 70% 이상 자국통화인 리알화 대신 외국통화를 (미국 달러화를 주축으로 일부 태국의 바트화와 베트남의 동화도 통용됨) 사용하고 있다. 어리석게도 캄보디아는 자국에서의 거대한 사회적 자본 축적의 기회를 상실하고 자기 나라보다 잘 사는 미국(일부 태국 그리고 베트남)의 자본 축적을 돕고 있다.

그럼 통화발행권을 행사하지 못함으로써 축적하지 못한 저축의 규모는 얼마나 될까? 2004년 말 캄보디아의 총통화는 886.3백만불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총통화에서 외국통화 비중이 2003년과 같

9) Jayant Menon (1998) 참조.
10) 여기서는 통화발행에 따른 비용은 없다고 가정했다. 통화발행 비용은 통상 통화 액면가에 0.1%도 안 된다고 한다. Dollarization http://wfhummel.cnchost.com/dollarization.html 참조.
11) 2003년 말을 기준으로 한 순외국자산이 순외국자산과 국내신용의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총통화에서 외화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가정했고 그 비율이 2004년 말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가정했다.

이 76.9%라고 가정하면[11] 2004년 말 현재 통화발행권리를 상실하여 축적하지 못하는 국내저축의 총액은 681.8백만불에 이른다.

나. 통화발행권의 상실 2

통화발행권 포기에는 또다른 손실이 따른다. 경제가 성장하면 그에 따라 소요되는 통화규모도 늘어나 그 늘어난 부분만큼 인플레이션 없이 통화발행이 가능해진다. 그런데 외국통화가 상당부분 통용되기 때문에 그만큼 신규 통화 발행에 제약이 따른다. 가령 캄보디아 경제가 연 6%의 성장을 한다면[12] 통화량도 그에 따라 증가시킬 수 있다.[13]

캄보디아에서 외국통화가 통용되지 않는다면 캄보디아 정부가 경제성장에 따라 2005년 추가로 발행할 수 있는 통화량은 53.2백만불(이는 2004년 추정된 총통화량 886.3백만불의 6%)이 된다. 그러나 캄보디아의 경우 총통화 중 자국통화가 점하는 비중이 불과 23%이므로[14] 캄보디아 정부는 리알화를 12.2백만불 정도만 발행할 수 있고 41백만불의 통화발행권리는 자동적으로 외국 정부의 몫으로 넘어간다.

다. 통화발행권의 상실 3

통화발행권 포기에 따른 손실에는 잃어버리는 이자수익을 빼놓을 수 없다. 가령 캄보디아에서 달러화가 통용되지 않는다면 현재 통용되는 외화는 중앙은행에 집결될 것이다. 중앙은행은 이를 미국의 재무성증권을 산다거나 기타 이자가 붙는 채권 형태로 보유하거나 저렴한 이율로 빌려줄 수도 있다. 현재 캄보디아의 이자율은 연 15~18%(시중에는 월 5%에 이른다)에 달한다.[15] 그러므로 최소 년 3%의 이율 이상은 확보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통화발행권 포기에 따른 기회비용의 이자 손실액은 2004년에는 20.4백만불(=681.8백만불*0.03) 이상이 된다.

라. 통화발행권 상실 종합

앞의 내용을 정리하면 2004년 말 현재 통용되는 외국통화 때문에 잃어버리는 국내저축의 총액이 681.8백만불, 통화증가율이 6%라고 가정했을 때 2005년에 추가로 발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러를 사용함으로써 발행하지 못하는 통화의 규모가 41백만불, 그리고 달러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보유하고 있을 외화에서 얻을 수 있는 이자수입이 3%의 이자율을 가정했을 때 20.4백만불이 된다. 그러므로 2004년 말 현재 국내저축 상실액이 681.8백만불, 이에 더하여 매년마다 계속 61.4백만불(2004년 기준)씩이 캄보디아 정부의 통화발행권 상실에 따른 손실이다.[16]

---

12) GDP의 증가율이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5%에서 7% 수준에 이르고 있다.
13) 일반적으로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통화의 회전속도가 떨어지고 통화량은 경제성장율보다는 적게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여기서는 통화의 회전속도는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통화량도 경제성장율과 같은 비율로 증가한다고 가정한다.
14) 2005년 리알화가 총통화에서 점유하는 비중이 2003년의 비중과 같다고 가정했다.
15) 캄보디아 총리실 타나 차관과 프놈펜 소재 ABA은행의 조재완 행장에 문의.
16) 아르헨티나의 경우는 1999년 GDP의 4%에 해당하는 150억달러의 화폐발행권의 손실과 매년 GDP의 0.3%에 달하는 10억달러 상당의 화폐발행 기회를 상실했다. Andrew Berg, Eduardo Borensztein, "Full Dollarization, the pros and cons," seigniorage, http://www.imf.org/external/pubs/ft/issues/issues24/index.htm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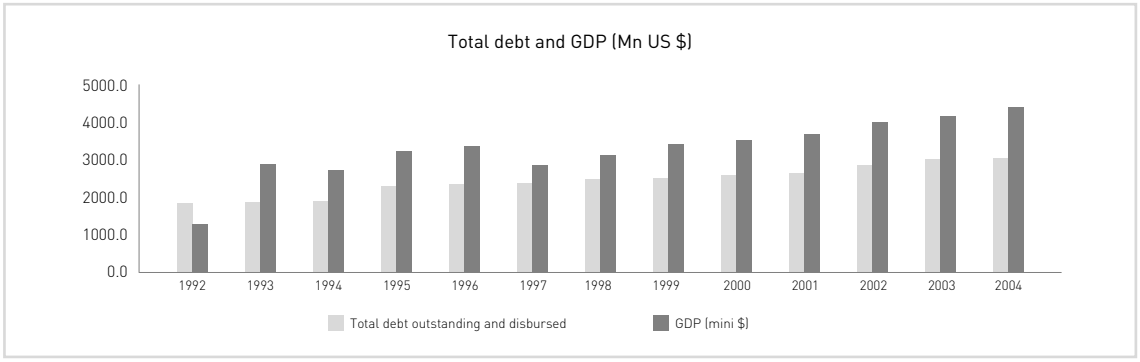
2) 화폐정책 수단의 상실

캄보디아에서 달러화가 통용됨으로써 캄보디아 정부는 화폐정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없다. 중앙은행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통화 공급 조절을 통해 화폐 유통량을 통제하는 일이다. 이런 통제를 통해 중앙은행은 물가와 이자율의 안정 및 경제발전을 도모한다. 그런데 자본의 유출입이 자유롭고 외화가 그대로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캄보디아에서 화폐공급의 증감은 외화의 유출입과 일치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캄보디아 중앙은행이 리알화 공급의 통제만으로 통화의 유통량을 조절할 수 없다. 금융시장이 발달되어 있지 못해 캄보디아에서는 채권시장에서 공채를 사고 파는 공개시장조작은 정책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 또한 통화가 금융기관을 통해 공급되거나 유통되지 못함으로써 은행의 법정지불준비율을 조정하는 통화조절 수단도 사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통화관리를 위한 각종 화폐정책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캄보디아는 많은 대가를 치르면서 달러화 유통과 상품 수출입의 자유화를 통해 물가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캄보디아에서는 통화관리를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물가 안정을 기할 수 있는가?

일반적으로 외화가 통화로 유통되고 있는 경제에서는 외화의 유출은 바로 통화의 감소로 디플레이션을 야기시키고 외화의 유입은 통화의 증가로 인플레이션을 일으킨다. 그러나 이는 외국으로부터 물품 수입이 억제되어 있는 나라의 이야기다. 국내 산업화의 정도가 낮아 상품의 해외의존도가 높고 상품의 수출입이 자유롭게 허용되는 캄보디아에서는 캄보디아로 외화가 유입되면 바로 수입이 늘어나 물자공급이 늘면서 물가가 안정되고 외화는 유출된다. 그래서 물가 안정 속에 캄보디아 경제의 외형은 커진다. (경제성장) 한편 외화유입이 줄어들면 바로 수입이 줄어들어 물자공급이 줄어든다. 외화유입 감소로 발생하는 통화 가치의 상승은 상품의 수입 감소로 상품가치 상승과 상쇄된다. 그래서 이때에도 물가는 안정되지만 캄보디아 경제의 외형은 줄어든다. (경제수축) 국내에서 외화를 자유롭게 사용하게 함으로써 중앙은행은 물가안정을 위해 통화조절을 할 수도, 할 필요도 없겠지만 캄보디아 국민이 치러야 하는 희생은 엄청나다. 물가 안정을 대가로 국내 산업의 육성이 거의 불가능해지고 경제의 성장과 수축이 도입되는 외자의 규모에 비례하게 된다. 그래서 캄보디아의 경제가 성장하면 외채도 누적적으로 증가하게 된다.[17]

이는 아래 그래프에서도 확인된다. 1993년 이래 GDP가 2891.8백만불일 때 외채규모는 1820.5백만불이었다. 그러던 것이 2003년 GDP가 44.5% 증가한 4179.2백만불일 때 외채규모는 63.6% 증가한 2979.2백만불로 늘었다. 이런 상황에서는 경제가 성장해도 내실있는 성장이 되지 못해 실업과 빈곤문제를

17) 1993년과 1997년의 경우만 제외하고 캄보디아의 경상수지는 계속 적자 상태에 있었다. 1998년과 1999년에는 상당한 규모의 직접투자로 외화가 도입되었으나 경상수지 부족분을 채우기에는 부족했다. 외채규모가 계속 늘면서 캄보디아 경제는 확대되고 있다. 문제는 외채규모가 늘면서 생산능력도 확대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데 있다.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캄보디아는 화폐금융정책을 구사할 수 없음으로써 금액으로 따질 수 없는 거대한 경제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다.

3) 대외경제정책 수단의 상실

실제로 달러화와 리알화의 환율이 1달러에 3000 리알인데도 불구하고 현실 환율을 1달러에 4000리알로 유지함으로써 수출을 돕고 수입을 억제하는 식의 환율정책을 캄보디아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수입품의 가격이 달러 표시로 수입되어 달러 표시로 팔리고 수출품도 달러 표기의 원료로 제조되어 달러 표기로 수출되는 현실에서는 달러와 리알화 간의 환율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달러화가 그대로 캄보디아에서 통용되는데 무엇 때문에 달러화와 리알화 간의 환율을 따질 것인가? 환율이 있다면 달러 대 달러의 1대 1 환율이 있을 뿐이다. 그럼 달러화와 리알화 간의 환율은 무엇인가? 이 비율은 리알화가 통용되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환율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외화의 통용 비중이 총통화에서 70% 이상되는 캄보디아에서는 달러화와 리알화간의 비율은 통상 대외적인 환율로서의 의미를 대부분 상실한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혹자는 1997년 아시아 외환시장 위기때 캄보디아는 달러를 쓰기 때문에 통화위기를 겪지 않고 외환시장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외환시장 자체가 없거나 있어도 외환시장으로서의 의미를 상당부분 상실한 캄보디아의 현실에서는 너무나 의미없는 주장에 불과하다. 1997년 아시아 외환시장의 위기는 환율에 대한 투기자금의 공격이었는데 환율자체가 없는 캄보디아에 대해서는 투기자금이 공격할 대상조차 없었다.

환율제도는 한 나라 경제의 대외 창구다. 이는 대내외적으로 발생하는 수많은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고 조정한다. 그러나 달러를 통용함으로써 환율 자체가 없는 캄보디아에서는 모든 대내외적 충격은 바로 경제 전체의 충격으로 전달된다. 그래서 수시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충격으로 임금, 이자, 이윤 등 요소소득 간의 균형이 깨어지면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는 오랜 기간 동안 경제는 실업을 겪어야 하는 등 안정을 잃고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이처럼 환율이란 충격완화장치가 있었다면 겪지 않거나 겪더라도 피해의 정도를 낮출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캄보디아 경제는 피할 수 없다.

4) 소득분배의 왜곡 심화

달러가 총통화의 70% 이상 통화로 통용되는 캄보디아에서는 달러로 보수를 받는 사람과 리알화로 보수를 받는 사람들 사이에 소득분배의 왜곡이 크게 발생한다. 캄보디아 인구 중 소수만이 달러로 보수를 받는 상층의 소득계층을 이루고 있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리알화로 보수를 받는 중하층의 소득계층을 이루고 있다.[18]

이런 상황에서 리알화의 환율이 가령 1$당 4000리알에서 5000리알로 떨어졌다고 하자. 이때 리알화로 소득분배를 평가하면 리알화로 수입을 올리는 사람들의 보수는 변함 없고 달러로 수입을 올리는 사람들의 보수는 올라간다. 한편 달러로 평가하면 달러로 수입을 올리는 사람의 보수는 변함없고 리알화로 수입을 올리는 사람의 소득은 떨어진다.

한편 캄보디아는 현재 수출입거래와 관광수입 그리고 외국인투자와 차관사업 등 대외거래를 통해 경제 발전을 이루고 있다. 이런 대외거래에서는 통화로 주로 달러화를 쓰기 때문에 달러로 보수를 받는 사람들은 경제발전에서 혜택을 받기 쉬운 위치에 있는 반면 리알화로 보수를 받는 사람들은 경제발전의 혜택에서 다소 떨어진 위치에 머물게 된다. 그러므로 경제발전이 대외거래에 의존하고 달러와 리알화가 함께 통화로 사용되는 경제에서의 소득분배는 언제나 달러를 쓰고 달러로 보수를 받는, 상대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 그래서 달러의 사용은 소득분배의 불평등도를 더욱 높인다. 이에 따른 경제 · 사회적 손실 또한 적다고 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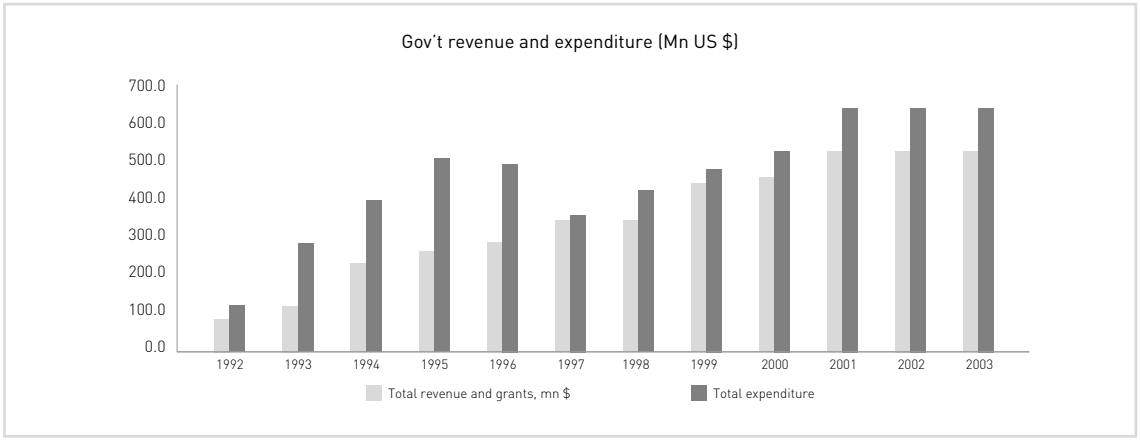
2. 이익

1) 물가 안정

지난 10여년 동안 캄보디아 정부의 재정은 매년 100백만불 이상 적자를 보이고 있고[19] 이 적자의 대부분을 외국으로부터의 차입으로 충당하고 있다. 그런데 가령 캄보디아에서 달러가 통용되지 않는다면 캄보디아 정부는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어렵게 세금을 더 걷거나 외국으로부터 차입을 늘리는 대신 손쉽게 통화를 발행하여 재정적자를 해소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재정수지가 적자를 보이는 국가에서는 언제나 통화발행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발발의 위험이 높다. 그렇지만 현재 달러를 통화로 쓰고 있는 캄보디아에서는 정부가 상당부분 통화발행권을 상실하고 있으므로 통화증발로 인한 인플레이션 발생 위험은 낮다. 한편 달러화의 통용과 함께 수입이 폭넓게 허용되고 있어 물가 안정도 확립되어 있다. 달러를 통화로 사용함으로써 또 국내 시장을 외국 기업들의 상품시장으로 내줌으로써 치르는 대가가 작지 않지만 물가 안정에서 얻는 경제 · 사회적 안정의 혜택도 크다.

---

18) 캄보디아 총인구에서 생존선 이하의 극빈자 비중은 1999년 조사에 의하면 36%라고 한다. Statistical Yearbook 2003, pp. 184, National Institute of Statistics, Ministry of Planning, Kingdom of Cambodia 참조.
19) 1992년부터 2003년까지 12년간 평균 115백만불의 재정적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달러화 자체가 인플레이션에 직면할 때는 캄보디아는 이를 피할 수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비상상황에 처해 급히 통화를 발행해야만 할 경우에도 캄보디아 정부는 통화발행을 할 수 없다는 것도 각오하고 있어야 한다.

2) 국가 부도 위험의 감소

캄보디아에서는 통화 중 70% 이상 달러화가 통용되기 때문에 달러화와 리알화와의 환율은 리알화가 통화로 통용되는 정도만큼의 의미만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1997년 아시아 각국이 통화위기를 맞을 때에도 리알화와 달러화 간의 환율 변동이 있긴 했지만 캄보디아 경제는 인도네시아나 태국, 한국에서처럼 격변을 겪지 않고 위기를 넘겼다.[20]

그럼 이런 안정의 근거는 어디서 온 것인가? 캄보디아에서 달러를 통화로 사용했기 때문인가? 아니면 리알화가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적기 때문인가? 대외지불보증금이 부족했을 때 시중에 있는 달러화가 대외지불보증금의 역할을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통화로 통용되는 달러화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 다만 경제가 위기에 처했을 때에만 부분적으로 대외지불보증금으로서 역할을 할 뿐이다. 이때에는 분명 달러를 통화로 사용함으로써 국가부도 발발의 위험을 줄이는 경제 · 사회적 혜택이 발생한다.

3) 종합

달러를 통화로 사용함으로써 캄보디아가 통화발행을 하지 못하는 손실은 구체적으로 2004년 말 현재 도합 681.8백만불에 매년 61.4백만불씩 추가 손실이 발생한다. 그리고 화폐정책, 재정정책과 무역정책

20) 1996년부터 1997년 1년 사이 리알화의 평가는 27.2% 절하되었고 그 영향으로 달러표시 명목 GDP는 13.5% 부(負)의 성장을 기록했다.

을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은 인플레이션 위험과 통화 위기때 국가부도의 위험을 줄이는 혜택을 훨씬 초과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 달러화를 통화로 통용함으로써 소득분배의 불평등도가 높아지는 문제까지 감안하면 달러를 통화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캄보디아 경제를 위해서는 더욱 유리한 것으로 사료된다.[21]

Ⅳ. 달러 유통 금지를 위한 방안

캄보디아에서 통화로 달러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이 혜택보다 크다면 어떻게 달러의 통화 사용을 금할 것인가? 여기에는 두 가지 방안이 있다.

첫째,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고 달러 유통을 금하는 내용의 경제조치를 법으로 공포하여 달러 유통을 금할 수 있다. 이 경제조치는 현재 캄보디아 주민의 84% 이상이 리알화를 쓰고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집행될 수 있다. 그리고 가장 단시일에 경제조치가 끝나므로 이에 따른 경제적 혼란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일부에서는 이때 발생하는 경제적 충격으로 인해 그러나 캄보디아에서 급격히 외화가 유출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현재 달러화의 유출입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캄보디아에 머물고 있는 달러화가 단지 통화로 통용되지 못할 뿐이며 리알화에서 다시 달러화로의 재교환도 언제나 보장되는 상황에서는 대규모의 달러화 해외 도피가 일어날 이유가 없다. 만약 달러화의 해외 도피가 일어난다면 리알화로의 교환과정에서 정체가 들어나는 것을 꺼리는 대규모 불법 자금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것도 불법이든 아니든 업무 무대가 캄보디아라면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 없다. 또 이 조치의 집행에 따른 제반 업무 가령 화폐의 제조, 금융통화위원회의 구성, 달러화를 리알화로 교환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이런 걱정은 부대적인 걱정으로 캄보디아 담당 공무원들의 세심한 주의가 있으면 해결되는 문제들이다.

둘째는 달러화의 사용을 허용하면서 달러화 사용에 따른 손실의 정도를 확대하는 방안이 있다. 가령 달러화를 통용할 때 시중에서는 그 환율을 1달러당 3600리알의 환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공표하고 외화 보유자가 거리의 통화교환소에서 교환하고자 할 때에는 3800리알, 은행에서 교환할 때에는 4000리알로 교환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도입할 수 있다. 또 세금이나 공공요금, 기타 정부 및 공공기관과의 거래에서는 필히 리알화 사용을 의무화하는 수단도 강구할 수 있다. 이런 방안은 정책수행에 충격을 줄이는 장점이 있지만 정책효과를 얻는데에는 다소간의 기간이 소요된다. 물론 이런 정책집행으로도 달러화의 사용은 상당부분 줄어들 것이다.

---

21) 2004년 캄보디아에 대한 IMF의 평가서에서도 통화로 달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캄보디아로서는 유리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IMF Concludes 2004 Article IV Consultation with Cambodia, Executive Board Assessment, Public Information Notice(PIN) No. 04/108 September 27, 2004 참조.

Ⅴ. 결론

1970년부터 30여년간 정치적 안정을 잃고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체제 실험장이 되었던 캄보디아에서는 국민들의 가치저장 수단이 1980년대에 금에서 1990년대에는 달러화로 바뀌었다. 그리고 90년대 이래 달러화의 사용이 급격히 늘어 2004년 말에는 총 통화에서 달러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70%를 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달러화를 통화로 사용하는 것은 정치적 안정을 잃었던 캄보디아에서 경제적 안정을 확보하는 하나의 좋은 수단이었다. 그러나 통화 안정의 대가로 캄보디아는 경제적 독립을 희생하고 통화발행권 행사를 유보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통화로 달러화를 리알화와 함께 사용하는 대가가 그로 인한 혜택을 상회하는지를 따져봐야 하는 시점에 도달했다.

정치적 안정은 경제개발의 기초가 된다. 2003년 선거를 치렀고 현재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어 새 출발을 한 캄보디아에는 정치세력간의 화해 시대가 열렸고 사회적 안정 속에서 경제개발을 할 좋은 기회를 맞고 있다. 이런 기회를 살려 캄보디아 정부가 경제개발을 하려면 필히 경제정책 수단들을 두루 갖추고 있어야 한다.

캄보디아 정부가 경제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통화를 발행하고 이를 근거로 신용을 창조하고 산업육성을 위한 금융지원 등 각종 화폐금융정책과 환율을 조절하여 수출 장려와 동시에 수입 억제를 유도하는 대외경제정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리고 거대한 농업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공공투자사업을 수행할 재정정책도 필히 구사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경제정책은 달러를 통화 중에 70% 이상 사용하는 경제에서는 채택할 수 없는 경제정책 수단들이다. 여기서 캄보디아 정부는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즉 경제정책적 수단을 상실하더라도 경제 안정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정치적 안정은 확보했으므로 경제적으로도 독립을 확보하여 외화를 통화로 사용하는 것을 금하고 리알화만을 사용하는 경제로 복귀하여 상기의 모든 경제정책적 수단을 확보할 것인가? 이 선택은 캄보디아 정부가 앞으로 국가 운영에 어떤 각오를 갖고 있는가와 향후 정국에 대해 어떤 상황판단을 하느냐에 전적으로 달려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좋든 싫든 캄보디아 국민에게 돌아간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달러를 통화로 사용하는 비용이 그 혜택을 상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IMF 조사단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다만 1998년까지 정치적 안정을 확보하지 못했던 캄보디아 정부가 앞으로도 정치적 안정에 의문을 갖는다면 당분간 달러화를 통화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향후 정치적 안정을 기할 자신이 있고 고용확대와 경제개발을 위해 경제정책적 수단을 확보하고자 한다면 신속히 달러를 통화로 사용하는 것을 금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조폐공사 설립과 같이 화폐발행을 위한 각종 준비는 물론 금융통화위원회를 설치하여 화폐량과 금융기관 관리를 위한 체제를 두루 갖추고 집행체제를 갖춰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Andrew Berg, Eduardo Borensztein (2000)"Full Dollarization The Pros and Cons," 2000 International Monetary Fund,
〈http://www.imf.org/external/pubs/ft/issues/issues2i/index.htm〉

Central Information Agency,"Cambodia," The World Factbook
〈http://www.cia.gov/cia/publications/factbook/geos/cb.html〉

Definition of Seigniorage, reffered to 〈http://wfhummel.cnchost.com/seigniorage.html〉

Definition of Dollarization, reffered to 〈http://wfhummel.cnchost.com/dollarization.html〉

International Monetary Fund (2004), "IMF Concludes 2004 Article IV Consultation with Cambodia," 〈http://www.imf.org/external/np/sec/pn/2004/pn04108.htm〉

Ministry of Commerce (2005), "Dollarization in Cambodia"
〈http://www.moc.gov.kh/intergrated_framework/component_report_b3.htm〉

Menon, Jayant (1998) "Dollarisation in Cambodia," Cambodia Development Review 1998/2(June)

National Institute of Statistics (2004), Statistical Year Book 2003, Ministry of Planning, Cambodia

Samdech Hun Sen (2004), The Rectangular Strategy: Economic Policy Agenda of the Royal Government of Cambodia, Addressed by Samdech HUNSEN, Prime Minister of the Royal Government of Cambodia on 〈〈Rectangular Strategy〉〉 for Growth, Employment, Equity and Efficiency, First Cabinet Meeting of The Third Legislature of the National Assembly at The Office of the Council of Ministers, Phnom Penh, 16 july 2004.

Sophal Ear (1996), "dollarization, Monetary Independence and Inflation," The CICP Newsletter, Issues No. 15 & 16, June-July 1996,
〈http://www.csua.berkeley.edu/~sophal/cicp1a.htm〉

Zeljko Bogetic (1999), "Official or full dollariztion: Current Experiences and Issues," International Monetary Fund, (bogetic@imf.org)
〈http://www.geocities.com/Eureka/Concourse/8751/edisi04/bogdllr.htm〉

한국국제협력단 프로젝트 건축분야 CM제도 활용현황과 발전방향

고 영 배 / 한국국제협력단 IT협력팀

I. 한국국제협력단의 CM제도 도입배경

근래에 공공기관에서는 건설분야의 전문기술과 경험을 보유한 전문인력의 확보가 힘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서 전문 건설관리 인력이 필요하다. 특히 지방자치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대형공사 발주가 증가하고 있고 조달청을 비롯한 중앙관처에 비해 건설관리 전문인력이 극히 부족한 지방자치단체 등의 발주자는 건설사업관리(CM)사의 사업관리기술을 이용하여 소수의 인력과 조직만으로도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우리 건설산업은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시공위주로 발전되어온 결과, 선진국과 대비하면 기획능력, 설계능력, 시공능력, 공사관리능력, 유지관리능력 등 모든 면에서 고부가가치 기술수준이 낙후되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건설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생산체계의 선진화가 시급하다는 것이 건설업계의 지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건설산업이 시공 위주에서 탈피해 기획 · 설계 · 시공 등의 종합적 관리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CM)를 활성화하는 한편 일반과 전문업체 간의 겸업 제한을 완화하고 의무하도급 제도를 폐지, 건설공사의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건설사업관리(CM)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준비작업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을 96년 12월 입법하였고 '건설기술관리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CM제도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였다.

이러한 분위기에 발맞추어 한국국제협력단 역시 2004년 '과테말라 기술교육훈련원 건립사업', '한 · 인니 스포츠교류센터 건립사업', '필리핀 다바오시 직업훈련원 건립사업'의 3개 사업에서 처음으로 CM 용역을 일괄 계약하여 활용하고 있다.

대외무상협력사업의 일환으로 개발도상국가에 지원 중인 한국국제협력단의 프로젝트사업은 교육 · 훈

련, 보건 · 의료, IT분야 등에서 특정 개발 목표달성을 위해 건물, 시설물 및 기자재 등의 물적 협력수단(hardware)과 전문가파견 및 연수생초청 등의 인적 협력수단(software)을 결합하여 수원국에 지원하고 있다. 특히 1991년 협력단 설립 당시 프로젝트 사업 실적은 총 8개국 8개 사업 596백만원 규모에서 2003년 22국 1기구 34개 사업 22,935백만원으로 설립 당시와 비교하여 프로젝트 사업비는 38배 정도 증가하였고 건물신축 또한 프로젝트 구성의 주요 요소로서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협력단 내에는 건축분야 프로젝트를 중점적으로 관리할 건설관리 전문인력이 부족하므로 건물신축 분야에 CM제도를 도입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 제고, 공기단축 및 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이하에서는 CM제도의 개념을 자세히 살펴보고 협력단에서 활용 중인 CM제도를 평가하여 향후 바람직한 CM 운용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Ⅱ. CM제도의 정의 및 유형

1. CM의 정의

1) 일반적 정의

CM은 건설공사의 기획단계부터 설계, 계약, 시공, 시공 후 단계까지 전 건설공사의 생명주기 동안 시행하는 종합적인 건설관리업무를 의미하며 공정관리(Time & Scheduling Management), 원가관리(Cost Management), 품질관리(Quality Management) 등이 일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현재의 책임감리가 시공단계에 국한되어 있는 점에서 시공단계의 CM업무는 현재의 책임감리업무를 포함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현재의 설계 · 시공 간의 부조화를 CM업자가 공사 기획단계부터 책임을 갖고 참여함으로써 조화로운 설계 ·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2) 공사수행체계 또는 계약방식으로서의 CM

하나의 건설공사가 완공되기까지에는 다양한 형태의 참여자들이 관련된다. 이때 이들의 관계는 계약에 의해 규정되며 특히 발주자가 이들 중 누구와 어떤 형태의 계약을 체결하는가에 따라 해당 공사의 유형이 구분된다. 예를 들어, 발주자가 설계자와 시공자를 따로 선정, 계약하여 공사를 수행하면 가장 일반적인 또는 전래적인 공사수행체계라 하여 'General Contract'라 칭하고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사업자를 선정하여 공사를 수행하면 turn-key 또는 dsign-build contract가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발주자가 전반적인 공사계획, 공사참여자들의 관리와 조정, 공사관리 활동 등을 특정 전문회사에게 조언을 의뢰하거나 전담시켜 공사를 수행할 때 이를 'CM(Construction Management)공사'라 한다.

3) 관리행위 주체로서의 CM

CM이 construction management company를 의미한다면 발주자와 계약을 맺고 있는 전문회사를 말하며, construction manager를 의미할 경우에는 CM 전문회사를 대표해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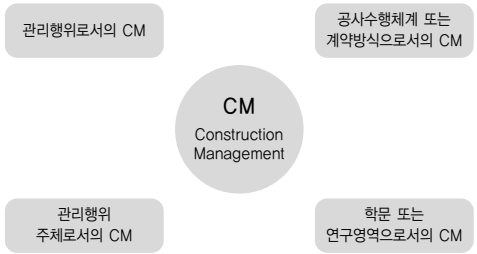
자, 또는 공사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자가 되며 후자의 경우에는 CM업자의 소속이 CM 전문회사, 건설회사, 심지어 발주기관이 될 수도 있다.

4) 학문 또는 연구영역으로서의 CM

구미 건설 선진국들에서는 국내와 달리 건설관련 학과들이 전문분야뿐만 아니라 건설활동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분야가 하나의 학문으로 정립되어 있다. 예를 들어, 미국대학의 경우 공사견적을 비롯해 공정관리, 원가관리, 품질관리 등의 세부적인 관리부문에서부터 회사나 조직 차원에서의 경영부문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교과목들이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Project Management 또는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분야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시공법, 자재, 장비 등을 다루는 hardware부문은 물론 관리활동의 효율화, 컴퓨터 활용, 회사운영의 전략, 국가 건설정책 및 제도, 국가 건설경제 등 건설과 관련된 software부문들 모두가 대상이 된다. 이때의 CM은 건설관리 또는 건설경영 등으로 해석할 수 있다.

〈CM의 정의〉



2. CM의 계약형태별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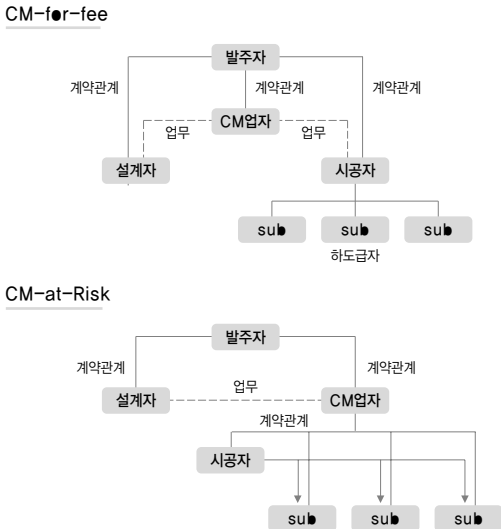
1) CM-for-Fee(순수형 CM)

CM업자가 발주자의 대리인(agency) 역할을 수행하는 형태로서 시공에 대한 책임은 없으며 기획 · 설계 · 시공단계의 총괄적 관리업무만을 수행함을 의미한다.

순수형 CM 계약방식에서 CM업자의 역할은 현재의 책임감리업자와 유사한 기능을 갖게 되나 차이점은 공사 기획단계부터 시공 후 단계까지 전 과정을 CM업자가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며 이로써 발주자의 의도가 설계 · 시공 과정에 유기적으로 전달되도록 한다.

또한 설계, 시공업자의 선정과정에도 발주자에게 조언을 하게 되며 Fast-tracking에 의한 설계완료 이전에 단계별 분할 시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CM업자의 역할이 된다.

〈CM의 계약방식〉



〈CM 계약방식에 따른 장·단점〉

계약형태	기본개념	장점	단점
CM-for-Fee	CM업자는 자신의 업무에만 책임을 진다.	• 순수형 CM • CM업자는 공사결과에 대한 책임 없음 • Fast-Track 시공-공기 단축	• CM업자의 책임감 부실 우려 • 시공에 책임이 없으므로 관리의 한계성
CM-at-Risk	시공상의 위험, 비용 추가에 대한 책임을 진다.	• 위험형 CM • CM의 적용효과 극대화 • CM의 기술 개발 축적 가능	• 발주자의 시공에 대한 경험습득 저해 • 설계, 시공의 통제 어려움

2) CM-at-Risk(위험형 CM)

위험형 CM은 CM업자가 관리적 업무 외에 시공까지 책임지는 형태로서 부실시공에 대한 위험성을 책임져야 하는 계약방식이다. 현재의 turnkey 방식과 차이점은 설계는 별도의 설계자가 하고 관리업무 및 시공을 CM업자가 수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이때도 CM업자는 설계과정에서 발주자의 의도가 적용되도록 설계자와 긴밀히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다.

CM업자는 시공을 책임지게 되므로 발주자와 계약시 관리업무 및 시공 전체에 대한 가격으로 계약을 하게 되며 이러한 의미로 최고가 보증형(great maximum price - GMP) CM이라고도 하며, CM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제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CM업자의 이윤추구로 인한 부실시공 우려는 여전히 상존하며 CM업자의 도덕성, 시공능력 등이 중요한 변수가 된다.

Ⅲ. 한국국제협력단의 CM제도 활용현황

2004년부터 한국국제협력단은 프로젝트사업 건물신축 분야에서 CM제도를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건설분야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CM제도를 활용 중인 프로젝트는 8개국 9건(필리핀 2건, 베트남 1건, 라오스 1건, 요르단 1건, 멕시코 1건, 과테말라 1건, 인도네시아 1건, 이디오피아 1건)으로서 모두 CM-for-Fee방식으로 용역계약을 하였고 한미파슨스, 명승건축사사무소, 유일엔지니어링에서 동 용역들을 수행 중에 있다.

이중 필리핀에서 수행 중인 '필리핀 IT훈련원 건립사업' 의 경우, 필리핀 정부가 최근 자국 내 IT산업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역할 및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보통신이 향후 국가발전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하여 동 프로젝트 사업을 한국정부에 요청하였다. 2003년 1월 외교통상부로부터 신규사업 승인을 받음으로써 본격적으로 동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3년간 5백만불의 예산을 투입하여 2005년 완료할 예정이다. 동 사업을 통해 수원국의 IT교육 · 훈련시설 구축을 지원하고 인적자원 개발여건을 개선시킴으로써 HRD(Human Resource Development)능력 제고 및 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CM제도 활용 프로젝트〉

프로젝트명(기간)	사업비	CM 용역수행사	CM 용역방식
필리핀 IT훈련원 건립사업(2003년~2005년)	5,000천불	한미파슨스	CM-for-Fee
한-베트남 친선 IT대학 건립사업(2004~2007년)	10,000천불	한미파슨스	CM-for-Fee
라오스 전자정부구축 지원사업(2004년~2005년)	950천불	명승 건축사 사무소	CM-for-Fee
요르단 보건소 건립사업(2004년~2006년)	3,800천불	한미파슨스	CM-for-Fee
멕시코 유카탄주 병원건립사업(2004년~2005년)	1,000천불	유일엔지니어링	CM-for-Fee
과테말라 기술교육훈련원 건립사업(2003년~2004년)	1,200천불	한미파슨스	CM-for-Fee
한·인니 스포츠교류센터 건립사업(2003년~2005년)	2,800천불	한미파슨스	CM-for-Fee
필리핀 다바오시 직업훈련원 건립사업(2003년~2005년)	5,000천불	한미파슨스	CM-for-Fee
이디오피아 참전용사마을 학교 건립사업(2004년~2005년)	800천불	한미파슨스	CM-for-Fee

동 사업은 시설지원과 물자지원 및 기술적 협력수단을 모두 지원하는 종합지원 형태로서 건축, 기자재 지원, 연수생 초청, 전문가 파견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중 건축분야는 Quezon에 연면적 3,000㎡의 3층 건물시공, Bulacan에 연면적 800㎡의 2층 건물시공 및 CM용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CM용역은 2004년 5월, 2단계 경쟁 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 '한미파슨스'가 낙찰되어 용역을 수행 중에 있다. 2004년 9월에는 현지 입찰공고를 통해 필리핀에 진출하여 있는 국내 종합건설회사인 '경남기업'에 낙찰되었고 2004년 10월, 11월에 Quezon과 Bulacan에서 기공식을 개최한 후, 현재 본격적인 건물 신축공사가 원활히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건설프로젝트의 진행과정에서 전문적인 CM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안전하고 신속한 사업관리 및 최적 품질확보, 경제적인 행정력 운용 등의 장점을 얻을 수 있으므로 향후에도 CM제도 활용은 계속 증대되리라 본다.

Ⅳ. 한국국제협력단의 CM제도 발전방향

전술한 바와 같이, 현재 한국국제협력단의 프로젝트 수행 시 건설분야의 경우에는 CM사가 기획 · 설계 · 시공단계의 총괄적 관리업무만을 수행하는 CM-for-Fee 방식으로 용역을 주어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 공기단축, 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으나 향후 한국국제협력단의 건설프로젝트 품질 향상과 국내 건설산업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CM사가 관리적 업무 외에 시공까지 책임지는 계약방식인 CM-at-Risk방식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이 경우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 CM-at-Risk방식을 도입함으로써, 건물에 대한 품질 및 유지보수 능력을 높일 수 있다.

건축 포함 프로젝트의 경우, 해외 개발도상국가에 건물을 지어주는 신축공사가 많고 건물의 규모가 국내 건설 프로젝트와 비교할 때 소형 규모의 공사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프로젝트 진행시 현지에 진출해

있는 국내 종합건설업체 또는 현지 건설업체가 건물 시공을 담당하게 된다. 이럴 경우 건물의 품질 관리 및 건물 완공 후 하자 발생시 유지보수 측면에서 신속한 대처가 힘들다. 특히 현지 건설업체의 경우, 현지 진출 국내 대형 종합건설사와 비교하여 기술력 및 시공능력이 낮으므로 특히 상기 문제의 관리가 무척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CM-at-Risk방식을 도입할 경우 CM사가 부실시공에 대한 위험성 및 유지보수까지 책임지게 된다. 따라서 건물완공 후 하자발생시 협력단은 현지에 있는 시공사와 직접 연락을 취하여 유지보수조치를 취할 필요없이 국내 CM사를 통해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 행정절차 단축으로 인한 능률 향상이 기대된다. 또한 CM사가 시공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게 되므로 현지 건물시공 감독시,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수행함으로써 품질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둘째, CM-at-Risk 방식을 통해 국내 CM사가 선진 건설관리 유형으로 발전해갈 수 있는 발판을 얻을 수 있고 협력단으로서는 국내 건설업계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다.

미국의 건설산업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CM계약 방식 중 주로 CM-for-Fee방식과 CM-at-Risk방식을 사용한다. ENR(Engineering News Records)지에 의하면 97년 CM사의 계약수주액이 약 348억 달러에 이르고 있고 미국 5대 건설회사들의 수주고를 보면 CM계약공사와 턴키 공사가 약 80%를 점하고 있으며 이중 CM계약 공사가 40%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조사에 따르면 CM-for-Fee방식의 수주액은 약 51억불인 반면, CM-at-Risk방식의 수주액은 약 297억불을 상회, 대부분의 CM계약은 CM-at-Risk방식임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 CM용역시장의 약 85%를 CM-at-Risk방식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우리 건설업계와 정부는 선진국 건설유형인 CM-at-Risk방식이 국내에 정착되도록 여건 조성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CM-at-Risk 방식의 경우 CM사가 시공분야까지 직접 책임지고 수행함으로써 건물시공비가 용역비에 포함되어 CM-for-Fee방식과 비교하였을 때 용역비가 크게 상승함으로써 CM시장의 확대를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많은 건설업체가 CM시장에 참여하여 경쟁하게 됨으로써 관련분야 건설기술 발전에 커다란 도움이 된다. 아울러 현재까지는 CM시장의 규모가 작아 동 분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는 종합건설사의 참여를 이끌 수 있다. 이 경우 시공분야에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종합건설사가 이 노하우를 바탕으로 건설관리 분야까지 참여함으로써 조기에 건설기술 관리의 선진화를 구축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한국국제협력단에서 CM-at-Risk방식을 확대하여 나갈 경우, 건축 프로젝트의 품질향상 및 업무의 효율성 증대의 이점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건설업계는 동 용역 수행을 통해 선진 건설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 따라서 한국국제협력단은 향후 동 용역 발주방식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Ⅱ. 개발협력동향

취약국가 지원 관련 논의 동향[1)]

Ⅰ. 개발, 평화 및 안보

1. 취약국가(Fragile States)에서의 원조국 관여 원칙, 원조배분의 투명성 제고

□ 취약국가는 국가 실패, 지역 또는 국제적인 파급(Spill-over) 효과로 사후적으로 대규모의 비용을 초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관심과 공조를 필요로 함.

- 최근 연구는 취약국가가 이웃국가의 경제성장에 1.6%의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평가

※취약국가는 개도국의 약 13%를 차지하고, 1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인구의 1/3을 차지하고 있음. 취약국가는 빈곤퇴치를 이행할 능력(capacity)이나, 빈곤퇴치에 대한 정치적 의지(commitment)가 가장 약한 국가를 지칭하며, 문제국가(difficult partnership), 위기에 처한 저소득국가(low income countries under stress)등의 개념을 대체하는 용어로 사용됨.

1) 취약국가 관련 중견관리자 포럼 회의결과와 DAC LAP의 추진계획

□ 2005년 1월 열린 '취약국가에서 개발효과 제고를 위한 중견관리자포럼 Senior Level Forum(SLF)' 에서는 취약국가에 대한 원조배분의 투명성 제고 등 공여국의 지원 원칙 등을 논의하고 원조 배분(Aid Allocations)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제안함.

- 취약국가에 대한 원조가 다른 저소득국가와 비교하여 비적절할 정도로 낮고 예측가능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점을 감안, 취약국가에 대한 원조흐름에 대한 정규적인 통계 보고를 통하여 원조가 단기간에 급격하게 감소하는 취약국가

1) 지난 '05. 2. 28-3. 3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원조조화 고위급포럼(HLF) 및 OECD/DAC 고위급회담(HLM)에서 다루어진 의제를 요약, 정리한 것임.

에 대한 조기 경보(warning)체제 마련

※ 공여국들의 원조가 국가수행능력이 원활한 수원국들로 향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기니비소와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서의 사례와 같이 공여국들의 원조 철수 현상이 나타남. 빈곤의 정도보다 원조를 덜 받고 있는 취약국가들은 원조 고아(aid orphan)라고 불림.

※ 참고 : Investing In Development (UN Millenium Project 의 일환으로 제프리 삭스 교수가 만든 UN 보고서, '05년 1월)

- 이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 미얀마, 짐바브웨, 벨라루스 등 통치수준이 낮고 인권 남용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대규모 국제지원을 축소하는 반면, 통치수준이 높은(well-governed) 말리, 부르키나 파소, 이디오피아, 가나, 예멘 등 빈국들에는 '신속지위(Fast-Track Status)'를 부여, 개발 원조를 늘려주는 방안을 제시

□ DAC은 2005년 1월 열린 '취약국가에서 개발효과 제고를 위한 중견관리자포럼(SLF)'의 결과와 기존의 DAC 작업결과를 기초로 취약국가에 대한 원조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기본 원칙과 정책방향을 제시한 보고서 '취약국가에 대한 모범적인 국제적 개입 원칙(Principles for Good International Engagement in Fragile States)'을 발표

□ DAC LAP(취약국가에 대한 학습 및 자문반)은 동 원칙을 2005년에 2~5개 취약국가에 실험적으로 적용하고 그 결과를 보고 예정

- Service Delivery:취약국가가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것을 LAP의 2005년 우선 과제로 선정

※ LAP(Learning and Advisory Process on Difficult Partnerships) : DAC GOVNET 산하 작업반

2) 취약국가에서의 안전체제개혁(Security System Reform/SSR) 이행

□ 안전은 빈곤 퇴치와 유엔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요소임.

- 안전 문제는 국가실패(failed states) 등 국가, 지역, 국제적인 차원에서 많은 비용을 초래하고 있음.
- 불안정에서 발생하는 인도적 차원의 원조는 1980년 총 ODA의 3%에서 최근 10%로 상승 (2003년 OECD 개발협력보고서)

□ 2001년 DAC에 참가한 장관들 및 원조기관장들은 수원국들이 평화적 수단과 민주적인 방법으로 분쟁을 관리하고 해결하는 것을 지원하기로 공약한 바 있음.

□ DAC은 이미 안전체제개혁(SSR)의 이행을 통해 취약국가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정착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며 이에 관한 Good Practice를 형성하기로 합의

※ SSR(Security system Reform) : 전통적인 군사 및 경찰 체제 외에 사법기관, 정부행정조직, 언론 등 시민단체를 포괄하는 개념

□ 2004년 승인한 SSR 관련 지침을 효과적인 정책 및 전략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함.

- DAC '분쟁, 평화, 개발협력 네트워크(CPDC)'는 2005년 거버넌스와 안전체제관리에 관한 기능적인 원칙(Operational principles)을 개발 예정

참고자료

1. 취약국가에 대한 모범적인 국제적 개입 원칙(Principles for Good International Engagement in Fragile States)

- 취약국가의 취약성은 국가역량의 결여에서 비롯되는 것이므로 국제사회의 개발원조를 위한 개입은 그 장기적인 목표가 취약국가의 역량 강화 및 제도구축이어야 함.
- 취약국가들이 처한 상황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국제적 개입이 효과를 거두려면 이러한 국별 특수성(Particular country circumstances)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 개발원조가 행해지는 여러 분야(정치,안보,경제,사회 영역)는 상호의존성을 가짐을 염두에 두고, 국제공동체는 이러한 제반 영역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개발전략의 틀을 마련해야 함.
- 개발원조 이슈의 상호연관성을 고려하여 공여국 내부적 정책일관성(Policy coherence)이 요구됨. 특히 정치, 경제에서 인도적 지원까지 모든 이슈를 망라한 총체적 정부차원 접근법(A whole of government approach)이 요망됨.
- 원조조화(Harmonisation) 원칙은 취약국가에 대해서도 적용되지만 취약국가의 여러 가지 사정을 배려하여 적절히 수정 적용할 필요가 있음. 특히 취약국가 관련 평가활동(Analysis)에 관한 공여국간 상호조화가 중요함(공동평가, 공동전략 마련 등).
- 원조일치(Alignment)와 관련하여 전통적인 원조일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부분일치(Partial alignment)나 그림자 일치(Shadow alignment)등 취약국가 형편에 맞는 방식의 원조일치를 추진함.
- 원조공여기관은 원조제공시 수원국의 제도구축을 저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예컨대, 공여기관 현지직원에 높은 임금을 지급하여 수원국 정부가 인력난을 겪게 되는 등).
- 취약국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적 지원을 한데 묶어서(Mix of aid instruments)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원조흐름의 변동성(Aid volatility)이 크면 취약국에 대해 불안정을 초래하게 되므로 원조흐름에 대한 주기적인 분석 및 취약국가와의 공동협의체제 등을 마련하여 이에 대처해야 함.
- 취약국가는 여타 수원국보다 개발역량이 부족한 점을 고려하여 대취약국가 개발원조는 장기적 파트너십(Long-term partnership)을 기반으로 추진되어야 함.

2. 2004 OECD/DAC 고위급회의(High Level Meeting,HLM) 채택 SSR 관련 정책 선언(Policy Statement) 개요

- 치안체제개혁(SSR) 사업의 근거, 원칙, 목적을 상호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파트너 국가와 공동으로 노력한다.
- SSR을 위해서 범정부적인 접근방법을 취함으로써 정책 일관성을 향상시킨다.
- 파트너 국가에서 사업하는 원조기관 및 다른 행위자간에 조정(Coordination), 조화(Harmonisation), 효과적인 작업분담을 촉진한다.
- 안전관련 이슈의 해결에 있어서 OECD 회원국의 역할 필요성을 인정한다.
- 국가마다 SSR 추진과 관련 필요, 우선순위, 환경 등이 다름을 인정한다.
- 개혁과정에 있어서 파트너 국가의 주인의식을 향상시키는데 있어서 지원을 제공한다.
- 이와 관련, 파트너국가의 정부가 실현성 있는 전략을 개발하는 것을 지원하고 이해당사자가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시민사회가 안전체제의 민주적 거버넌스를 위한 친개혁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개혁의 출발점(Entry-point)을 확인하고 현지 행위자들과 공동 작업의 방안을 개발한다.
- 국가 차원의 개혁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경우에도 지역적 관점을 채택한다.

2. 분쟁, 평화, 안보관련 지출의 ODA 적합성

1) 의제 요지

□ 최근 '안전과 분쟁 예방' 이 개발 원조의 일부로 논의됨에 따라 ODA 통계의 확대 문제가 제기됨.

- 사무국 추정에 따르면 분쟁, 평화, 안전에 관한 항목이 ODA 통계보고 항목으로 확대될 경우, 연간 10억 불 규모의 ODA 가 증가될 것으로 평가

※ EC는 아프리카에 대한 250백만 유로 규모의 평화 유지 활동을 출범했으나 현행의 ODA 개념상 ODA 로 주장하기 곤란

※ ODA 개념 (1972년 이후 기본 개념에 변화 없음)

국가 및 지방정부를 포함하여 공적인 기관에 의해 제공되며, 다음 각각의 행위에 해당할 것

- 주된 목적이 개도국의 경제적 개발 및 복지를 위해서 행하여 질 것
- 성격상 양허적이며 적어도 25%의 무상(Grant) 요소가 포함되어 있을 것(10% 할인율로 산정)

□ 분쟁예방 활동의 ODA 적합성에 관한 논의는 아프간, 이라크 사태를 경험하면서 분쟁과 개발이 직결되어 있고 분쟁예방을 통한 개발 추진의 일환으로 분쟁예방 활동을 ODA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음.

- 분쟁예방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개도국들은 관련 재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공여국들은 ODA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분쟁예방 활동에 대한 관심 부족

□ 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 등은 분쟁예방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분쟁예방 활동의 ODA 적합성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에

- 노르웨이, 일본 등 다수 회원국이 ODA에 대한 신뢰도 및 ODA의 가치를 지켜야 하고 현재 국제사회는 빈곤퇴치를 포함하여 MDG(새천년개발목표)달성에 주력해야 하는 시점임을 강조하면서 ODA가 군대활동 또는 국방협력으로 전환되는 것을 경계해야 함을 주장
- 아울러 평화유지활동 비용을 ODA에 포함시킬 경우 명목상 ODA 규모만 증가(빈곤문제는 미해결)시키려 한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기존의 지침에서 별다른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평가됨.

□ DAC는 평화유지 등 5개의 새로운 지침(Directives) 항목을 검토하였으며 그중 3개에 대하여 컨센서스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HLM(DAC 고위급회의)에 승인을 위해 상정하고 회원국간 의견이 대립되는 '군대의 개혁 및 비군사적 훈련', '평화유지' 2개의 항목에 대해서는 당분간 논의 자체에 대한 모라토리엄을 전제로 추후 논의하기로 함.

□ DAC는 2005년 1월 열린 '취약국가에서 개발효과 제고를 위한 중견관리자포럼(SLF)' 의 결과를 중심으로 분쟁예방 및 평화정책에 관한 5개 이슈 중 아래 3개 이슈를 ODA에 포함시키기로 하고 2005년 HLM 회의에서 승인함.

① 치안시스템 개혁을 위한 기술협력은 ODA에 포함

② 평화정착, 분쟁예방 및 분쟁해결에 관한 민간활동 지원은 ODA에 포함(단, 군사전략 및 방위협력에 관한 사항은 제외되며 국방부 또는 군에 대한 직접지원도 제외됨)

③ 소형무기(SALW) 확산 방지를 위한 기술협력은

ODA에 포함. 단, 무기압수활동에 대한 재정지원은 제외되며 군대에 의한 무기 수거 및 폐기 활동에 대한 지원도 제외, 또한 국사력 증강에 대한 지원도 제외함.

ㅁ 그러나 군대의 개혁 및 비군사적 훈련(인권, 투명경영 등), 평화유지활동의 ODA 산정 등 2개 이슈에 대하여는 회원국간 입장 차이가 크기 때문에 더 이상 논의가 어려움에 따라 추후 논의키로 함.

참고자료

1. 2004 고위급회의(HLM)시 ODA 승인 항목

① 민주적 Governance와 안전체제에 대한 민간의 통제를 향상시키기 위한 능력 배양
- 주요항목: 안전시스템 개선을 위한 국회, 사법부, 행정부,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 군사 및 전투능력에 대한 지원은 제외.

② 안전 체제 검토(review)
- 주요항목:투명한 안전시스템 검토를 위한 정부, 국회 및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

③ 안전 관련 지출의 관리
- 주요항목: 안전 관련 지출에 대한 예산, 관리, 회계, 감사 등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기술협력.

④ 안전시스템에 대한 시민단체의 역할 강화
- 주요항목: 안전시스템 관련 책임, 투명성 등을 조사하는데 필요한 시민단체의 능력배양 지원.

⑥ 소년 병사
- 주요항목: 소년병의 모병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의 적용 등에 대한 지원.

⑦ 신뢰구축, 분석능력 개발, 분쟁 예방조치
- 주요항목: 국가 및 지역 분쟁 예방, 신뢰구축, 평화구축 등의 활동을 위한 시민단체의 능력배양 지원.

⑧ 소형 무기 및 경무기(Small arms and light weapon)
- 주요항목: 소형 무기의 확산 방지 및 수집 제거활동과 관련된 지방, 국가, 지역, 국제적인 조치에 대한 지원.

2. 컨센서스가 이루어지지 않은 2개 지침(안) 세부내용

1) 군대에 대한 개혁 및 비군사적 훈련

현행 DAC 지침상 군대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ODA 통계로 보고할 수 없음. 최근 군대에 대한 인권, 민주적 가버넌스 등에 개한 개혁 및 교육지원이 증가하면서 동 지원 재원을 ODA로 보고하자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현행 지침상의 무조건적 배제를 완화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

2) 평화유지(Peacekeeping)

네덜란드, 캐나다 등은 평화유지 활동 관련 기존 개념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공여국 군대에 의한 평화유지 비용이 ODA로 산정될 수 있다면 같은 활동을 하는 수원국 군대에 대한 지원도 ODA로 산정되어야 하며, 기존의 지침이 'Post conflict'로 제한하고 있는 것을 'Prevention'을 포함하여 범위를 확대하여야 함을 강력히 주장함.
- 벨기에, 포르투갈, 핀란드 등이 지지

일본, 영국 등은 공여국과 수원국의 군대는 엄연한 성격의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고 새로운 문안이 기존 ODA의 Integrity를 해칠 수 있음을 주장.
- 노르웨이는 적은 액수의 재원을 ODA에 포함시키기 위해 감수해야 할 위험을 지적하고 최근 수 년간 전세계적으로 국방비가 18% 증가한 반면 ODA는 불과 3%밖에 증가하지 않았는 바, 평화유지 활동에 대한 재원조달을 재원이 풍부한 국방비에서 조달할 것을 주장.
- EC는 현재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군대의 훈련, 평화유지 관련 새로운 지침의 경우 DAC에서 지침을 제정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통계를 산정하는데 어려울 것임을 지적하고 실현성이 없는 이슈에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음을 지적.

Ⅱ. 취약국가(Fragile States) 및 재난 등 위기 상황에서 원조효과 증진

□ 원조조화와 일치에 관한 노력이 진행되면서 공여기관들 간에는 경제 성장과 빈곤 감소에 대한 의지와 역량이 매우 빈약한 취약국가에서의 원조효과성에 대한 우려가 증폭됨.

□ 공여기관들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을 찾아내기 위해 취약국가들의 요구에 주목하면서 원조조화와 일치 관행에 대한 이행 상황 점검을 실시하였음.

□ 취약국가에서는 정부의 역량과 정통성이 부족해 효과적이고 다양한 원조 접근법들 간의 공조 혹은 균형이 부족함. 그 결과 일관성과 지속가능성이 결여되었으며 그나마 부족한 국가역량은 더욱 약화되었음.

□ 이러한 이유 때문에 취약국가에서 원조조화와 일치가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짐. 상당수 국가들이 분쟁 중에 있거나 현재 분쟁에서 탈피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공여국의 지원이 평화유지 및 치안 등 안보분야나 외교적 조치인 경우가 많음.

□ 한편, 공여기관 기업들의 교역 혹은 투자 관심사항이 수원국 개발목표와 상충되거나 오히려 분쟁을 부채질하는 경우도 있음. 그러므로 개별 국가에서 올바른 국정관리 확립이라는 목표 하에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

원조조화, 주인의식, 일치 등 주요 개념

(1) 원조조화(harmonisation) : 공여국-공여국간 조화

□ 원조공여국간 상이한 원조집행방식이 인적, 물적, 제도적 역량이 부족한 개도국들에게 심각한 부담이 되고 있는 바, 원조공여국들의 원조집행방식에 조화(조율)를 기함으로써 원조의 효과를 제고하자는 개념

(2) 수원국 주인의식(ownership)

□ 공여국은 수원국이 스스로 개발 우선순위와 전략을 수립할 수원국의 권리와 의무를 존중해야 하며, 수원국은 실행가능한 빈곤감소전략(PRS) 수립 등 개발계획수립 관련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개념

(3) 원조일치(alignment) : 공여국-수원국간 조화

□ 공여국은 수원국의 개발 우선순위와 개발전략에 일치되는 방식으로 원조를 제공해야 함을 의미함.

(4) 개발결과 관리(managing for results)

□ 수원국은 개발전략 수립과 개발과정 전 단계에서 개발결과 관리를 고려해야 하며, 공여국들은 상호공조하여, 수원국의 전략에 기초한 개발원조 제공에 노력해야 함.

1. 취약국가에서의 원조일치

□ 취약하긴 하나 의지와 역량이 있는 국가에서는 원조일치가 가능할 수 있음.

□ 원조일치가 어려운 취약국가에는 공여국들 간에 '원조일치 노력을 조화(Harmonise to align)' 시킬 것이 요구됨. 공여국은 취약국가의 주인의식과 리더쉽을 고취할 수 있도록 원조조화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음.

□ 공여국들은 취약국가에서의 그들의 활동을 조화시켜나가야 함. 이는 강한 정부의 지도력이 없이도 이행가능하며 공여국간 공동평가(Joint assessmet), 공동 전략(Joint strategies) 수립, 정치개입의 조정(Coordination of political engagement)과 같은 상향적 분석과 공여국간 공

동 공여국사무실 설치와 같은 작업을 시작으로 이행될 수 있을 것임.

2. '부분적/섀도우 일치'의 개념

□ 이는 공여국이 취약국가의 상황에 맞게 일치(Alignment)를 실행해야 함을 의미함. 통치력이 약한 취약국가에서는 정부주도의 일치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공여국은 이러한 상황에 맞게 일치를 추구해야 함. 공여국들은 분야별, 혹은 국가별 차원에서 '부분적'으로 일치할 수 있는 기회를 찾고(부분적 일치), 이것도 불가능할 때는 섀도우 일치(Shadow alignment)를 추구하는 등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부 시스템과 행정체계에 순응하는 방법을 따르도록 함.

- '부분적 일치'는 공여기관들이 충분한 의지와 역량이 있는 지역에서 원조프로그램을 일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이런 부분적 일치가 가능치 않은 경우에는 섀도우 일치가 효과적일 수 있음.
- '섀도우 일치(Shadow alignment)'는 기존의 정부제도와 부합하는 (조화된) 원조프로그램을 일컫음. 이는 기존 제도를 활용해 원조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접근법으로 이를 통해 수원국 정부의 주인의식과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음. 이 접근법의 중심요소는 예산주기, 예산구분, 회계, 조달, 감사 혹은 조직구조 등에 있어 호환 가능한 형태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행정적 체계를 이용하는 것을 말함.

3. 취약국에서의 개발결과 관리

□ 취약국가에 대한 원조의 장기적 목적은 합법적, 효과적 국가 제도의 복구임. 주인의식, 일치, 조화, 개발결과 관리 등 원조의 효과 제고는 취약국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나, 취약국가의 경우 주인의식과 역량이 결핍되어 있고 기초서비스 전달 등 즉각적인 수요가 집중되는 상황에 맞게 수정되어야 함.

□ 수원국의 안보(Public safety), 올바른 국정관리(Good governance), 국민에게 기초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는 제도와 통치구조를 설립하는 데 주력하여야 함.

- 아직 국가개발전략이 없는 취약국의 경우에는 공여국과 협력하여 '과도기 성과관리 매트릭스(Transitional Results Framework)'와 같은 간단한 전략기획 프레임웍을 개발하여야 할 것임.

□ '과도적 성과관리 매트릭스(Transitional Results Matrix)'는 취약국가에서 원조조화 및 일치 달성을 위해 개발되었으며 이 접근법은 2005년 1월 런던에서 개최된 '취약국가에서 개발효과 제고를 위한 중견관리자 포럼(Senior level Forum on Development Effectiveness in Fragile States)'의 주요 주제로 논의됨.

참고자료

1. 과도적 성과관리 매트릭스(Transitional Results Matrix/TRM)

- TRM은 취약국가에서 공여국간 일관성 있는 결과관리를 위한 도구로서 빈곤감소전략의 중요한 원칙을 취약국가에 적용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도구임.
  - 이는 로마 선언과 원조 조화 의제에서 도출한 다섯 가지 원칙(단순성(Simplicity), 선택력(Selectivity), 정치, 안보, 경제, 사회적 복구의 통합, 주인의식(National ownership) 그리고 공여기관 구매(Donor buy-in))에 기반을 두고 있으나 과도기 상황의 취약국가의 상황에도 적용될 수 있음.
  - TRM을 통해 결과지표와 점검가능한 목표의 활용이 가능함.
  - TRM은 전략적 계획수립과 이행 모니터링을 위한 관리 도구로서, 그리고 공여기관간 공조 우산의 역할을 하고 공여기관과 수원국 정부 간의 공동 업무에 관한 협약의 역할을 하도록 기획됨.
  - TRM은 전반적인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분쟁 이후 재건과정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고 시민단체의 참여와 감시를 위한 기반을 제공하는 역할을 할 것임.

2. 취약국가의 개발효과 제고를 위한 중견관리자포럼(SLF) 결과(2005. 1. 13-14, 런던)

- 주최: OECD 개발원조위원회/유럽집행위(EC)/UNDP/WB
- 주요 내용
  - 취약국가에 대한 전략적 프레임웍과 공여국의 정책 일관성 제고방안 논의
  - 취약국가에 대한 원조배분 논의
  - 취약국가에 대한 분석, 전략, 프로그램 등에 대한 공여국간 원조조화 제고방안 논의

OECD/DAC 2004년 ODA 통계

Ⅰ. ODA 규모

□ 2004년도 DAC 회원국의 ODA 규모는 786억불로서 사상 최고치 기록(2003년도는 690억불)
- 인플레, 달러 하락을 고려한 실질가치로 계산시 2003년에 비해 4.6% 증가(2003년도는 2002년도보다 4.3% 증가)

□ ODA/GNI 비율은 0.25%로써 2003년과 동일 수준(2002년도 0.23%, 2001년도 0.22%)

□ ODA 증가 주요 요인
- 국제기구 기여금 및 출자금 증액(37억불)
- 아프간, 이라크 지원 증가(15억불)
- 기술협력 증가(12억불)

Ⅱ. 주요 ODA 순위

□ 규모별 : 미국(190억불), 일본(89억불), 프랑스(85억불), 영국(78억불), 독일(75억불)순

□ ODA/GNI 비율: 노르웨이(0.87%), 룩셈부르크(0.85%), 덴마크(0.84%), 스웨덴(0.77%), 네덜란드(0.74%)순이며, 동 5개국만이 UN 목표치 0.7% 초과

Ⅲ. 주요 ODA 동향

□ 22개 DAC 회원국 중 15개국의 ODA 규모 증가
- 벨기에, 이태리, 네덜란드 등은 감소

□ 미국의 ODA는 190억불로써 2003년(163억불)에 비해 실질가치로 14.1% 증가
- ODA/GNI 비율은 0.15%에서 0.16%로 증가한 바, IDA에 대한 출자금(18억불) 및 아프간(8.7억불), 이라크(29억불)에 대한 원조 증가에 주로 기인
- 미국의 ODA가 DAC 회원국 ODA 총액의

24.2%를 차지하여 1986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 (1995년 최저치 12.5%에 비해 거의 두 배)

□ 일본의 ODA는 89억불로써 ODA/GNI 비율은 0.19%이며 전년에 비해 실질가치로 4.8% 하락

□ 15개 EU 회원국의 ODA 합계는 429억불이고 ODA/GNI 비율은 0.36%로써 DAC 전체의 55%를 차지하였으며 전년(371억불)에 비해 실질가치로 2.9% 증가(EU 국가들의 주요 원조증가 내용 및 주요 요인 아래 참조)

- 오스트리아(22%)는 채무탕감
- 그리스(13.1%)는 기술협력 및 긴급원조
- 룩셈부르크(10.5%)는 지역개발은행에 대한 출자금 증가
- 포르투갈(187.5%)은 앙골라 채무탕감으로 인해 예외적 증가
- 스페인(14.5%)은 국제기구에 대한 기여금
- 영국(8.8%)은 프로젝트원조 증가 및 채무탕감
- 덴마크(3.5%), 핀란드(5.9%), 프랑스(4.3%), 아일랜드(2.2%), 스웨덴(1.4%)도 증가

□ EU 국가들의 주요 공약현황

- EU는 2006년까지 0.39% 달성 목표
- 벨기에는 2010년까지, 프랑스는 2012년까지 0.7% 달성
- 스웨덴은 2006년까지 1% 달성
- 스페인은 2006년에 0.33%, 2008년에 0.5% 달성
- 영국은 2007~8년에 0.47%, 2013년까지 0.7% 달성
- 아일랜드는 향후 수 년 내 0.7% 달성
- 독일, 그리스, 이태리 등은 국가별 최소목표치 0.33% 달성을 위한 별다른 조치가 없는 실정

□ DAC 회원국들이 ODA 확대공약을 준수할 경우 2005~6년에도 ODA 규모는 상당히 증가하여 2006년까지 ODA/GNI 비율은 0.30%까지 올라갈 전망임.

- 2005년 2월 공여국들은 IDA에 대한 출자금 180억불 지원 합의
-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공여국들이 양자원조 예산 확대 추진중
- 인도양 지진해일 계기 대규모 원조 약속
- 2004년 말 파리클럽은 이라크 채무탕감조치 합의(2005년도 150억불 예상)

[자료:주오이시디 대표부]

제833회 OECD 개발원조위원회 정기회의 결과

Ⅰ. 핵심요지

□ OECD 개발·환경장관 합동회의를 2006년 5월 개최하는 방안에 대하여 독일을 제외한 대다수 회원국이 적극 지지입장을 표명하였으며 세부사항은 계속 논의키로 함.

□ 원조효과 증진에 관한 파리 고위급포럼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원조효과 작업반 회의를 2005. 5. 30~31간 개최하고 Non-DAC 공여국을 위한 브리핑을 2005. 9. 27~29간 개최키로 함

Ⅱ. DAC Outreach 전략 추진 합의

□ Outreach 전략 일반사항

-Outreach의 대상을 5개 그룹(non-DAC OECD 회원국, non-OECD 공여국, 수원국, 국제기구, NGO)으로 분류

-Outreach의 수단으로서 기존에 해오던 계속적인 회의참여 외에

· Non-DAC 공여국의 통계능력 지원,

· ODA 담당자를 위한 브리핑(structured briefing) 실시

· 회원국의 국별심사에 Non-DAC 공여국의 참여(silent observer 자격)

· Non-OECD EU 회원국 및 주요 신흥공여국(BRICS)에 OECD 문서검색시스템(OLIS) 접근 허용

· Non-DAC 공여국과의 정책대화 회의 개최 등을 추진

-Non-OECD 공여국은 다시 4개 그룹(①쿠웨이트, 사우디, UAE 등 전통적 공여국 ②브라질, 인도, 러시아, 중국, 남아공 등 주요 신흥공여국 ③Non-OECD EU 회원국 ④여타 Non-OECD 공여국)으로 분류하여 그룹별로 적합한 사업 시행 및 모니터링 실시

□ Non-DAC 공여국을 위한 브리핑(Structured Briefing) 계획
- 일시 : 2005. 9. 27~29간 OECD 본부에서 2~3일간 일정
- 대상 : 한국 포함 23개 신흥공여국의 개발원조 담당자(아랍권 공여국들은 제외)
- 목적 : DAC의 정책지침 설명 및 신흥공여국의 개발원조에 대한 의견교환
- 주요 의제 : 성장과 빈곤완화, 원조관리, 원조효과, 원조의 치안측면, 정책일관성, 통계, 개발센터 등

□ Global Forum on Development
- DAC의 outreach 전략의 일환으로 기존의 Partnership Forum을 Global Forum으로 대체하고
- 개발클러스터 및 전체 OECD 작업의 일관성(coherence) 증진에 초점을 맞추며
- 주요 의제로는 아프리카 원조 증진, 파리선언 후속조치, 원조의 언타이드화, 빈곤퇴치를 위한 인프라시설의 역할, Aid architecture 등을 추진키로 잠정 합의

Ⅲ. 원조효과 증진에 관한 파리 고위급 포럼 후속조치 추진 합의

□ DAC의 원조효과작업반 회의를 2005. 5. 30~31간 개최

□ 사무국은 파리선언에서 확정되지 않은 일부 지표의 목표(target) 도출을 위한 기초정보(baseline information)를 수집 중인 바, 이에 관한 feedback을 5월 중순까지 제공하고 2005년 9월까지 target에 합의할 수 있는 방안 제시 요망

□ 그간 원조효과작업반 회의에 참여하였던 모든 수원국(총 22국)을 5월 회의에도 초청

□ 추후 원조효과작업반회의에도 수원국 약 20개국(여비 지원) 및 지역개발은행, 국제기구를 참여시키되 NGO는 초청하지 않음.

Ⅳ. DAC의 홍보전략 추진

□ DAC의 새로운 홍보전략의 대상은 본국 정부의 ODA 담당관 및 현장 관리자들이라는데 합의

□ DAC에서 주요 정책 및 지침을 생산하고 있지만 본국의 정책담당관들에 의해 읽혀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이 주로 지적되었고 새로운 홍보전략의 초점을 ODA 담당관 및 현장관리자들이 DAC 문서를 읽을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모범관행(good practice)이 일반관행(general practice)이 되도록 하는데 맞추기로 함.

Ⅴ. 통계개발 지원

□ 마라케쉬 행동계획의 권고에 따라 모든 저소득국은 국가통계개발전략(NSDS)을 2006년까지 준비하게 되어 있고 이에 따라 PARIS21(OECD 사무

국 추진 통계협력프로그램)은 81개 저소득국의 NSDS 수립을 지원하고 있음.

□ 금번 회의에서 PARIS21의 연간활동보고서(통계개발을 위한 국별전략 문서)를 승인함.

□ 합동회의 준비 관련 세부사항은 DAC 및 EPOC 산하 해당 작업반에서 추가 논의하되 최종결정은 작업반이 아닌 위원회에서 결정키로 함.

[자료:주오이시디 대표부]

Ⅵ. 개발 · 환경장관 합동회의 개최

□ 개발 · 환경장관 합동회의를 2006년 5월 개최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한 바, 다소 유보적 입장을 보인 독일을 제외한 대다수 국가가 적극적 지지입장을 표명하였음.

노르웨이 대외원조 개관

Ⅰ. 노르웨이 원조 개요

1. 원조목적

□ 노르웨이의 개발원조 정책기조는 '포괄적 개발정책',[1] '빈곤퇴치를 위한 노르웨이 정부 행동계획(2002)', '개발원조정책 백서(2004)' 등 일련의 정책보고서를 통해 강화되고 있음.

- 빈곤퇴치(Poverty reduction)가 중심목표임. 동 목표달성을 위해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준거지표로 삼고 있음.
- 이와 관련, 노르웨이 정부는 타 공여기관 및 NGO 등과의 정책대화에서 범세계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을 주요 목표 중 하나로 삼고 있음.

□ 대외원조법 제정 여부

- 현재 별도의 법률은 제정되어 있지 않으며 '노르웨이 대외관련법(Law on the Norwegian Foreign Service)'에 ODA 근거 규정이 있는 외에 매년 정부가 의회에 제출하는 budget proposal 및 교육·환경·아동 등 각 분야별로 정부에서 작성하는 strategy paper 등이 ODA 집행의 준거규정이 되고 있음.

2. 원조정책

□ 노르웨이는 지원대상국을 주요 지원대상국 및 기타 지원대상국 등 2개 그룹으로 분류

- 주요 지원대상국(main partner countries):방

1) 동 보고서에서는 빈곤퇴치를 위해 다음 4개 분야에서의 혁신이 필요함을 밝힘.
- 국제개발협력 프레임웍(무역, 기술이전, 부채탕감, 정책일관성)
- 거버넌스(수원국 스스로의 내부적 관리역량 개선의지 필요)
- 국제개발원조(수원국 주인의식 고양 및 개발원조의 양적, 질적 개선)
- 개발재원동원(특히, 민간부문과 시민사회 역량 활용)

글라데시, 말라위, 모잠비크, 네팔, 탄자니아, 우간다, 잠비아 (7개국)

- 기타 지원대상국(other partner countries):앙골라, 중국, 에리트레아, 이디오피아, 과테말라, 인도네시아, 말리, 니카라과,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스리랑카, 팔레스타인, 남아프리카공화국, 동티모르, 베트남 (15개국)[2]
- 특히 주요지원대상국에 개발원조의 초점을 맞춤. 그러나 최근 주요 지원대상국에 대한 양자간 원조 비중은 계속 감소하는 추세
- 주요 지원대상 분야: 교육, 보건, 민간부문 개발(농업부문 중심), 평화구축, 환경, 천연자원개발, HIV/AIDS, 거버넌스 개선, 인권존중, 고용창출 등

□ 원조조화 및 원조일치(harmonisation and alignment)에 대해서도 북유럽 국가모임인 Nordic plus 회원국간의 정책대화를 주도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 인도적 지원 분야는 노르웨이 개발협력에서 매우 높은 우선순위를 가짐.

- 개발원조정책이 어떻게 평화구축(Peace-building)에 기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전략적 틀을 마련하였으며 기존 인도적 원조 및 장기 개발원조 수단이 불충분한 상황에 있는 국가를 지원키 위해 특별예산(A special budget line)을 2002년부터 마련함.
- 인도적 지원과 관련, 노르웨이는 NGO에 크게 의존(2002년 기준 전체 원조의 22%를 제공)

□ 개발과정에서 수원국민의 인권을 동시에 고려하는 정책(rights-based approach)을 추구함.

- 수원국이 빈곤감소전략(PRS) 마련시 인권문제를 배려토록 지원
- 여기에서 인권은 시민 · 정치적 권리와 아울러 경제 · 사회 · 문화적 권리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임.

□ 노르웨이 개발NGO는 정부의 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대단히 높음.

- 높은 정부 의존도로 말미암아 노르웨이 NGO는 독립적 지위에서 개발정책 및 프로그램 마련에 기여하는 존재가 아니라 정부의 원조프로그램 이행자의 지위로 전락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는 실정임

3. 개발원조에 대한 정치적 합의 및 국민적 지지

□ 노르웨이에서는 개발원조 수준 및 지원 우선 순위 등에 있어서 강력한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음.

- 구체적인 개발원조 실태에 대한 일반 대중들의 이해는 그다지 높지 않음. 그럼에도 여타 DAC 회원국들 보다는 개발원조 체제에 대해 잘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4. 원조체계

□ 주요 대외원조 시행기관

2) 아프가니스탄과 케냐가 추가될 예정임.

- 외교부 : 25개 협력대상국(partner countries)과의 양자차원 원조를 담당하며, 전체 ODA 예산의 80% 이상을 집행
- 노르웨이 개발협력단(NORAD : Norwegian Agency for Development Cooperation) : 외교부 산하기관으로서 상기 NGO를 통한 대외원조 시행의 감독, 대정부 자문 및 관련분야 연구업무 등을 담당하며, ODA의 10~15%를 수행
- 노르웨이 평화봉사단(Norwegian Peace Corps) : 외교부 산하단체로서(이사진을 외교부가 임명) 저개발국과의 인적교류를 담당하고 있으며, ODA 예산의 1% 가량 사용
- NORFUND : 반관반민기관으로서 주식투자 등을 통한 협력대상국의 산업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04년도 정부출연금은 총 ODA 예산의 3% 가량

※ 이전에는 NORAD가 양자원조의 시행을 담당하였으나 2004.4월부터 decentralization 차원에서 이를 외교부-구체적으로는 대상국가 주재 공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NORAD의 역할 및 인원도 축소(약 300→200명)된 바 있음.

□ 상기와 같이 대외무상원조를 다수의 기관이 분담하여 집행하고 있으나, 외교부에서 효과적으로 조정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각 기관간 별도의 상설화된 협의체는 없음.

□ 노르웨이는 2004년 개발원조체계에 대한 전반적 개편을 단행함.

- 개발원조활동의 기획, 실행기능은 외교부로 이관됨.
- 그리고 해외공관에 보다 많은 권한을 위임(delegate)함으로써 의사결정의 분권화(decentralisation)가 이루어짐.
- NORAD(Norwegian Agency for Development Cooperation)는 사업평가, 원조품질보증, 지식관리, 그리고 시민사회와 민간부문에 우호적인 무상원조 체제 운영 등으로 담당영역이 변화하였으며 외교부 내 기술국(Technical directorate)의 지위에서 외교부와 공관에 자문을 제공함.

□ 이러한 개편은 원조정책, 전략 그리고 실행간 상호유기적 구성 및 유관부처간 역할분담의 명확화 등을 목표로 함.

Ⅱ. 노르웨이 원조내역

1. 총괄

□ 노르웨이의 ODA는 99% 이상이 무상원조이며 유상원조로서는 World Bank/IDA에의 기여금이 있는 바 전체 ODA의 1% 미만임.

- 2004년 기준 노르웨이의 ODA 총 규모는 22억불 수준으로서 GDP의 0.87% 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바, 노르웨이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ODA 규모가 GDP의 1%에 도달하도록 한다는 방침임.

□ ODA의 50% 이상은 UN, UNDP, World Bank 등 국제기구를 통하여 20% 가량은 국내외 NGO를 통하여 집행되고 있음.

2. 최근 5년간 노르웨이 ODA 지원규모

□ 2003년도 ODA 규모: US$2,042백만(ODA/GNI 비율: 0.92%)

- ODA 총액 기준으로 DAC 22개 회원국 중 9위, ODA/GNI 비율 기준으로는 1위임.
- 현 정부는 2009년까지 동 비율을 1%까지 높인다는 목표를 설정

(단위: US$백만)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ODA	ODA /GNI	ODA	ODA /GNI	ODA	ODA /GNI	ODA	ODA /GNI	ODA	ODA /GNI
1,370	0.88%	1,264	0.76%	1,346	0.80%	1,696	0.89%	2,042	0.92%

※ 자료: OECD, The DAC Journal: Development Cooperation 2004 Report

3. ODA 지원현황

1) ODA 규모: US$2,042백만(2003년)

□ 양자간/다자간 ODA

- 양자간 ODA 규모: US$1,462백만(72%)
- 다자간 ODA 규모: US$580만(28%)

※ UN 등 다자기구 지원비중이 비교적 높은 편

※ 양자/다자/NGO 등 원조제공 채널 선택은 MDGs 및 기타 원조목표 달성에 어느 쪽이 더 비교우위에 있는가를 기준으로 함.

□ 양자간 ODA 중 유 · 무상 비중

- 무상원조 규모: US$1,455백만(99.5%)
- 유상원조 규모: US$580만(0.5%)

2) 10대 수원국

(단위: US$백만)

순위	국명	지원규모 (2002-2003 평균)	점유율 (2002-2003 평균)
1	아프가니스탄	65	3.5%
2	탄자니아	57	3.0%
3	팔레스타인	52	2.8%
4	모잠비크	46	2.5%
5	이라크	38	2.0%
6	우간다	35	1.9%
7	세르비아-몬테네그로	33	1.8%
8	이디오피아	33	1.8%
9	소말리아	33	1.7%
10	잠비아	32	1.7%
합계		424	22.7%

※ 자료: OECD, The DAC Journal: Development Cooperation 2004 Report

〈상위 10대 수원국 변동추이〉

순위	국명 (1982-83)	%	국명 (1997-98)	%	국명 (2002-03)	%
1	탄자니아	9.3	탄자니아	6.6	아프가니스탄	3.5
2	방글라데시	4.8	모잠비크	5.8	탄자니아	3.0
3	케냐	4.0	잠비아	3.6	팔레스타인	2.8
4	인도	3.6	방글라데시	3.1	모잠비크	2.5
5	모잠비크	3.0	베넹	2.1	이라크	2.0
6	잠비아	2.6	니카라과	1.9	우간다	1.9
7	스리랑카	2.3	짐바브웨	1.9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1.8
8	파키스탄	2.2	구 유고연방	1.7	이디오피아	1.8
9	수단	1.9	보츠와나	1.6	소말리아	1.7
10	짐바브웨	1.5	이디오피아	1.6	잠비아	1.7
합계		35.2		29.9		22.7

※ 자료: OECD, The DAC Journal: Development Cooperation 2004 Report

3) 지역별 지원현황(양자간 ODA 기준)

- 지원의 대부분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집중되고 있으며 서남아 및 중앙아시아 지역에도 15% 이상의 지원이 유지되고 있음.

지 역	1982-83	1992-93	2002-03
유럽	2.8	3.4	14.4
사하라이북 아프리카	0.3	0.1	0.4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56.5**	**61.8**	**45.8**
북중미	2.6	7.0	4.0
남미	0.9	2.3	2.5
중동	2.0	1.2	10.8
서남아 및 중앙아시아	**28.5**	**17.7**	**16.8**
극동아시아	6.0	6.4	5.2
오세아니아	0.4	0.0	0.0
합 계	100	100	100

※ 자료:OECD, The DAC Journal: Development Cooperation 2004 Report

4) 소득그룹별 지원현황(양자간 ODA 기준)

□ 최빈개도국에 54.2%, 중저소득국에 32.9%를 지원하고 있음.

지 역	1982-83	1992-93	2002-03
최빈개도국(LDCs)	55.0	63.0	54.2
기타저소득국(other LICs)	26.9	15.9	10.0
중저소득국(LMICs)	13.5	16.2	32.9
고중소득국(UMICs)	4.6	4.9	2.9
고소득국(HICs)	–	–	–
MADCT[1]	–	0.0	0.0
합계	100	100	100

주1): More Advanced Developing Countries and Territories(동 국가에 대한 지원은 OA(Official Aid)로 분류)

※ 자료: OECD, The DAC Journal: Development Cooperation 2004 Report, Table 32

5) 2003년도 노르웨이 분야별 지원실적

- 사회 및 행정인프라 41.2%, 긴급원조(Emergency aid) 23.8%, 다부문 9.2%, 경제인프라 7.6%, 생산 4.5% 등
- 사회 및 행정인프라는 10여년 전에는 19.6%, 긴급원조는 7.0%에 머물렀던 것이 최근에 이르러 그 비중이 크게 상승한 점이 주목할 만함.

분 야		2003년도
사회 및 행정 인프라 (Social and administrative infrastructure)	교육(기초교육)	9.1%(4.8%)
	보건(기초보건)	6.7%(3.5%)
	인구	2.4%
	식수 및 위생	1.4%
	정부 및 시민사회	15.4%
	기타 사회인프라/서비스	6.2%
소 계		41.2%
경제인프라 (Economic infrastructure)	교통 및 통신	1.7%
	에너지	4.2%
	기타	1.7%
소 계		7.6%
생산 (Production)	농업	3.9%
	제조업, 광업 및 건축	0.1%
	무역 및 관광	0.6%
소 계		4.5%
다부문(Multisector)		9.2%
프로그램원조(Programme assistance)		3.6%
부채탕감(Action relating to debt)		1.5%
긴급원조(Emergency aid)		23.8%
행정경비(Administrative expenses)		6.8%
기타(Unspecified)		1.7%
합 계		100%

※ 자료: OECD DAC Journal: Development Cooperation 2004 Report, Table 19

Ⅲ. ODA 조직운영 동향

1. 노르웨이 정부는 빈곤감소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2004년 원조조직 개편을 단행

- 노르웨이 외교 및 개발관련 기획, 실행, 행정 업무는 외교부로 통합
- 수원국 주재 외교공관에 개발 프로그램 실행의 책임을 대폭 위임함으로써 의사결정을 분권화 시킴.
- NORAD(Norwegian Agency for Development Cooperation)는 원조사업의 평가(Evaluation),

외교부 및 해외공관에 대한 기술자문 제공, 원조품질보장 등의 임무를 맡음. NORAD의 최고책임자(Director)는 외교부의 국제개발정책과에 보고함.

2. 외교부 : 노르웨이 개발협력의 중심기구

- 노르웨이 외교부는 2인의 장관(외무장관, 개발장관)과 1인의 사무총장을 둠. 사무총장은 2인의 장관 모두를 보좌함.
- 외교부 내에는 10개 과가 설치됨(과거 11개에서 축소됨). 이 중 개발협력 주무부서는 국제개발정책과(DIDP)로서 개발원조, 다자개발, 주요 원조 우선 순위 등을 다루고 원조조화/일치 업무를 관장
- 타 부서들도 개발원조 유관영역에 관계될 경우 개발협력분야에 관여함.
- 본부는 매년 해외공관의 연간 개발원조 활동계획을 승인
- 인도적 지원(managing humanitarian action)과 관련, 외교부는 '인권, 민주주의, 인도적지원 담당과'를 신설함. 이로 말미암아 원조체계가 다소 복잡해지고 부처간 상호공조 비용이 상승하는 문제가 생김.

3. NORAD의 역할변경

1) 평가부문

- 2004년까지 개발원조사업 평가업무에 외교부, NORAD 및 기타 유관부처 등 서로 다른 기관들이 동시에 참여하고 있어서 체계가 복잡하고 많은 비용이 소모되는 문제가 있었음.
- NORAD는 외교부 직제개편 후, 동 기관 내의 사업평가과(Evaluation Department)에서 모든 개발원조사업의 평가 및 개발연구(development research, 예컨대 빈곤, 보건, 분쟁, 평화구축 등)를 담당하게 됨. 이는 국별 차원에서의 정책 및 관여에 대한 평가활동이 독립성을 갖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아울러 NORAD는 사업평가와 관련, 다음의 역할을 수행함.

  ①평가결과 체계화 ②국제적 차원에서의 개발협력 평가기관 및 네트워크와 상호협력 ③다수 공여국이 관여하는 평가활동에 참여 ④개발협력 연구기관과의 연계

2) 기술자문 부문

- 조직개편 후 NORAD는 다자기구를 통해 지원되는 사업 및 정책보고서에 대한 기술자문 기능을 맡게 됨.
- NORAD는 다음의 4개 부서를 통해 동 역할을 수행:환경 및 민간부문 개발과, 인적자원 및 서비스 제공 담당과, 거버넌스 및 거시경제담당과, 원조품질보증 담당과

3) 원조품질보증 및 지식관리

- NORAD는 원조품질보증(Guality assurance and knowledge management) 기능을 수행. 이를 위해 ①해외 현지공관에 대한 권한 위임 관련 지원 제공 ②사업방식 및 제도 개선 ③평가, 기록, 그리고 결과의 확산을 위한 수단 개발

- 노르웨이 정부는 평가, 원조품질보증, 그리고 지식관리 기능을 NORAD 내에 결합시킴으로써 모니터링 및 평가에 있어서 원조일관성 및 상호공조 개선을 추구하고 서로 다른 차원에서의 결과를 체계화 하고자 하고 있음.

4) 원조결과 관리

- 외교부는 조직개편시 원조결과 관리 문제를 염두에 둠.
- NORAD가 개발원조 평가업무 전반에 책임을 지게 되는 한편, 원조결과관리는 외교부에서 담당함. 이 역할분담은 각 기관이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반면, 원조사업 평가결과를 향후 정책수립 및 집행 등에 반영하는 데는 한계를 노정하고 있음. 따라서 향후 두 기관의 정보공유 및 지식관리 성과에 따라 조직개편의 성공여부가 영향을 받게 될 것임.

5) 인적자원 관리

- 조직개편에 따라 외교부 본부, NORAD, 그리고 해외공관 간에 인력 재배치가 이루어 짐. NORAD의 경우 약 60~70명 정도의 인원이 감축되며 그 중 50명이 외교부로 흡수됨. 35명은 해외공관으로 이전될 예정. 그 결과 외교부 본부는 239명, 공관에는 198명, NORAD에는 190명의 직원이 배치됨. 전반적으로 NORAD에서 외교부 및 공관으로 인력이 이동되고 전체 인력의 증감은 별로 없는 편
- 이상의 외교부 개편에 따른 성과는 아직 분명치 않은 단계임.

4. 기타 개발원조에 관여하는 기관

ㅁ외교부가 개발협력의 주도적인 역할을 맡고 있으나 여타 유관 부처들도 함께 개발원조에 참여함.

- Storting's 상설외교위원회:외교부와 함께 노르웨이 정책 전반에 양립할 수 있는 개발협력정책 수립
- 재무부:IMF 및 노르웨이 중앙은행과의 관계유지 관련 임무를 맡고 있음.
- 감사원:개발협력 관련 재원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보고함.
- 기타 환경부, 보건부, 교육부 등이 개발협력정책에 관여하고 있음.

IV. 2005년 동료평가 권고사항

1. 개발전략

- 인권중심적 개발협력 접근방식을 실행에 옮길 때 우선 순위 수원국과의 정책대화가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지를 고려할 것
- 노르웨이의 원조조직 개편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타 공여국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임.
- 개발결과를 강조하는 현재의 기조를 유지할 것(특히 섹터별 지원 및 예산지원 분야). 이는 일반대중의 개발협력에 대한 지지를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
- 양성평등 분야에 대한 관심을 유지토록 함.

2. 원조규모 및 배분

- ODA/GNI 1% 목표에 근접하려는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다년주의 원조재원 제공방식을 도입하여 수원국들에게 원조재원 유입규모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토록 할 것을 권고함.
- 장기로 지원되는 원조 및 노르웨이가 비교우위를 갖는 원조제공 방식을 모색할 것을 권고함.
- 정부와 NGO 간의 관계를 다룰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대 NGO 지원 기준을 명료화하는 한편, NGO가 빈곤감소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평가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 있음.

3. 개발정책일관성

- 정책일관성 향상을 위한 정부의 조치에 관해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MDGs를 유관 정부 정책에 통합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탐구할 것을 권고함. 또한 그 분야를 포괄하는 전체 정부차원 메커니즘을 마련하여 정책일관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임.
- 개편된 NORAD에서 정책일관성 관련 정책에 대한 평가가 향후 가능할 것임.

4. 원조관리 및 실행

- 노르웨이 정부는 해외공관이 어떻게 인권에 기초한 개발접근방식을 실행에 옮길 것인지 그 방안을 명료화시켜야 함.
- 노르웨이 정부는 원조관련 행정에 있어서 적절한 인력과 자원을 결합하여 주요 개발원조정책 분야에 대한 자문 및 지원을 제공해야 함. 또한 양성평등 분야에 대한 지지를 강화해야 함.
- 정부는 NORAD가 새로이 맡은 기능과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자원을 제공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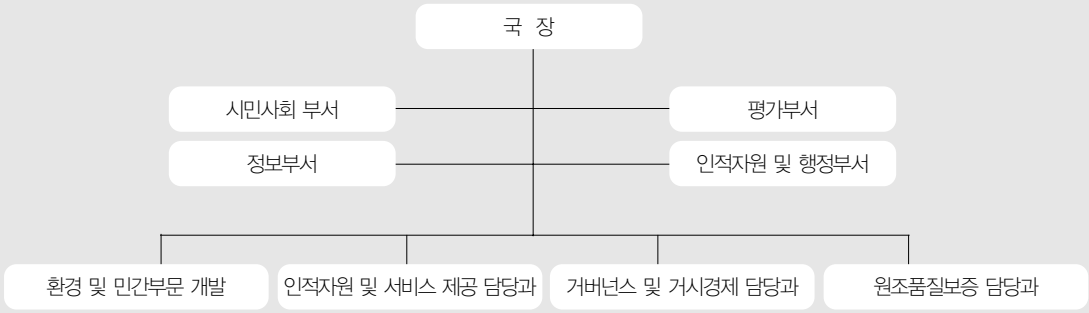
5. 인도적 지원

- 정부는 인도적 지원 관련 포괄적 정책문서를 발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를 권고함. 여기에는 자연재난에 대한 대처방안이 포함됨. 동 문서 발간을 통해 인도적 지원 관련 기존의 원칙과 모범관행과의 일관성을 확보함.
- 노르웨이 정부는 최적화된 인도적 지원활동을 위해 정부부처간, 그리고 부처 내 상호협력이 이루어 지도록 해야 함.

노르웨이 외무부 조직도



NORAD 조직도



핀란드 대외원조 개관

Ⅰ. 원조목적 및 정책

1. 원조 목적

□ 1996년 9월에 수립된 'Decision-in-Principle on Finland's Development Cooperation'에 의한 핀란드 개발협력의 3대 목적은 다음과 같음.

⑴ 빈곤 완화(Alleviation of Poverty) : 빈곤을 누적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빈곤 문제를 교육 부족, 열악한 생활환경, 보건, 식수보급, 식량 및 의류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접근함.

⑵ 환경파괴 예방(Prevention of Environm-ental Threats) : 개도국에서의 환경파괴는 빈곤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야기하므로 빈곤퇴치를 위해 환경파괴를 예방해야 함.

⑶ 평등, 민주주의 및 인권(Equality, Democracy & Human Rights) : 평등, 민주주의와 인권이 개발의 전제 조건으로 안정된 사회의 근간이 됨.

□ 1998년 10월 수립된 'Finland's Policy on Relations with Developing Countries'는 세계 안보 및 경제협력 증진을 추가적으로 핀란드 개발협력의 목표로 지정함.

□ 2002년 2월에 통과된 'Development Policy: Government Resolution'에서 유엔의 천년개발선언(UN Millennium Declaration) 및 빈곤근절을 핀란드 개발협력의 주요 목적으로 명시함.

2. 원조 정책

⑴ 2004 개발정책에 대한 정부 결정(Development Policy:Government Resolution 2004)

- 핀란드는 ODA 관련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지는 않았으나 2004년 2월에 통과된 'Development Policy:Government Resolution 2004'에서는 ODA 정책 수립 및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과 업무 총괄기관의 기능 및 관련 정부기관의 역할 등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음.

⑵ 핀란드 국제개발협력의 개발정책 목적 실행에 대

한 결정(Decision-in-Principle : Operationalisation of Development Policy Objectives in Finland's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 2001년 2월에 수립된 위 결정문은 개발협력 관행을 발전시킬 수 있는 조치를 제시하고 수원국 선정 기준 및 협력방법을 명시함.

(3) 개발도상국과의 관계에 대한 핀란드의 정책(Finland's Policy on Relations with Developing Countries)

- 1998년 10월 수립된 위 정책은 개발협력을 핀란드 외교정책의 중요한 일부로 명시하며 핀란드의 개발정책 목표를 재확인 함.
- 이 정책은 핀란드의 전략적인 목표를 ①세계안보 장려 ②빈곤감소 ③인권 및 민주주의 증진 ④세계적 환경문제 예방 ⑤경제 관련 사안에 대한 논의 활성화로 규정함.

(4) 핀란드 개발협력에 대한 결정(Decision-in-Principle on Finland's Development Cooperation)

- 1996년 9월에 수립된 위 결정문은 핀란드 개발협력의 주요 목표, 실행방법 및 협력채널을 제시함.

II. 원조체제 및 담당기관

1. 외교부

□ 핀란드의 ODA 시행에 있어 유상원조는 물론 무상원조도 외교부에서 총괄하고 있음.

- 핀란드의 경우, ODA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한 산하 기관이 없음.
- UN과 EU 등 관련 국제기구 및 NGO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구체적인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음.
- ODA의 구체적 시행에 있어 NGO와 외교부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외교부 개발정책국 산하에 'NGO liaison Unit'을 별도 설치하여 운영중임.
- 외교부 내 개발협력업무 관장 부서
  - ① 개발정책과(Dept of Development Policy):주로 원조관련 업무수행
  - ② 글로벌 이슈 담당과(Dept of Global Affairs) : 2003년 신설된 부서로 세계화에 관련된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룸.
  - ③ 지역별 담당과(Geographical Depts) : 1990년대에 설립되어 무역, 원조, 정치 및 문화를 총괄하여 내부적 시너지효과 창출

2. 개발정책 위원회(Development Policy Committee)

□ 핀란드는 기본적으로 대외원조를 자국의 외교정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핀란드 외교를 총괄하고 있는 외교부에서 ODA 관련 업무를 총괄 · 조정하고 있으나 동시에 ODA 관련 정부 부처와 민간기관 대표(NGO, 학계 및 기업 대표 등)가 참여하는 개발정책 위원회(Development Policy Committee)도 운영하고 있음.

- 개발정책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핀란드 ODA 정책의 시행에 대한 평가와 정부에 관련 연례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며 제출된 보고서는 차기 연도의 ODA 시행계획 수립시 반영되고 있음.

3. 기타기관

□ 무상원조의 경우, 외교부가 총 원조액의 70% 정도를 집행하고 있으며 나머지 30% 정도는 재무부, 교육부, 농업부, 무역산업부, 사회보건부, 노동부 등 관련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음.

- 핀란드 정부는 정부 내 많은 부처에서 주관하고 있는 ODA 사업의 효율성과 통일성 제고를 위해 외교부가 핀란드 대외원조 관련 정책개발, 행동계획 마련, 관련 예산 계획 수립과 집행, ODA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사업평가, ODA 관련 인력의 채용과 훈련 및 관련 국제협력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음.

Ⅲ. ODA 규모

□ 2003년도 ODA 규모 : US$558백만(ODA/GNI 0.35%)

- 핀란드 ODA의 대부분은 무상원조이며 유상원조의 비율은 2% 이하임.
- 2003년 ODA 총액기준으로 볼 때 DAC 22개 회원국 중 미국(16,254백만불), 일본(8,880백만불), 프랑스(7,253백만불), 독일(6,784백만불), 영국(6,282백만불) 등에 이어 16위이며 ODA/GNI기준으로 볼 때 13위임.
- 1991년 ODA/GNI가 0.81%로 최고치에 이르렀던 이후 구소련연방의 붕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동 비율이 급격히 감소하였음.

〈핀란드 연도별 ODA 및 ODA/GNI 추이〉 (단위: US$백만)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ODA	ODA /GNI	ODA	ODA /GNI	ODA	ODA /GNI	ODA	ODA /GNI	ODA	ODA /GNI
416	0.33	371	0.31	389	0.32	462	0.35	558	0.35

※ 자료: OECD, Statistics, Table 4

Ⅳ. ODA 지원현황

1. ODA 규모: US$558백만(2003년)

(1) 다자간 ODA 규모 : US$250백만(44.6%/DAC 평균 30%)

〈핀란드가 다자간 원조에 의존하는 이유〉

① 비용-효율적임

② 핀란드 대표부가 없는 지역에 대한 효과적 지원

③ 대상 국가에 대한 전문성이 없을 경우 합리적 지원 가능

- 2003년도 기준으로 볼 때 유럽공동체(EC)에 대한 지원 비율이 43.2%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유엔기구에 대한 지원이 31.2%임.

(2) 양자간 ODA 규모 : US$309백만(55.4%/DAC 평균 72.2%)

〈무상원조 비율〉

- 1990년도 초부터 양자간 ODA 모두 무상원조 형태로 지원

  양자간 ODA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긴급원조기금(Emergency and distress relief)의 큰 비중(2001년도 US 41백만불 중 US15백만불)이 핀란드 내의 난민지원을 위하여 쓰여 개발도상국 내의 개발 · 인도적 사업을 위한 재원을 고갈시킨다는 비난을 받아왔음.

2003년도 다자간 ODA지원 현황

(단위: US$백만)

다자간기관		2003년도
세계은행(World Bank)	IDA	35
	기타	–
소 계		35
지역개발은행 (Regional Development Bank)	아프리카 개발 은행(AfDB)	–
	아시아 개발 은행(ADB)	4
	미국간 개발 은행(IADB)	–
	기타	11
소 계		15
유엔기관 (United Nations Agencies)	UNDP	15
	WFP	8
	UNICEF	14
	UNHCR	8
	기타	33
소 계		78
유럽공동체(EC)	EDF	37
	기타	71
소 계		108
기타 다자기구	IFAD	2
	IMF	–
	기타	11
소 계		13
합 계		250

□ 부채탕감

–다른 DAC 회원국들에 비하여 부채탕감(action relating to debt)관련 지원이 적은 편임.

1996년 HIPC Initiative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 핀란드는 HIPC에 대한 양자간 유상원조 193백만 유로를 모두 무상원조로 변환하여 탕감하여 주었음.

※HIPC Initiative란 세계은행이 1990년대 중반에 도입한 개념으로 고채무빈국(highly indebted poor countries을 대상으로 부채를 탕감해주는 운동임.

□ 2003년 양자간 ODA의 41.7%(US129백만불)는 기술협력(technical cooperation)qnans, 14.6%(US45백만불)는 긴급지원(Emergency and Distress Relief), 8%(US25백만불)는 행정비용, 그리고 약 2% (US6백만불)는 NGO지원에 사용되었음. 다른 DAC 회원국들과는 달리 개발식량지원(Development Food Aid)은 거의 없음.

□ 핀란드는 바스킷 펀딩(basket funding, 예산지원(budget support) 및 섹터지원(sector support) 모델 등을 도입하여 실행하고 있음.

– 상기 분야에 1999년~2000년간 매년 US4~9백만불을 지원

– 예컨대 네팔과 잠비아의 교육사업 및 탄자니아의 빈곤감소예산을 지원

2. 10대 수원국(2002–2003년 평균 기준)

□ 10대 수원국은 모잠비크, 아프가니스탄, 탄자니아, 세르비아/몬테네그로, 나미비아, 남아공, 베트남, 니카라과, 에티오피아, 보스니아 순으로, 동 국가들은 최빈개도국(LDCs) 또는 저소득국(Low–income countries)으로 분류되는 국가들임. 이들 국가에 대한 지원비율은 전체 ODA의 약 64.4%(양자 및 다자 통합 기준) 점유

–핀란드는 원조규모에 비해 너무 많은 수원국을 지원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핀란드 외교부가 발간한 'Implementation Plan for the 2001'에 의하면 핀란드는 정책적으로 10개의 수원국을 선정하여 빈곤퇴치를 위하여 장기적으로 협력하기로 함.

–선정된 수원국으로 이집트, 에티오피아, 케냐, 모잠비크, 나미비아, 니카라과, 페루, 탄자니아, 베트남 및 잠비아이며 이중 5개의 수원국만

LDC임.

- 핀란드 외교부는 케냐, 니카라과 및 잠비아를 재평가하고 이집트, 나미비아 및 페루와 같은 중진국을 수원대상국 지위에서 졸업시킬 예정임.

〈2003년도 상위 10대 수원국 지원 규모 및 점유율〉

(단위: US$백만)

순위	국명	지원규모 (2002~2003 평균)	점유율 (2002~2003 평균)
1	모잠비크	17	3.3
2	아프가니스탄	14.4	2.8
3	탄자니아	12.9	2.5
4	세르비아/몬테네그로	8.2	1.6
5	나미비아	8.2	1.6
6	남아공	8.2	1.6
7	베트남	7.7	1.5
8	니카라과	6.7	1.3
9	에티오피아	6.7	1.3
10	보스니아	5.7	1.1
합계		87.89	17.1
ODA 총규모		514	87.9

※ 자료: OECD, Statistics, Table 32

〈상위 10대 수원국 추이-양자간 원조 비율〉

(단위: %)

순위	국명 (1992~93)	%	국명 (1997~98)	%	국명 (2002~03)	%
1	탄자니아	11.2	이집트	6.2	모잠비크	3.3
2	잠비아	6.3	탄자니아	4.7	아프가니스탄	2.8
3	베트남	5.6	잠비아	4.3	탄자니아	2.5
4	케냐	4.0	니카라과	3.7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1.6
5	스리랑카	2.7	구유고슬라비아	3.3	나미비아	1.6
6	모잠비크	2.7	모잠비크	3.0	베트남	1.6
7	이집트	2.6	케냐	2.6	남아공	1.3
8	수단	2.2	중국	2.1	니카라과	1.3
9	페루	1.6	네팔	2.1	에티오피아	1.3
10	나카라과	1.4	말레이시아	2.0	보스니아	1.1
합계		40.3		32		17.1

※ 자료: OECD, The DAC Journal: Development Cooperation 2004 Report

3. 지역별 지원현황(양자간 ODA 기준)

□ 2002~2003년 핀란드 개발원조의 지역별 분포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이 229.7백만불(44.7%)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아시아지역에 대한 지원이 137.3백만불(26.7%)로 그 뒤를 잇고 있음.

- 1982~83년 총 ODA의 68.7%를 차지했던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지원이 2002~03년에는 47.3%로 감소한 반면, 유럽 및 아시아에 대한 지원은 0%에서 8.9%, 22%에서 26.7%로 각각 증가함. 나머지 지역에 대한 지원은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되거나 소폭으로 증가함.

〈지역별 지원현황-양자간 원조 비율〉

(단위: %)

지 역	1982-83	1992-93	2002-03
유럽	0.0	6.5	8.9
사하라이북 아프리카	5.0	12.0	2.6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63.7	43.1	44.7
북중미	3.9	9.0	7.8
남미	3.9	2.3	3.8
중동	1.4	2.5	5.4
서남아 및 중앙아시아	9.6	10.9	14.4
극동아시아	12.4	13.6	12.3
오세아니아	0.1	0.1	0.1
합 계	100	100	100

※ 자료: OECD, Statistics, Table 32

4. 소득그룹별 지원현황(양자간 ODA 기준)

□ 2002~03년도 최빈개도국(LDCs)에 48.0%, 중저소득국에 34.0%를 지원

- 최빈개도국(LDCs)에 대한 지원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반면 중저소득국에 대한 지원은 1980년대 초에 비해 2배로 증가함.
- 2001년 기준으로 핀란드는 96개 수원국에 대해 ODA 기금 지원.

〈지역별 지원현황-양자간 원조 비율〉

(단위: %)

지 역	1982-83	1992-93	2002-03
최빈개도국(LDCs)	56.5	36.5	48.0
기타저소득국(Other LICs)	25.5	22.1	16.4
중저소득국(LMICs)	15.8	35.1	34.0
고중소득국(UMICs)	2.1	5.9	1.7
고소득국(HICs)	-	-	-
MADCT[1]	0.1	0.4	-
합계	100	100	100

1) More Advanced Developing Countries and Territories(동 국가에 대한 지원은 OA(Official Aid)로 분류)

※ 자료: OECD, Statistics, Table 32

5. 분야별 지원현황(2003년도)

□ 원조예산의 큰 비중(46.3%)을 사회 및 행정 인프라에 지원함.

- 1990년대부터 빈곤감소 ODA 정책의 주요 현안으로 채택하면서 빈곤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 사회 및 행정 인프라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

□ 2000~01년 기초 사회 서비스-(기초교육, 기초보건, 영양, 식수 및 위생)에 대한 지원이 양자간 ODA의 11.6%를 차지하여 DAC 평균인 14.8% 보다 현저히 낮은 편에 속함.

□ 사회 · 행정 인프라 분야 및 긴급원조는 10년 전 15.9% 및 3.7%에 비해 2002~03년도에는 49.3% 및 11.9%로 크게 증가한 반면 나머지 분야는 대부분 감소세를 보임.

〈2003년도 분야별 지원실적〉

(단위: %)

분야		2003년도
사회 및 행정 인프라[1] (Social and administrative infrastructure)	교육(기초교육)	10.6(0.8)
	보건(기초보건)	8.1(2.0)
	인구	1.3
	식수 및 위생	4.4
	정부 및 시민사회	16.9
	기타 사회인프라/서비스	4.9
소 계		46.3
경제인프라[2] (Economic infrastructure)	교통 및 통신	1.7
	에너지	3.6
	기타	1.6
소 계		7.0
생산 (Production)	농업	2.2
	제조업, 광업 및 건축	1.4
	무역 및 관광	0.5
소 계		4.0
다부문(Multisector)		15.5
프로그램원조(Programme assistance)		3.1
부채탕감(Action relating to debt)[3]		-
긴급원조(Emergency aid)		11.5
행정경비(Administrative expenses)		6.8
기타(Unspecified)		5.9
합 계		100

1) 학생 및 연수생 포함 2) 인구 및 생식보건 3) 비ODA 부채탕감 포함

※ 자료: OECD, Statistics, Table 19

□ 2003년도 부채탕감/ODA 비율은 1.2%로 DAC 평균인 13%에 크게 못 미치고 있으며 모두 HIPC (Highly Indepted Poor Country)의 부채탕감을 위하여 쓰여졌음.

〈분야별 지원실적 추이〉

(단위: %)

지원년도	사회/행정인프라	경제인프라	농업	산업/기타생산	물자/프로그램지원	긴급지원	기타
1982-83년	15.9	21.1	16.9	35.1	0.2	3.7	7.2
2002-03년	49.3	5.4	4.3	2.2	2.6	11.9	24.4

※ 자료: OECD, Statistics, Table 19

Ⅴ. 주요 의제별 정책

1. 빈곤감소

□ 수원국의 거시경제정책에 개입하는 등 수원국 국가 빈곤 감소 전략을 적극적으로 지원

- 핀란드 정부의 지원이 수원국 중앙정부에 집중화되는 현상을 막고 빈곤층이 많은 지방에 지원이 효과적으로 제공되도록 PRSP 내의 전략적 변화를 반영시키고 있음.
- 핀란드의 개발정책은 DAC의 빈곤감소 지침(DAC Guideline on Poverty Reduction)과 일치함.
- 핀란드 정부는 빈곤감소를 다면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다양한 정책을 통해 이를 접근하고 있음.

□ 핀란드 정부는 성과 및 결과에 대한 상호 책임성을 지지하고 있지만 ODA 예측가능성(predictability) 측면에서는 부족함.

- ODA 공약 및 지출액을 수원국에 통지하는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음.

□ 빈곤감소를 위한 새로운 지원 유형(modalities)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으며 ODA가 수원국의 국가예산에 완전히 반영되어야 된다고 믿는 바, 동 취지에서 수원국에 대한 예산지원(budget support)을 늘려나갈 예정임.

- 담당 직원들이 이러한 새로운 지원 형식을 활용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교육에 투자하는 등 조직적 변화를 실행하고 있음.

2. 반부패

□ 부패방지는 빈곤감소, 환경보존, 평등·민주주의 및 인권 등 핀란드 정부의 개발협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적 정책임.

□ 개발협력사업에 적용될 수 있는 반부패 지침서인 『Preventing Corruption : a Handbook of Anti-Corruption Technique for Use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를 2001년에 발행

- 이 지침서는 원조조화(harmonization)를 장기적으로 부패를 감소시키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지적함. 특히 투명하고 모든 당사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조달 규제를 통해 부패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함.

〈〈반부패 지침서의 주요 내용〉〉

①국제기구와의 협력(Collaboration with Int'l Organizations): 국제협약 작성 및 다자간 토론회장에서 부패관련 논의 장려. 국제금융기구 및 유엔기구의 반부패 프로젝트 지원.

②반부패 전략(Anti-Corruption Strategies): (i)수원국 내의 정책수립 및 사법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반부패법의 개정, (ii)부패가 심각한 공공부문 식별, (iii)반부패 절차 수립 (iv)공공부분과 민간부문 및 종교단체를 포함한 시민사회의 협력강화를 통해 수원국의 반부패전략 지원

③핀란드 개발협력의 부패위험 감소 장치(Mechanisms to Reduce Risk of Corruption in Finnish Development Assistance): (i)협약 내의 법적으로 실효성이 있는 반부패 조항을 포함 (ii)basket funding 또는

〈2000-01년 반부패 프로젝트〉

분야	사업	지원액(US천불)	년도
아프리카(비특정)	아프리카 역량개발 재단의 거시경제 연구 지원	1,807	2001
탄자니아	반부패 작업 지원	1,100	2000
아프리카(비할당)	Good Governance를 위한 아프리카 개발은행 위탁기금	1,056	2002
시르비아 · 몬테네그로	국제투명성의 책임성 프로그램	1,037	2002
LDCs(비특정)	국제투명성 및 핀란드 반부패 전문가 지원	294	2000
나미비아	재정부의 예산 체계화 및 정부지출 감시 역량개발	226	2001
LDCs(비특정)	최고 심사 단체 국제기구의 공공계정 심사(노르웨이 오슬로)	38	2001

예산지원 시 적절한 실행 기관, 행정적 규제 및 책임성 존재, 감사절차 존재 여부 등을 감안하여 사업지원 여부를 결정 (iii)투명하고 공개적인 절차를 통해 개발협력 프로젝트를 실행할 컨설팅회사를 선정

④특정 반부패 프로젝트(Specific Anti-Corruption Projects):반부패 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 정부 내의 반부패 개념 및 도구들의 효과적인 전파를 위하여 워크숍, 세미나 등을 실시하여 반부패 지침서의 실질적인 실행을 도모함.

3. 정책일관성

□ 핀란드 정부는 정책 일관성을 매우 중요한 의제로 생각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비전을 세우고 조직을 일부분 개편하였으나 명확한 정책, 정치적 의지 및 분석역량을 갖추지는 못한 실정임.

①정책적 일관성을 달성하기 위한 비전:"개발도상국과의 관계에 대한 핀란드의 정책은 대외 · 안보 정책, 통상 정책 및 국제협력정책의 목적을 일치시키고 조정하는데 있음"

②정책적 일관성을 달성하기 위한 조직

- 핀란드 외교부 내에 개발을 위한 정책 일관성을 위한 부서는 따로 존재하지 않지만 통상 및 대외정책이 외교부 내에서 다루어짐으로써 정책적 일관성을 달성할 가능성을 높임.
- 정부부처간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하여 시민사회 대표들을 포함한 여러 위원회를 운영중임.
- 외교부는 환경부, 그리고 사회 및 보건부와는 정책 일관성 추진 합의에 성공하였지만 통상부와는 이견이 많음.
- 외교부 내의 공적개발원조 업무를 대외통상 업무와 완전히 통합시켰으며 각 지역별 부서 내에서 원조, 통상, 정치 및 문화 등에 대한 정책이 일괄적으로 이뤄지므로 정책적 일관성을 달성하기 용이해짐.

□ 핀란드의 주요 정책적 일관성 의제:대부분의 주요 정책들은 개발협력 목적에 크게 부합하지만 농업 및 무이자 차관 등의 분야에서는 개선해야 할 점들이 많음.

①농업정책

- 농업에 대한 핀란드 정부의 지원은 유럽공동체(EU) 국가들 중 가장 높음.

GDP의 3%를 차지하는 농업은 취약한 기후조건 때문에 많은 보조금이 필요하며 2001년 기준으로 170억 EURO 상당의 농업보조금을 핀란드 정부

(58%) 및 EC의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42%)를 통해 지원

- 1995년 EU 가입시 취약산업분야(Least Favored Areas)에 대한 새로운 지원제도를 도입케 하여 농촌에 대한 보조를 두 배로 늘림.

② 무이자 차관(Concessional Loan)

- 공여국의 수출을 통해 국내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흔히 쓰이고 있으나 이러한 차관이 빈곤감소를 위해 이용되지 않아 비판을 받고 있음.
- 핀란드의 경우 1987년부터 이런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핀란드 수출보증기관과 핀란드 외교부의 협력 하에 운영되고 있음.
- 1991년까지 급성장하였으나 무역왜곡 현상 때문에 OECD국가들은 1991년 헬싱키에서 무이자 차관에 대한 보다 엄격한 규제를 설립함.

현재 핀란드의 무이자 차관은 헬싱키 규제를 따르고 있으며 차관의 절반은 시장에서 투자를 유치하지 못하는 사회 인프라 및 환경 관련 분야에 이용되고 있음.

□ 특히 농업분야에서 EU의 공통농업정책(CAP: Common Agricultural Policy)은 유럽의 농민들에게 보조금을 제공하는데 이는 개도국의 농업 분야에서의 생존능력에 영향을 미치게 됨에 따라 핀란드 개발협력 정책수립 및 우선 순위 결정등에 영향을 줌.

4. 비조건부(Untied) 원조

□ 원칙적으로 모든 기술협력(Techical cooperation)에 대한 원조는 비조건부 원조임. 그 결과 비용효율성을 제고하고 수원국의 주인의식을 증진시킬 수 있었음.

□ 기술협력 및 행정비용을 제외한 양자간 ODA의 약 86%가 비조건부(untied)로 지원됨.

〈2003년 양자간 ODA 지원조건-Tying Status〉

(단위 : US백만불/%)

비조건부		부분조건부		조건부		총 ODA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192	85.8	-	-	32	14.2	224	100

※ 기술협력 및 행정 비용 제외
※ 자료:OECD, Statistics, Table 24

Ⅵ. 조직운영

1. 개발협력 조직

□ 외교부 조직 하에 3개의 동등한 장관직이 있으며 3장관 모두 각료임.

① 대외통상 및 개발협력 장관(Minister for External Trade and Development Co-operation)

② 외무장관(Minister for Foreign Affairs)

③ 환경장관〈북유럽 협력〉(Minister for Environment〈Nordic Cooperation〉)

2. 주요부서

(1) 개발정책과(Department for Development Policy)

□ 기능: 외교부 내에 개발협력 업무만 다루는 유일한 부서

□ 업무영역

- 정책 및 연구
- 운영 및 재정 관련 계획 및 감시 기능, 통계 및 보고 기능
- 품질조정 및 지침개발
- 평가 및 내부심사
- 관련 국제협약, 법안 준비 및 기타 법적 문제 관련 업무
- 국제 및 국내 NGO 지원
- 도서관 서비스를 포함한 대내·외 정보통신 관리
- EU 및 OECD 내의 개발협력 관련 업무
- 국제기구에 재직 중인 핀란드 전문가 모집 및 교육
- FINNFUND 및 무이자 차관 정책

⑵ 지역과(Geographical Departments)

□ 4개의 지역과 : ①유럽과(Dept for Europe) ②아시아 및 미주과(Dept for Asia and the Americas) ③동유럽 및 중앙아시아과(Dept for Eastern Europe and Central Asia), ④중동 및 아프리카과(Dept for the Middle East and Africa)

□ 업무영역

- 핵심 업무로서 정무, 통상, 개발협력 및 문화 관련 사안들에 대한 협력방안을 국가별로 기획하고 집행함.
- 지역 및 국가별 정책일관성 달성
- 양자간 개발협력 프로그램의 실행

⑶ 글로벌 이슈 담당과(Dept for Global Affairs)

□ 2003년 설립되어 세계화 관련 사안들에 대한 협력, 조정 및 일치 기능을 외교부 내 그리고 외교부와 국내 이해당사자(stakeholders) 간에 수행하고 있음.

□ 주로 UN, 국제금융기구, 환경 및 인권 문제 그리고 인도주의 관련 현안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양자간 사업을 통해 습득된 경험이 국제기구에 반영되고 국제적 이슈들이 외교부 업무에 반영되도록 함.

□ 국회의원들에게 국제적 사안 및 행사(도하, 몬테레이, 요하네스버그 정상회의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3. 개발협력국의 인력관리

1) 직원규모(2002년 기준)

- 외교부 전체 직원수:973명(파트타임 인력 포함)
- 개발협력 업무수행 직원수:160명(외교부 전체의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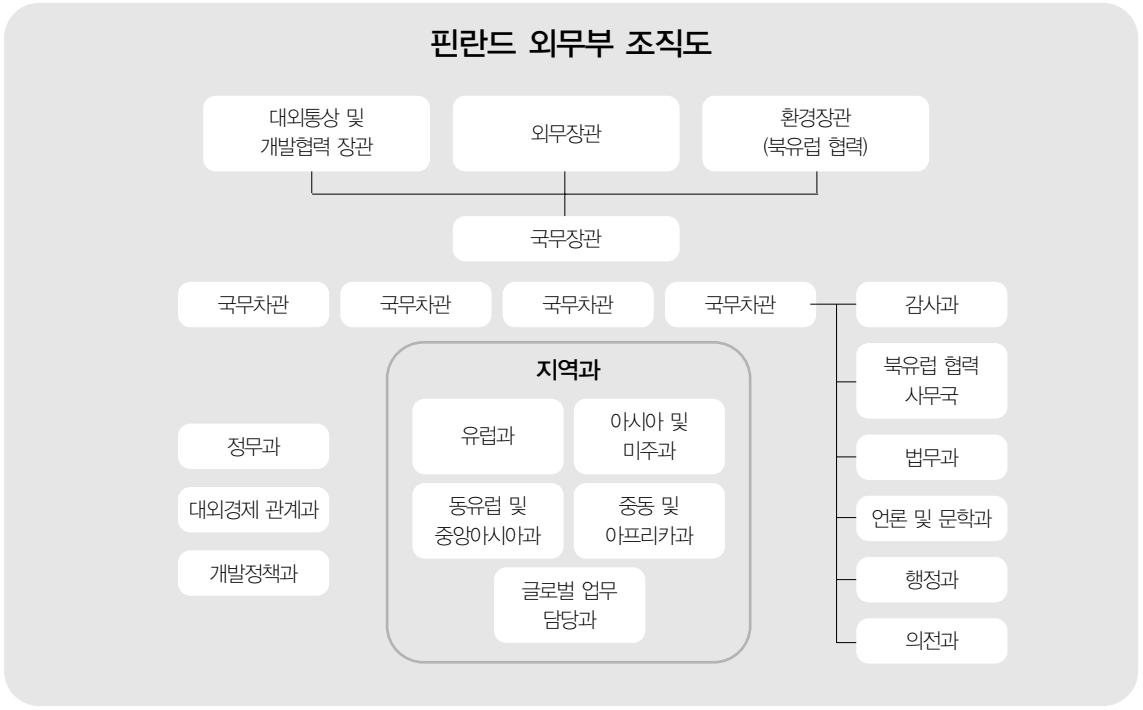
2) 직원구성

- 현재는 대부분 일반 직업 외교관(1990년대 초부터 원조전문가에 대한 모집을 중단)
- 지역과 내에 빈곤, 양성평등, 보건 등 분야별 자문관이 20명 있음.

3) 인력운영상 문제점

①핀란드 외교부 내 인력의 부족으로 개발협력업무의 실행, 조정 및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US10백만불 규모의 ODA를 집행하기 위하여 약 6~7명의 직원이 필요함.
- 일반 외교직 직원(generalist diplomatic staff)으로 부족 인력을 충원한 결과, 기존 전문가들의 업무부담 증가
- 인력부족의 주요 원인으로 (i)예산규모에 비해 분산된 개발협력 사업 (ii)전문가가 아닌 일반 외



교직 직원을 모집하는 인사 시스템 그리고 (iii) 해외사무소 직원에 대한 부적절한 업무분장 및 책임성 문제임

② 순환근무 및 해외공관 근무가 잦으며 개발협력 업무에 전문성이 없는 직원이 관련 업무를 맡게 될 확률이 높음.

③ 개발협력과 다른 분야의 상호작용 증진은 용이하게 조직개편되었으나 빈곤퇴치가 주류화된(Mainstreaming poverty reduction)시스템이 아님.

Ⅶ. 2001년 DAC 동료평가 주요 결과

□ 원조정책 및 대국민인식

- 2003년 4월 수립된 새 정부는 외교부 내 여러 부서들 간의 시너지 및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외통상 장관직 및 개발협력 장관직을 통합하고 새롭게 조직을 개편함.
- 핀란드는 유엔의 천년개발목표를 지지하고 있지만 이를 2001년 실행계획 백서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핀란드는 다음 백서에 빈곤감소를 핀란드 개발협력의 최우선적인 목적으로 명시하고 유엔의 천년개발목표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원조 규모 및 배분

- 1990년대 구소련연방의 붕괴 이후 ODA 규모가 급격히 감소하였으나 새 정부는 2010년까지 유엔목표치 ODA/GNI 0.7%를 달성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음. 2001년 ODA/GNI 비율은 0.32%였으며 2007년에는 0.45%를 달성할 예정임.

- 원조규모가 급격히 증가할 경우를 대비해서 다자 및 양자간 원조 내의 배분전략을 사전에 세울 필요가 있음. 특히 다자원조 및 관련 국제기구를 위한 보다 명확한 전략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 핀란드는 기존 여러 수원국에 분산되어 있는 원조를 10개의 주요 수원국으로 집중화시켜 보다 높은 원조 효과를 거두고 다른 공여국 및 수원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역량을 기를 필요가 있음.

□ 정책일관성

- 핀란드는 명확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분석능력을 향상시켜 개발정책의 일관성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임.
-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동농업정책(CAP)의 부정적인 효과를 줄이기 위하여 이 정책을 개혁해야 하는 바, EU 회원국으로서 핀란드는 유럽공동체 내 정책일관성, 특히 농산물에 대한 정책일관성을 달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임.
- 1998년도 백서가 제시한 대로 핀란드는 빈곤감소에 대한 효과가 불분명한 무이자차관 사업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원조관리 및 실행

- 현재 핀란드 개발협력은 현지 프로젝트에 투입될 직원 부족으로 원조의 질이 떨어지고 조정·협력 능력에 큰 차질을 경험하고 있음. 향후 크게 증가될 ODA 규모 및 원조의 질과 효과성에 대한 관심을 감안하여 직원 수를 증가하고 직원의 전문성을 개발하여 직원들의 능력배양에 신경을 써야 함.
- 개발도상국 내의 핀란드 개발협력사업에 대한 결정권이 현지 대사관에 많이 이관되었으므로 협력 수원국 및 분야를 제한하고 권한을 위임하여 대사관 직원들의 능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 현재의 개발협력 평가시스템은 개발정책과 위원회(Executive Board of the Department for Development Policy)가 담당하고 있으므로 개발협력 수청자와 평가자가 동일주체라는 측면에서 신뢰하기 어려움. 뿐만 아니라 이 위원회가 다른 지역과에 대한 평가를 할 권한이 없으므로 부분적인 평가에 그침.
- 따라서 핀란드는 평가 시스템의 독립성 및 관할범위뿐만 아니라 후속 메커니즘 및 체계적인 학습 메커니즘을 향상시킬 여지가 많음.
- 핀란드 외교부의 체계는 빈곤감소를 명확한 우선과제로 반영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핀란드가 적극도입할 의사를 밝힌 새로운 원조모델에 관한 지침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핀란드는 국가전략을 수립하여 자국의 ODA 사업에 대해 틀(frame-work)을 마련하여 수원국과의 대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함.

□ 대국민 인식제고

- 전반적으로 핀란드 국민들은 개발원조에 대한 지지 및 이해가 높은 편이지만 새로운 개발원조 모델 및 정책일관성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며 핀란드 내의 문제들에 비해 개발협력에 대한 관심이 낮으므로, 핀란드 정부는 핀란드 개발협력의 새로운 원조전략을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대국민 교육전략을 준비할 필요가 있음.

독일의 ODA 현황

Ⅰ. ODA 관련법 제정 여부

□ 독일의 경우, 아직 대외원조(ODA) 관련법이 제정되어 있지는 않는 상황임. 이와 관련, 독일도 대외원조사업의 정책일관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대외개발지원정책법 제정' 이나 '대외개발지원정책 각료회의 설치'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왔으나 현재까지 구체화된 대책은 없음.

- 1994년 사민당(SPD) 의원들이 '대외개발지원정책법' 제정을 발의하여 연방하원 경제협력개발위원회에서 1998년까지 몇 차례 논의된 적이 있으며 현재도 일부에서 '대외개발지원정책법' 의 제정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입법 움직임은 없는 상황임.

□ 현 사민당-녹색당 정부는 대외원조업무를 주관하는 연방경제협력개발부(BMZ)의 위상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음.

- 타 연방부처에서 담당해 온 대외원조 관련 업무를 연방경제협력개발부(BMZ)로 이관
- 국가안보회의(Bundessicherheitsrat)에 연방경제협력개발부장관 참석
- 2000년 연방부처공동업무지침(GGO) 개정을 통해 타 부처의 입법추진에 대한 연방경제협력개발부의 검토권 부여

Ⅱ. 대외원조 시행기관 관련

□ 독일은 유상 및 무상원조로 나누어 시행기관을 구분하지는 않으며 연방경제협력개발부(BMZ)가 전체 ODA의 약 63%(2003년 기준)를 시행하고 있지만 전문분야별로 각 연방부처가 부분적으로 대외원조를 시행하며 주정부도 별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독일의 2003년 ODA〉 (단위: 1000유로)

재 원	양자	다자	전체	비중(%)
연방경제협력개발부	2,370,196	1,392,379	3,762,575	62.66
외무부	259,096	39,112	298,208	4.97
연방하원	60	0	60	0.00
연방보건복지부	0	27,665	27,665	0.46
연방소비자보호농업부	100	23,162	23,262	0.39
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2,595	12	2,608	0.04
연방경제노동부	0	11,772	11,772	0.20
연방교육연구부	9,737	985	10,722	0.18
연방내무부	1,539	6,709	8,248	0.14
연방교통부	0	158	158	0.00
연방재무부	74	0	74	0.00
EU기여금 중 ODA 환산	0	905,410	905,410	15.08
주정부	606,788	0	606,788	12.11
연방자산(부채경감)	1,122,100	0	1,122,100	18.69
기타	209,882	0	209,882	3.50
상환액	-988,859	-8,901	-997,760	-16.62
순ODA지출 총계	3,593,319	2,411,357	6,004,676	100.00

※ 자료: 연방경제협력개발부(BMZ)

〈연방경제협력개발부의 2004년 예산〉 (단위: 100만 유로)

양자						다자				
정부				NGO	기타	UN 국제기구	IMF 세계은행	세계지역 은행	EEF	국제환경
재정	기술	식량	인력							
982.5	594.9	71.5	287.8	463.6	32.5	1,289.0	155.2	163.8	468.7	138.0

※ 자료: 연방경제협력개발부(BMZ)

Ⅲ. 기타 관련 사항

□ 독일의 유상 · 무상원조 비율

- 독일에는 유상 · 무상원조에 대한 집계자료가 없음.
- 독일은 대외원조를 크게 형태상 ODA/OA, 양자/다자, 정부/비정부조직 등으로 구분하며 내용적으로는 재정원조, 기술원조, 인력원조 등으로 구분
- 재정원조는 대부분 장기저리차관 등 유상원조(LDC국가에 대해서는 무상)이며 기술 및 인력원조는 대부분 무상으로 제공
- 연방경제협력개발부의 2004년 예산총액 약 37.83억 유로 가운데 재정원조액은 약 9.83억 유로

□ 독일의 무상원조 시행기관

- 독일의 재정원조는 주로 재건은행(KfW), 기술원조는 주로 기술협력공사(GTZ), 인력원조는 독일개발서비스(DED)와 InWent가 주로 담당하며 기타 전문분야에 따라 연방지구과학 및 천연자원연구소(BGR), 연방물리기술청(PTB), 독일학술교류처(DAAD), 훔볼트재단(AvH), 독일연구재단(DFG)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

□ 독일의 부처간 위원회

- 대외원조사업에 다수 부처가 관련될 경우, 관계부처간 위원회(IMA:Interministerieller Ausschuss)가 구성되어 조정작업
- 대외원조의 기획과 실행, 평가를 위해 1961년 기존의 외무부 및 연방경제부 담당 업무를 통합해 설립된 연방경제협력부(1993년 연방경제협력개발부로 개칭)는 1964년 기술원조, 1972년 재정원조, 1998년 유럽연합 차원의 개발원조 등 업무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으나 원조 관련 쌍무협정과 인도주의적 지원 등과 관련된 사항은 외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교역 및 체제전환국 지원 관련 문제는 연방경제노동부(BMWA), 세계은행이나 IMF와 관련된 사항은 연방재무부(BMF), 환경 관련 지원은 연방환경부(BMU)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하며 특정 전문분

야에 대해서는 타 부처가 주도

□ 해외긴급재난 발생시 지원체제

- 독일은 2004년 5월 1일 연방국민보호 및 재난구호청(BBK:Bundesamt fur Bevolkerungsschutz und Katastrophenhilfe)을 신설하여 방재 및 구호 · 지원책을 총괄토록 하였으며 해외긴급재난 발생시 외무부 및 재외공관, 국경수비대 및 연방군 등과 협력하여 신속지원체제를 구축
-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영사법(Konsulargesetz), 연방국경수비대법(Bundesgrenzschutzgesetz) 등에서 규정

[자료:주독일 대사관]

미국의 ODA 현황

Ⅰ. 대외원조(ODA)법 제정여부에 관한 사항

□ 관련법이 있을 경우, 유상 및 무상원조를 포괄하는 법인지 유상 또는 무상원조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인지 여부

- 미국 정부에는 전반적인 공적개발원조(ODA)법이 없으며 별도의 ODA 예산도 없는 바, 1961년 대외원조법(FAA : Foreign Assistance Act of 1961)이 미국의 대외원조 시행관련 제반 법적요건(statutory requirement)을 포괄하고 있어, 미국의 개발원조의 근거가 되는 가장 중요한 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법은 매년 수정되고 있음.
- 상기 외에 중요한 법으로 Foreign Affairs Reform and Restructuring Act of 1998가 있는데대외원조의 이행관련 국내적 조직문제 및 예산에 관한 것이며 그외 Agricultural Trade and Development Act of 1958이 있는 바, 이는 주로 식량원조 및 농업서비스에 관한 것임.

※ USAID는 1961년 대통령의 행정명령(Executive order)에 의해 설립되었을 당시에는 행정명령은 필요시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다는 점에서 temporary agency였으나, 상기 1998년 Act로 인해 상설적인 조직이 되었음.

- 상기 외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ct of 1979가 있었으나 폐지되었음.
- 상기 법들은 개발지원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동 법들에 포함되어 있는 대외원조에 관한 것은 모두 무상원조에 관한 것임.

Ⅱ. 대외원조 시행기관 관련사항

□ 유상원조 및 무상원조 담당기관이 일원화되어 있는지 또는 각각 별도의 조직으로 되어 있는지 여부

- 미국이 시행하는 무상원조의 경우, USAID가 가

장 중요한 기관이라고 할 수 있으나 개발원조는 국무부, 재무부, 농무부, 국방부, 평화봉사단 등 50여개의 정부부처 또는 기관이 담당하고 있음 (유상원조는 아래에서 설명).

Ⅲ. 기타 사항

□ 미국은 대외원조에서 총액기준 무상원조가 99% 이상을 차지하는 바, 유상원조(soft loan)의 경우, Title 1 Food Aid Loan이라는 명칭으로 미 농무부에서 시행하는 한 가지 프로그램 밖에 없으며 이는 PL(Public Law) 480을 법적 근거로 하고 있음.

- 미국 정부는 유상원조보다 무상원조가 바람직하다는 인식 하에서 60년대부터 유상원조를 점진적으로 감소시켜 왔음.

□ 무상원조 시행기관이 분산되어 있을 경우, 전담기관과 여타 기관 간의 사업 비중

- USAID가 미국 ODA의 약 50% 정도를 담당, 여타 기관이 나머지 50%를 담당하며 USAID는 양자지원의 75% 정도를 담당함(미국 무상지원의 경우, 다자지원이 22%정도, 나머지가 양자지원).
- Millennium Challenge Account가 설치된 이후 상기 USAID가 미국 ODA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 조금 못 미치는 수준으로 하락하였음.

□ 대외무상원조사업을 다수의 부처(기관)이 수행시 조정기능 여부

- 조정문제와 관련, FAA of 1961에 근거하여 대통령 산하 NSC(National Security Council)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NSC가 조정역할을 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USAID, 재무부, 국무부 등 다른 기관이 조정역할을 하도록 역할을 위임(delegate)함.
- 이러한 조정은 FAA of 1961에 근거하여 설치되는 다양한 위원회 개최를 통해 이루어지며(동 위원회에 각종 관계부처들이 참석), G-8 정상회의 또는 유엔총회에 대비한 Working Group 구성 등을 통해 조정하기도 함.

□ 해외긴급재난 발생시 자국민 또는 피해국에 대한 지원체제와 관련된 법령 유무

- 해외긴급재난 발생시에 대비한 기금으로 US Emergency Fund for Complex Foreign Crisis 및 International Disaster and Famine Assistance(IDFA)가 있는 바, 근거 법령은 상기 FAA of 1961이며 USAID 예산에 포함되어 운영되고 있음.

[자료:주미 대사관]

벨기에의 ODA 현황

Ⅰ. 대외원조법 제정 여부

□ 벨기에는 2003년까지 무상(grants)원조는 외교부(1999년 대외협력법에 근거)가, 유상(soft loans) 원조는 재무부(1997년 대외재정지원 행정명령－국회심의를 거치지 않은 행정 결정)가 별도로 관장해 오다, 2003년 대외재정지원 행정명령을 개정, 유상원조 업무를 외교부로 이관하고 2004년 예산부터 유무상 원조를 외교부 예산으로 편입시켰음.

－유무상원조 예산의 통합은 예산상 단일화가 바람직스럽다는 예산처의 권고를 외교부와 재무부가 수용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되었음.

－유상원조는 상기 1999년 대외협력법에 규정되어있지 않으며 대외재정지원 조례 외에 근거가 되는 상위 법규는 없음.

Ⅱ. 대외원조 시행 기관

□ 외교부 산하의 벨기에 기술협력청(Belgian Technical Cooperation)에서 유·무상 양자 지원을 전담하며 국제기구 등을 통한 다자적 원조는 외교부 및 해당 부처에서 담당함.

Ⅲ. 유상원조와 무상원조의 비율

□ 원조의 대부분은 무상원조 형태이며 유상원조는 극히 일부분임.

－2004년 총액 기준 무상원조 98%, 유상원조 2%

Ⅳ. 해외긴급재난 발생시 자국민 및 피해국에 대한 지원체제와 관련한 법령 유무

□ 벨기에 자국민에 대한 재난관련 지원은 영사국에서 담당하며 대외 원조와는 별도 체제로 구성

□ 긴급재난 지원은 2단계로 구성되어 있음.

- 1단계:외교부 별도 예산으로 연간 1백만 유로를 긴급구호기금으로 마련, 수상실의 주도로 관계 장관회의를 거쳐 1차 구호품(식품, 의약품, 임시 거주 용구 등) 구입 및 수송(벨기에 Red Cross가 주관)
- 2단계:1996년 대외 긴급구호 및 재건지원 행정명령에 의해 연간 22백만 유로의 긴급 구호예산을 마련해 놓고 있으며 이중 10백만유로는 UN CAP (Consolidated Appeal Process)에, 12백만 유로는 벨기에 NGO를 통한 지원에 투입(상기 1항의 1999년 대외협력법상의 무상원조와는 별도 체제로 운영)

[자료:주벨기에 대사관]

포르투갈 ODA 현황

Ⅰ. 대외원조법 제정 여부

□ 포르투갈은 대외원조에 관한 기본법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며 99년 국무회의 의결(Resolution of the Council of Ministers, n^{0} 43/99.5.18)로 채택된 ODA 기본정책을 담은 전략문서(Strategic document)인 'Portuguese Cooperation in the Threshold of the 21st century'를 토대로 매년 재무부와 외교부간의 협의를 통해 지원규모 등을 국가 예산에 반영

－동 문서는 유 · 무상 원조를 모두 포괄하여 규정

※ODA 예산편성과정에서는 IPAD가 주도적 역할을 담당

Ⅱ. 대외원조 시행기관

□ 포르투갈의 대외원조는 현재 유상원조와 무상원조 담당기관이 달라 이원화되어 있으나 유상원조 규모가 미미한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일원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IPAD가 대외원조 시행기관 중 핵심 역할 수행

－무상원조의 경우, 포르투갈 외교부가 대외원조 정책을 결정하고 IPAD가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고 있으며, 보건부 및 교육부 등 개별부처에서도 병원, 학교건립 등 독자적으로 대외원조정책을 수립, 집행 가능

－유상원조는 재무부가 외교부와 협의하여 지원대상국가, 지원규모, 지원분야 등을 결정하며 국영은행인 Caixa Geral de Depositos가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동 결정 사항을 집행

Ⅲ. 기타 관련 사항

□ 유 · 무상 원조의 비율

－2003년의 경우, 무상원조가 99.26%, 아프리카

〈각국별 CARDS 프로그램 원조 규모〉

	무상	2001년 유상	기여금	무상	2002년 유상	기여금	무상	2003년 유상	기여금
양자	185 (90.38)	19.70 (9.62)	–	194.31 (98.41)	3.13 (1.59)	–	162.15 (100.41)	−0.65 (−0.40)	–
다자	94.55 (99.47)	–	0.50 (0.53)	140.92 (97.29)	–	3.93 (2.71)	118.64 (97.74)	–	2.74 (2.26)
소계	279.55 (93.26)	19.70 (6.57)	0.50 (0.17)	335.23 (97.94)	3.13 (0.91)	3.93 (1.15)	280.79 (99.26)	−0.65 (−0.23)	2.74 (0.97)
총계		299.75 (100.00)			342.29 (100.00)			282.87	

수원국에 대한 유상원조를 무상원조로 전환(부채탕감)함에 따라 유상원조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었고국제기구를 통한 자본기여금은 0.97% 수준

- 유상원조의 경우, 지원규모가 미미할 뿐만 아니라 비중도 계속 감소

□ 포르투갈 IPAD과 여타 무상원조 시행기관간 사업비중과 관련, IPAD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80~90%이며 보건부, 교육부, 농림부 등 여타 부처는 10~20% 수준

- Santos 부청장은 중복회피 등 대외원조의 효율성 제고와 통계집계 강화 등 여러모로 조정기능 강화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고 언급

□ 해외긴급재난 발생시 지원체제 관련, 피해국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별도의 법령이 없어 작년말 Tsunami 같은 재난 발생시에는 사안별로 국무회의에서 지원규모 등을 결정하고 자국민에 대해서는 『귀국계획』(Return Plan)에 따라 귀국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타 금전적 지원은 없다 함.

Ⅳ. 참고사항

□ 포르투갈은 포괄적 협력프로그램(Programa Indicativo Cooperacao)에 관한 외교장관간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자국의 ODA를 앙골라, 모잠비크 등 과거 식민국가와 東티모르 등 포어사용국공동체(CPLP) 회원국에 매년 50% 이상을 지원해오고 있음.

□ 포르투갈의 2005년도 무상원조 규모는 110백만 유로 수준

□ IPAD는 IPAD에 등록된 NGO를 통해서도 무상원조를 시행중

□ ODA 통계집계는 IPAD가 수행하고 있는데 종종 관계부처의 제출기간 미준수 등 비협조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 경우 오히려 역으로 포르투갈 재외공관을 통해 ODA지원 통계를 보고받아 집계 후 매년 4월(잠정치) 및 6월(확정치) 중 OECD/DAC 측에 제출하고 있다고 함.

[자료:주포르투갈 대사관]

對모로코 미국 원조 동향

Ⅰ. USAID의 對모로코 원조 현황

□ USAID는 모로코 독립 이후 1960년대부터 對모로코 협력사업을 시작하여 현재 3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연간 2천5백만불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사업은 교육 및 직업훈련, 경제개발 및 직업창출, 민주주의 및 정부기반확립 등 크게 세 분야로 나뉘며 현재 2004~2008년 중장기 사업계획에 따라 총 1억 2천만불의 사업이 추진될 예정임.

□ 그 중 경제성장 및 직업창출 분야 협력의 경우 2004년 미국-모로코 간 FTA체결에 따라 자유무역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모로코의 각종 경제정책에 자문을 제공하고 농업 등 기간산업에서 모로코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품질향상 및 상업화를 지원하고 있음.

□ USAID는 그간 아틀라스 산맥 이남 및 사하라지역(Ouarzazate 및 Zagora)에 협력사업을 중점 수행하였으나 2004년 이후 모로코 북부 3개 지역(Oujda, Meknes, Casablanca)을 사업대상지로 선정, 상기 3개 분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Ⅱ. 외국 원조기관간 對주재국 무상 원조사업 조화 필요성

□ 모로코는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사회 각 부문에서 프랑스와 전통적 협력관계를 맺고 있으며 프랑스개발청(Agence Francaise de Development :AFD) 외 정부부처별, 지방자치단체별 협력 또한 활발하며 각종 사회정책 및 시스템개선 부분에서 협력을 추진하고 있음.

□ 그 외 주요 원조국으로는 독일 개발협력기구(GTZ)가 식수, 환경, 경제개발 등의 분야에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JICA)은 농수산업, 건설교통 분야를 중점 지원하고 있음.

□ Bouazza 국장은 모로코 UNDP사무소가 원조기관간 협력사업을 조화롭게 추진하기 위해 매년 회의를 주선하고 있으나 타국 원조기관의 소극적 참여로 원만한 정보교환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우리나라도 동 회의에 참석, 타 원조국의 공여 현황을 청취하고 우리의 사업을 소개하여 對모로코 협력사업의 실질적인 발전을 도모할 것을 제안함.

Ⅲ. 기타

□ 모로코는 2004년 미국의 MCA(the Millennium Challenge Account) 대상국으로 선정된 바, Bouazza 국장은 모로코가 단위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1억 불 가량의 무상원조를 지원받을 예정이며 모로코 정부는 모로코 북부지역 도로정비사업을 동 지원대상으로 신청 예정이라고 밝힘.

[자료:주모로코 대사관]

서부발칸에 대한 EU의 원조 동향

Ⅰ. 개 요

1. 개요 설명

EU는 각종 원조 프로그램을 통해 1991년 이후 최근까지 80억 유로 이상을 서부발칸(알바니아, 보스니아 · 헤르체고비나(BiH), 크로아티아, 마케도니아, 세르비아 · 몬테네그로(SCG) 등 5개국) 지역에 지원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EU 회원국 차원의 개별 원조까지 포함할 경우 그 규모는 200억 유로 이상으로 추산됨.

□ 1990년대에는 역내 위기관리 및 재건을 위해 EU의 인도적 지원 프로그램(ECHO), 재건 프로그램(OBNOVA), 식량안보 프로그램(Food Security), PHARE(중 · 동유럽 10개국의 EU 가입 지원을 위해 실시된 EU의 원조 프로그램) 등을 통해 약 55억 유로가 제공되었으며 2000년 12월 이후에는 새로운 원조 프로그램인 CARDS(Community Assistance for Reconstruction, Development and Stabilization)를 통해 최근까지 약 30억 유로가 지원됨.

※PHARE는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2004년 5월 EU에 가입한 8개국) 및 불가리아, 루마니아의 EU 가입 지원을 위해 1989년부터 실시된 원조 프로그램임.

2. 원조 규모

SCG에 대한 EU의 원조규모는 1990년대 밀로세비치 정권 하에서 대규모 원조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지지 못하여 약 15억 유로(코소보 포함)에 그쳤으나 2000년 10월 전환경제 체제 개시 이후에는 CARDS 프로그램을 통해 최근까지 약 20억 유로의 원조를 받음.

Ⅱ. CARDS 프로그램의 도입

1. 도입 배경

□ 상기와 같이 1990년대를 거쳐 서부발칸에 대한 원조는 일관성 없이 여러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되어 왔으며 2000년 5월 EU 집행위는 서부발칸 5개국만을 대상으로 하는 단일의 효율적인 원조 프로그램 필요성을 제기함.

□ 동 제안은 2000년 12월 각료이사회에서 CARDS 시행에 관한 규정(Council Regulation No. 2667/2000)이 채택됨으로써 공식화되었으며 총 지원규모는 2000~2006년간 총 46.5억 유로로 결정됨.

□ 또한 CARDS 프로그램은 서부발칸의 유럽통합 과정인 안정화 및 제휴 과정(Stabilization and Association Process)의 개시와 더불어 본격화됨으로써 역내 국가의 EU 통합을 위한 개혁노력 지원이라는 포괄적인 목표를 갖게 됨.

※ 한편, 서부발칸 지역을 위한 CARDS 프로그램과 중·동구 국가에 대한 3개 원조프로그램(PHARE, ISPA, SAPARD)은 원조대상 국가의 상당수가 EU에 가입함으로써 2007년 이후에는 Pre-Accession Instrument 프로그램으로 통합될 예정임.

2. CARDS 프로그램의 유형

□ CARDS 프로그램은 서부 발칸 5개 개별 국가 차원의 원조(CARDS National Program)와 더불어 지역적 차원의 협력(CARDS Regional Program)을 위해서도 활용되고 있으며 각각의 지원범위와 내역에 대해서는 EU 집행위에서 발간하는 국별 전략보고서(Country Strategy Paper) 및 지역전략보고서(Regional Strategy Paper)를 통해 구체화되고 있음.

- 특히 지역적 차원의 CARDS 프로그램은 사법 및 내무협력(국경 관리, 조직범죄 퇴치 등), 행정능력 강화(공공개혁, 관세 등), 경제·사회 개발(경제개혁, 교육 등), 민주적 안정화(시민사회 양성, 난민 귀환 등), 환경보호 등 5개 우선순위에 대해 지원되어 왔음.

□ 각 프로그램의 관리 주체는 국가별 프로그램의 경우 알바니아, BiH, 크로아티아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EU 대표부가, SCG와 마케도니아의 경우에는 유럽재건청(European Agency for Reconstruction)이 각각 맡고 있으며 지역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EU 집행위 산하의 EuropeAid Cooperation Office에서 관리함.

Ⅲ. CARDS 프로그램에 의한 원조 내역

1. 전체 원조 규모

□ CARDS 프로그램은 2000~2006년간 총 46.5억 유로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다년간 예산배정계획(multi-annual indicative program)에 의해 2000~2001년에는 15억 유로, 2002~2004년간에는 20억 유로가 각각 배정된바 있으며 2005 및 2006년에 대해서는 현재 계획 수립 단계에 있음.

〈각국별 CARDS 프로그램 원조 규모〉

(단위: 백만 유로)

국가	2000	2001	2002	2003	2004	합계
알바니아	35	37	44	46	58	220
BiH	102	105	71	63	65	406
크로아티아	21	60	59	62	76	278
마케도니아	21	56	41	43	51	212
SCG	648	425	359	331	297	2,060
합계	827	683	574	545	547	3,176

2. 각국별 원조 규모

□ 2000~2004년간 지원규모를 보면 SCG(코소보 포함)에 대해 전체 원조예산의 60%가 지원되었으며 여타 국가에는 BiH를 제외하고는 총 원조 규모의 10% 미만으로 지원됨.

□ 2005년에는 크로아티아(2004년 6월 EU 가입후보국 지위 획득)를 제외한 여타 4개국을 대상으로 CARDS 프로그램이 운영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국가별 원조규모에 대한 배정작업이 진행 중임.

- 다만 SCG 및 마케도니아에 대한 2005년 원조규모는 지난 4월 11일 EU 집행위를 통과하였으며 각각 2.4억 유로(코소보 54백만 유로 포함) 및 34백만 유로로 결정됨.

3. 지역협력을 위한 원조 규모

□ 지역적 차원의 원조는 전체 국별 원조규모의 약 10% 내외에서 결정되어 왔는 바, 2000~2001년간 46백만 유로, 2002~2004년간 197백만 유로가 지원되었으며 2005~2006년간 원조규모는 2004년 12월 EU 집행위에서 85백만 유로로 결정됨.

Ⅳ. 관찰 및 평가

1. 관찰

서부발칸 지역은 유럽의 변방으로 역사상 서유럽의 큰 관심을 끌지 못하였으나 역설적으로 동 지역이 1990년대 민족간 갈등 및 내전을 겪으면서 역내 불안정 요인으로 부상하자 동 지역의 안정이 유럽 전체의 안보에 미치는 중요성을 인식한 EU로부터의 지원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EU는 150여개국을 대상으로 연간 70억 유로 규모의 원조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이 CARDS 프로그램을 통해 서부 발칸 지역에 지원되고 있음.

□ 서부발칸에 대한 EU의 원조 프로그램은 EU의 서부발칸 끌어안기 과정으로 볼 수 있으며 EU로서는 서부발칸으로의 EU 확대에 따른 경제적 이해관계 보다는 역내 안정이라는 안보전략상의 동기로 인해 서부발칸지역의 EU 가입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음.

2. 평가

서부발칸 각국별 원조현황을 보면 SCG에 대한 원조규모가 여타 국가에 비해 월등히 많은 바, 이는 SCG의 복구 및 재건 수요뿐만 아니라 국가 규모(인구규모는 역내 전체의 50% 해당하는 1천만 명), 지역내 위상, 향후 발전 가능성 등이 전반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해석됨.

ㅁ 우리 정부의 對세르비아 원조는 코소보사태 당시 9.6만 불 긴급지원 및 2002~2004년간 KOICA 물자공여사업 형태로 120만 불을 지원하였는 바, 세르비아를 포함한 서부발칸 지역에 대해 양자 외교뿐만 아니라 對EU 외교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 유지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자료: 주세르비아 대사관]

對에티오피아 일본 원조 동향

Ⅰ. 에티오피아-일본 수교 50주년 기념사업 추진 계획

□ 일본 정부는 양국간 수교 50주년을 맞아 6개의 기념사업을 추진 중인 바, 지난 1월과 3월 일본 중견 작가 사진전(photo exhibition)과 영화 주간(film show)을 각각 개최한데 이어 금년 11월에는 마라톤 대회(Great Ethiopian Run)를 주최할 예정임. 아울러, 연내 일본 대학 교수 및 각계 전문가를 에티오피아에 초청하여 양국 관계에 대한 세미나와 강연을 개최할 계획이며 대통령궁 일본 정원 보수사업 및 New Nile 교량 기공식을 거행할 예정임.

Ⅱ. 對에티오피아 일본 ODA 지원 현황(2003년 기준)

□ 2003년 기준 대 에티오피아 일본 ODA 지원규모는 39.1백만불로 지원 세부 내역 및 규모는 아래와 같음.

- capital grant aid(도로 및 Studio 지원):15.5백만불
- non project grant (비료 지원) : 5백만불
- grass root grant(학교 및 식수 등 사업):1.5백만불
- UNICEF를 통한 소아마비 백신사업:3.6백만불
- 기술협력사업:11.5백만불
  · 문가(장, 단기) 20명 및 봉사단원 20명 파견
- 긴급 구호(식량원조):1백만불

□ 참고로 2003년도 일본의 ODA 예산의 25%인 10백만불이 JICA 기술협력 예산으로 집행되었으며 2005년 3월 현재 JICA 본부에서 당지에 파견한 JICA 직원은 소장을 포함 9명임.

□ 對에티오피아 양자간 원조 규모 및 순위(2003년 기준)

- 2003년도 에티오피아 양자간 국가별 원조규모

는 860.96백만불임. 미국이 513.39백만불로 전체의 59.62%를 차지하며, 이어 이태리(61.41백만불/7.1%), 영국(57.33백만불), 일본(54.84백만불), 아일랜드(32.19백만불), 스웨덴(24.14백만불)이 그 뒤를 잇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19백만불임(출처: UNDP/Ethiopia, 2003).

Ⅲ. JICA 파견 봉사단원 활동 현황

□ 2005년 3월 현재 에티오피아에서 활동 중인 JOCV는 총 25명으로 수도인 아디스 아바바에 10명, 바하다르 및 Gondor 등 지방 5개 도시에 15명이고 주요 활동분야는 시스템 공학, 측량, 원예, 관광 등임.

□ KOICA 사무소는 향후 JICA 사무소와 정기적인 만남의 장을 마련, 대 에티오피아 원조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 원조 효과를 거양할 예정인 바, 그 일환으로 KOICA 파견 인력 지방 파견 확대 추진시, 안전과 교통 및 통신 여건 등을 감안, JICA 등 타국 봉사단 파견인력 활동지역 등을 우선 고려할 예정임.

[자료:주에티오피아 대사관]

뉴질랜드 원조정책 검토회의 결과

Ⅰ. 핵심내용

□ DAC는 뉴질랜드의 GNI 대비 ODA 비율이 DAC 회원국의 국가별 평균노력(0.42%)에 크게 미달한 (0.23%) 점을 지적하면서 UN 목표치 0.7% 달성을 위하여 중기 원조목표 설정을 요청하였음.

□ 뉴질랜드가 대외원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원조전담기관 NZAID를 신설(2002년)하고 원조기관의 중점목표를 빈곤퇴치로 설정한 것을 긍정 평가하였으나, 중점협력대상국 수(19개)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축소하여 남태평양 국가들을 중점 지원할 것을 권고함.

Ⅱ. 관찰

□ 뉴질랜드는 ODA가 2.1억불(2004년)로써 DAC 회원국중 원조규모가 제일 작지만 원조기관의 선진화, 100% 무상원조 제공, 원조대상 및 원조분야의 집중 (태평양 도서국, 교육분야)을 통해 국제사회로부터 모범적인 공여국 및 Good international citizen으로 인정받기를 모색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판단됨.

Ⅲ. 주요 논의사항

1. 원조기관 신설

□ 2000년 실시한 DAC의 원조정책 검토시 뉴질랜드는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지적된 바, 첫째는 다수의 소규모 프로젝트의 실시 및 전략적 포커스의 부재이고 둘째는 단기간 순환보직하는 외교관들이 개발협력을 담당함에 따라 Corporate capacities and professionalism이 형성되지 못한다는 것이었음.

□ 이에 따라 뉴질랜드 정부는 ODA에 대한 전반적,

객관적 평가를 실시하여 2002년 외교통상부 산하에 반독자적인(Semi-autonomous body) 원조전담기관(NZAID)을 신설한 바, DAC는 원조기관의 핵심목적이 빈곤퇴치로 설정되고 새로운 정책 및 우선순위(priorities)도입 등 매우 인상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높이 평가하였음.

□ NZAID가 빈곤퇴치에 중점을 두고 외교정책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분리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외교통상부 산하의 반독자적 기관으로 설립한 것이 적절하였다고 평가하였음.

□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NZAID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예산부족, 원조의 분산(너무 많은 개도국에 대한 원조), field presence 강화 등이 지적되었음.

2. ODA 증액문제

□ 뉴질랜드 정부가 UN의 ODA 목표 0.7%를 장기적 목표로 하고 있으면서 지난 15년간 ODA/GNI 비율이 정체상태에 있고(2003년 0.23%) 현재 ODA 증액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문제점이 지적됨.

□ 이에 대해 뉴질랜드는 최근 ODA의 다년도 예산제도가 도입되어 좀 더 예측가능한 장기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되었고 작년 말 인도양 쓰나미 사태를 계기로 ODA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ODA 증액을 위한 주변환경이 개선되고 있다고 함.

3. 원조의 집중

□ 뉴질랜드는 19개 중점협력대상국(태평양 11개, 동남아 7개, 남아공) 외에도 20여개국에 대하여 협력사업을 하고 있으며 장학금사업, NGO와의 공동사업 포함시 수원국이 100개국 이상에 달하고 있음. 이와 관련 DAC는 원조기관(NZAID)의 부족한 인원(본부 90명, 해외 60명) 고려시 국별프로그램 작성, 공여국간 조정 등을 위한 전략적 관리능력, 거래비용(transaction cost)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태평양에서 뉴질랜드 원조의 효율성을 감안, 이 지역에 대하여 집중할 것을 권고하였음.

  -뉴질랜드는 중점협력대상국을 6개국으로 줄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답변함.

□ 뉴질랜드는 전통적으로 교육분야 원조를 중시하였고 2001년 국무회의에서 교육분야 원조를 개선키로 하고 초등교육 예산을 50% 이상 배정키로 결정한 바, DAC는 이를 환영하면서 동시에 기존의 다양한 장학금사업이 개발에 미치는 효과를 재검토할 것을 권고함.

4.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

□ 뉴질랜드는 DDA 협상에서 개도국의 시장접근 개선을 지지하고 있지만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을 명백하게 정부의 목표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이 지적되었음.

□ 이에 따라 DAC는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을 분명하게 지지하는 정치적 선언문의 채택을 권고하고 이를 위해 NZAID가 좀 더 적극적인 역할(proactive role)을 할 것을 요청하였음.

5. 원조조화 및 원조일치

□ 뉴질랜드와 호주 간의 협력을 통해 쿡아일랜드의 국가프로그램을 수립한 것이 원조조화의 모범사례로 제시되었으며 솔로몬아일랜드의 교육사업 및 PNG 보건사업에서 뉴질랜드가 섹터별 접근방식(sector-wide approach)를 추진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한 것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음.

□ 그러나 DAC는 원조 현장에서 NZAID 사업과 뉴질랜드 NGO 활동 간의 시너지 제고를 위한 협조 강화가 필요하며 수원국과의 정책대화 및 여타 공여국과의 공조(coordination) 강화를 위해 NZAID의 field presence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권고를 하였음.

[자료:주오이시디 대표부]

동티모르 원조공여국 회의 결과

개발원조위원회 정기회의(Timor-Leste and Development Partner's Meeting)가 동티모르 정부와 World Bank 공동주최로 4. 25(월)~26(화)간 개최된 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Ⅰ. 핵심요지

□ 표제회의에서 지난 1년간 동안의 국가발전계획(NDP) 이행상황에 대해 평가하고 2005/6 회계연도 예산안과 향후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음. 또한 donor(국가/국제기구)들의 지원공여 현황 발표와 향후 지원방향과 계획에 대한 입장 표명이 있었음.

□ 공여국들은 동티모르가 지난 1년간 제반분야에서 현저히 가시적인 성과를 이룩하였다고 평가하고 재정운용 관련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티모르해 석유 · 가스 개발수익의 현저한 증가(FY04 41백만 불→FY05 243백만불), 재정긴축노력 및 과세강화노력에 힘입어 건실한 재정이 유지되고 있음을 환영하고 미래 후손을 위한 석유기금 적립을 높이 평가함.

□ 향후 주재국은 정치적 불안정 요소가 있으나 경제적으로는 건조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2005년 4월 내 · 외국인 투자법 제정으로 경제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됨.

□ 동티모르대사관은 그간 우리 기업의 對주재국 투자에 대해 보수적 입장을 견지하여 왔으나 중 · 장기적 발전가능성을 고려 '긍정적 고려' 입장으로 상향 조정함.

Ⅱ. 상세사항

1) 회의 참가국

□ 국가 : 호주, 브라질, 캐나다, 중국, EU, 프랑스,

핀란드, 독일, 인도네시아, 아일랜드, 한국, 쿠웨이트,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노르웨이, 필리핀, 일본, 포르투갈, 스웨덴, 태국, 영국, 미국 (22개국)

□ 국제기구 : UNMISET, UNDP, UNICEF, WHO, UNIFEM, UNFPA, UNESCO, UNHABITAT, UNIDO, UNOPS, FAO, ILO, IOM, ADB, IMF(15개 국제기구)

□ 민간부문, 시민사회단체 대표

2) 기조발언

□ Alkatiri 총리 / Francisco Guterres 국회의장 (동일 취지)

- 독립 이후 3년간 제반분야에서 동티모르 정부가 이룩한 성과를 열거하고 유엔 천년개발계획(MDGs)에 충실한 NDP를 착실하게 진전시키고 있음을 강조
- Sector Investment Programs(17개)하에 Sector Working Groups(10개)을 통하여 체계적인 개발계획 수립과 역량 배양(capacity building)을 추진하고 있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투자법 제정과 투자수출진흥청 신설 노력, 민주주의 증진을 향한 지방기초자치단체 선거 실시를 부각
- 2006 회계연도에는 인프라구축, 공무원 교육훈련에 중점을 두어 사회경제 발전기조를 다지고 지방분권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부 구조조정을 하여 민주적이고 안정된 평화국가로 발전시키기 위해 진력하고 있음을 강조
- 알카티리 총리는(이달 초 "학교 교과과정에서 카톨릭 수업을 중단하여야 한다"는 자신의 발언에 항의하여 4월 18일부터 현재까지 2주간 딜리에서 계속되고 있는 카톨릭계의 항의시위를 염두에 두고) 빈곤, 문맹, 의사소통 인프라구축 미흡, 진실의 오도가 민주주의와 법치(rule of law) 구현을 왜곡시키는 장애물이라고 언급

□ Kassum W/B 부총재(Zhu Xian 동티모르 담당 과장 대독)

- 동티모르는 독립 이후 지난 3년 동안 천년개발목표(MDG)를 모범적으로 반영한 NDP를 잘 이행하여 왔으며 특히 석유개발수익을 투명하고 건실하게 운용하고 석유자원이 현재의 세대뿐만 아니라 후손들도 공유할 수 있는 기본 토대를 구축하였음을 높이 평가
- 동티모르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공여국들이 무상지원 공여(CSP)을 지속하여 줄 것을 촉구하고 사법분야 등 핵심정부기능이 원활히 작동되도록 전략적이고 집중적인 역량 개발을 위한 동티모르 정부와 공여국들의 공동의 노력이 긴요함을 강조

※ CSP(Consolidation Support Program)는 이전의 TSP(Transitional Support Program)를 전환한 것으로 공여국 무상지원공여프로그램

3) 의제별 토의결과

의제 1

재정(Fiscal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 동티모르 정부 및 W/B 발표

– 회의를 주재한 Alkatiri 총리와 Zhu Xian W/B 대표가 기조발언 발표를 통하여 개괄적으로 언급하고 Boavida 기획재무장관과 Bassarewan 차관이 구체 내용에 대해 발표

가. 2005 회계연도 예산집행

2004 회계연도 기간 중 세입은 티모르해 개발소득이 예상보다 많이 유입되고 세정개선으로 국세수입(특히 관세)이 증대되어 당초 예상치인 169백만불보다 107백만불 증가한 276백만불 예상. 반면, 재정지출은 예상보다 저조

※ 2004/5회계연도 기간은 2004. 7–2005. 6이며 2005 회계연도로도 표시

나. 2006 회계연도 예산안

2005년 7월부터 개시되는 FY06 예산은 118백만불로 빈곤층에 중점을 두어 편성, 보건 · 교육부문에 전체예산의 35%, 교육예산 중 45%를 초등교육에, 보건예산 중 40%를 병원지출에 배정, 경찰과 국방에는 전체 예산의 19%로 편성

〈중기 예산 전망〉 (단위 : 백만US$)

	FY05	FY06	FY07	FY08	FY09	FY06–09
세입	306.5	205.6	234.9	232.5	262.7	935.7
국세	33.2	36.4	38.6	40.8	43.7	159.5
티모르해 개발수익	242.6	158.7	185.7	181.2	218.5	744.1
공여국무상원조(CSP)	30.7	10.5	10.5	10.5	0.5	
세출	78.7	119.6	106.1	112.0	109.6	436.7
재정흑자	227.8	86.0	128.8	120.5	153.1	488.4
Financing Gap	0	0	0	0	0	0

※ 재정흑자는 대부분 석유기금으로 적립

다. 경제지표

□ 바유운단 유전은 2004년 4월 이래 본격적으로 가동중이며 향후 새로운 유전개발 가능성 상당

– 석유생산으로 인해 GNI는 현저히 증가하였으며 비석유부문 GDP도 미약하나마 증가세를 보여 2002~2003년 2년간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 2004년도에는 2% 성장 시현

– 인구증가율(연 3% 수준)이 높아 실업률은 오히려 증가하였으며 특히 비숙련노동력은 아직도 현저히 높은 상태로 빈곤감축을 위해서는 농촌지역의 노동생산성 제고가 시급한 실정

– 물가상승률은 연 2.5% 수준으로 안정적

– 2004년도 비석유부문 수출은 8백만불이며 이중 커피수출이 약 700만불로 전체 수출의 대부분 차지(커피수출은 국제가격 상승과 시장개척에 힘입어 크게 증가)

– 금융부문 활동은 2004년 중 빠르게 확대되어 예금잔액은 2003년도 72백만불에서 2004년도에 84백만불로 증가하였으며 대출잔액도 전년대비 수 배 증가

– 2004년 중 외국인투자는 많지 않았음. 투자활성화를 위한 법제는 많은 진전을 이룩하였으나 회사등록절차는 복잡하고 불분명함. 투자수출진흥청이 2005년 중반에 설립되어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

– 노동부문에서는 2005년 중 한국으로 동티모르 노동인력 송출이 예정되어 있으며 말레이시아로의 송출도 추진되고 있음.

– 전 분야를 망라하여 17개 부문의 부문별 투자계

획(SIPs : Sector Investment Programs)이 수립 · 이행중

□ 공여국측 발언 요지

- 공여국들은 동티모르 재정건전성 확보와 석유기금 확충 노력을 평가하고 향후 직면한 실업문제 해소, 저소득층 계층 지원확대 차원에서 도로, 통신 등 인프라 확대를 위한 재정지출 필요성을 제기. 이외 별다른 토의 없이 조기 종결됨.

의제 2

Capacity Building

□ 동티모르 정부 및 W/B, UNMISET 발표

- Capacity building 총괄기관인 CDCU (Capacity Development Coordination Unit)의 Augusto Barreto 소장은 중기 능력배양을 위해 ①자문관과 현장 훈련교육 ②해외훈련 ③부처간 교차훈련 ④부처 내 별도 교육훈련 실시 계획에 대해 상세 언급하고 공여국의 계속적인 지원을 요청하였음.
- UN 대표인 하세가와는 동티모르 발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capacity building임을 강조하고 동티모르 정부에서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문관 400명 중 사법, 재정, 법률분야를 중심으로 58개 직위를 핵심직위로 선정, 이를 안보리에 보고 예정임을 언급하고 UN 산하기관, 국제기구, 공여국가들이 자문관 충원을 위해 공동 노력하여 줄 것을 요청
- (공여국측이 제기한 동티모르 정부의 capacity building 노력 미흡 및 전략 부족 지적에 대해) 동티모르 정부대표로 나선 행정자치 장관은 많은 노력과 비용을 들여 공무원들을 교육훈련시켜 놓으면 이들이 그만 두고 보다 더 많은 보수를 찾아 international organization으로 옮겨가 버리거나 해외로 가버리기 때문에 capacity building상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

□ 공여국 반응

- 대부분 공여국들은 사법, 재정분야에서 capacity building과 부정부패 없는 정부 건설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공유
- 영국과 아일랜드 대표는 그간 많은 자문관들이 와서 동티모르 공무원들을 교육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자문관들의 적극적인 관심 결여와 공무원들의 의지 결핍으로 인해 실효성 있게 이행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capacity building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회성이 아닌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제도화 구축 필요성을 강조
- 또한 capacity building 총괄기관인 CDCU가 인적자원육성의 중요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과 역량을 갖추지 못한 실정이기 때문에 CDCU 기능강화를 주문
- IOM, 아일랜드 대표는 수도인 딜리에서는 각종 세미나나 회의를 통하여 capacity building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지방에서는 capacity building에 무관심한 실정임을 지적하고 구호로만 그치지 않고 capacity building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institution building과의

병행이 중요함을 강조

4) 주요국 발언요지

가. 미국

□ 행정 · 사법제도 강화, 지방정부의 능력배양 및 지방으로의 행정서비스 확대강화, 경쟁력 있는 민간기업의 육성, 농업생산성 향상과 시장활성화를 통한 고용확대 및 소득창출, 일반국민들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고 특히 부패척결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

□ 미국은 향후에도 경제활성화, 민주주의 공고화, 보건 서비스 확산에 중점을 두어 지원할 것임을 천명하고 동티모르 정부도 자체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당부

나. 일본

□ Fukusihma 외무성 의회차관(참의원)은 Post – UNMISET에도 평화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지원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어떤 형태로든 유엔의 존속이 필요함을 강조. 특히 자신이 헬기로 국경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유엔군(UN organized troops)의 중요성을 인식하였음을 강조

□ 고이즈미 총리의 자카르타 아시아–아프리카 정상회의 발언을 인용하여 경제발전, 평화구축, 국제협력증진을 위한 일본 정부의 對개도국 지원 정책에 대해 언급

□ 일본은 1999년 서약한 130백만불, 2002년 서약한 60백만불을 충실히 이행하였음을 강조하고 2005년에 추가로 20백만불 지원 예정임을 밝히고 인적자원개발과 제도구축, 인프라, 농업개발, 평화공고화, 선정 등 5개 분야에 중점을 두어 지원하고 있음을 언급

□ 2004년 1월 서명된 기술협력협정이 발효되면 전 분야에서 기술협력을 제공할 것임을 언급하면서 동티모르측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

다. 중국

□ 중국은 외교부청사, 대통령궁, 재향군인 주택 100채 건축 등 3개 건축사업을 지원키로 약속한 바, 외교부청사 건축계약을 이달중 체결하고 곧 건축공사를 개시할 예정이며 대통령궁은 설계단계에 있으며, 재향군인 주택 건축은 동티모르 정부가 주택부지를 결정하면 전문가를 파견할 예정임.

□ 중국 의사 파견, 연수생 초청 · 훈련지원, 주중국 동티모르 대사관 설치 및 운영 일체 지원 언급

□ 중국과 포르투갈사용국간 경제협력포럼 하에서 양국간 경제협력과 투자촉진을 도모하고 있음. 중국의 Yuan Longping High-Tech 농업회사는 hybrid 벼 재배를 지원하고 있고 PetroChina와 BGP사는 동티모르 내륙과 해역에서 석유자원개발 지질조사를 수행하고 있음.

라. 호주

□ 동티모르가 향후 공여국 지원 없이도 자력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건전한 재정운용이 요구됨. 허약한 정부행정기능으로는 성장과 빈곤경감을 이룰 수 없기 때

문에 투자촉진을 위한 법제와 제도 구축 중요성을 역설하고 동티모르가 부정부패 없는 국가로 발전하기 위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주문

□ 빈곤계층에 대한 기초서비스 제공 노력 강화 필요성, 식량안보 차원에서 개량종자 도입 · 배포를 위한 농림수산부와 Australian Center for International Agricultural Research(ACIAR) 간 협력사업에 대해 언급하고 호주는 연간 4,000만 호주달러 수준의 지원을 계속해 나갈 예정임을 밝힘.

마. 유럽연합

□ 진행 중인 지방기초단체 선거(13개 District 중 5개 District에서 실시), 인도네시아 및 호주와 국경선 획정 진전을 평가

□ 중범죄단과 진실화해위원회가 추가적 조치 없이 종결될 경우 1999년시 잔학행위를 한 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거나 오도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대립과 갈등관계에 있는 경찰과 군간의 대화 촉구

바. IMF

□ 당면한 실업문제해결과 경제활성화, 빈곤축소를 위해서는 민간부문 활성화가 시급함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법적 · 제도적 완비를 가속화할 것을 촉구

□ 경제성장과 안정이 조화될 수 있도록 경제시스템 구축 필요 주장

사. 인도네시아

□ 금년 4월 8~9일간 동티모르를 공식 방문한 유도요노 대통령이 밝힌 바와 같이 인도네시아는 동티모르의 안정과 번영이 지역안보에도 직결된다는 공동 인식 아래 동티모르가 보다 강한 나라로 발전하도록 지원할 것임을 밝힘.

5) 우리나라 발언 요지

□ 동티모르 정부의 국가발전계획수립과 이행에 순조로운 진전이 있음을 평가하고 특히 법적 · 제도적 정비, 재정운영, 국정능력배양, 투명성 제고 등 분야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음을 언급

□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국가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직업훈련을 통한 인적자원개발과 농촌지역 발전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우리의 새마을운동의 기본취지와 정신을 소개하였음.

□ 특히, 스포츠분야에서 한국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동티모르 유소년축국팀(김신환 감독 지도)이 히로시마 개최 리베리노컵 국제대회에서 2연패하였음을 소개하고 신생국 동티모르도 국제대회에서 우승할 수 있는 저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임을 강조함.

□ 정부 차원에서 연수생초청, 기자재 공여, 전문가 파견 지속 추진 및 금년 중 동티모르 노동인력도입과 해외봉사단 파견 계획을 밝히고 스포츠, 종교, 문화, 의료보건, 교육, IT, 농업개발 등 분야에서 한국 민간단체 지원 실적을 소개하고 계속적인 지원 유도 방침에 대해 언급

– 지방병원건립(평화의료재단), 여성 · 아동센터

(경기도, 구미시), 신학교건립성금지원(대구카톨릭교구), 슈퍼콘개발프로젝트(김순권 박사), 의료봉사단(대구달서, 경기도 등), IT 봉사단 등

〈주요국 원조공여 현황(1999-2005.4)〉

국가/국제기구	공여액(단위: 백만 미불)
포르투갈	199
일본	191
호주	186
EC	177
미국	100
영국	55
UNDP	42
노르웨이	41
UNICEF	40
UN	33
독일	32
WFP	26
World Bank	25
UNHCR	24
중국	24
스웨덴	20
아일랜드	20
카나다	18
핀란드	17
ADB	10
UNFPA	9
WHO	8
뉴질랜드	7
네덜란드	6
한국	6
FAO	3
브라질	3

※ 우리나라는 민간단체 지원 포함

Ⅲ. 관찰 및 평가

1. 평가

□ 공여국들은 동티모르 독립 이후 지난 3년간의 짧은 기간 내에 제반 분야에서 현저한 가시적인 성과를 이룩하였음을 평가

□ 최근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으로 인해 티모르해 석유 · 가스 개발수익이 예상보다 크게 증가하여 공여국들의 지원 여부에 관계없이 당분간 재정상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정부의 건실한 예산집행으로 인해 예산은 있으나 충분히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특히, 동티모르는 신생국으로 재정상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외채를 전혀 쓰지 않은 가운데(동티모르는 World Bank, ADB 등 국제금융기구에서 최혜조건으로 제공하는 제로 금리의 차관도 일절 받아들이지 않고 있음), 석유자원을 미래 후손들과 공유하기 위해 석유기금을 적립하고 있는 등 건실한 재정을 유지하고 있음. 또한 바유운단 유전이외에 추가적으로 Greater Sunrise 유전에서 추가적으로 개발수익이 예상(2010년부터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향후 동티모르는 경제적으로는 다소 낙관적일 것으로 평가

□ 금번 회의에서 동티모르 정부는 재정여건의 호전에 힘입어 공여국들에게 지원을 절실히 요청하는 면은 별로 없었음. 공여국들도 동티모르 정부의 노력을 전반적으로 평가하면서 일반적으로 공여국들이 제기하는 부정부패 등 good governance를 위한 문제 제기가 현저히 줄어들었음.

□ 특이사항

- 최대 공여국인 일본은 금번 회의에 차관급 인사(참의원인 Fukusihma 일본대표는 정무직으로 외무성내 서열 3위에 해당)가 참여하여 2005년 5월 UNMISET 임무 종료 이후에도 어떤 형태로든 유엔 존속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별도발언을 통하여 일본정부의 대개발지원 외교정책에 대해 언급하는 등 안보리상임이사국 진출 등을 겨냥한 면이 역력하였음.

2. 중기 경제전망(동티모르대사관 관찰)

□ 독립 3년을 맞은 주재국은 유엔 등 국제사회 역할 축소에 따라 경제활동에 있어서도 외국인의 역할이 현저히 줄어든 반면 동티모르인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

□ 향후 마무리단계에 있는 투자관련 법령이 정비되면 (투자법은 2005년 4월 국회통과) 외국인 투자가 활성화되어 석유산업 이외 분야에서도 실물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함.

□ 따라서 우리 기업의 대주재국 투자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3. 건의

□ 한 · 동티모르 양국간 확고한 우호협력관계 지속을 위해서는 대동티모르 개발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긴요

□ 현재 예정인 해외봉사단 파견을 금년 중 개시, 이를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동티모르의 capacity building을 지원 필요

□ 향후 '독립기념관 건립사업' 이후 신규 프로젝트 사업 추진 필요

- 프로젝트 사업으로 추진된 독립기념관은 당지에서는 가장 모범적인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음.

※ 마하티리 말레이사 전 총리 방문,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대통령 방문, 독일 외무장관 방문, 동티모르-인도네시아 공동위원회 개최, 호주-동티모르 석유협상 개최 회의장으로 사용

※ 영국 대사는 5천만불을 공여하고도 독립기념관 같은 건물을 남기지 못하였다 하면서 부러워하고 일본 대사관측도 매번 Ceremony할 때 독립기념관을 이용하고 있다면서 높이 평가

[자료:주동티모르 대사관]

몰디브 원조공여국 회의 결과

최근 몰디브에서 원조공여국 회의가 개최된 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Ⅰ. 동 회의 참석자

□ 정부대표 참석 국가:우리나라를 비롯, 호주, 캐나다, EU, 핀랜드, 이태리 미국, 오만 등 8개국

□ 국제기구:아시아개발은행, 세계은행, UNDP, UNICEF, UNEP, 일본국제협력은행(JBIC), 이슬람개발은행, 아랍경제개발을 위한 쿠웨이트 펀드(DFAED), 사우디개발펀드(SFD) 등 9개 기관

□ 몰디브 정부 : Mohamed 재정 및 금융부장관, Hamdun Hameed 기획 및 국가개발부장관 등 8명

□ NGO : 몰디브, 필리핀, 대만 등의 NGO 11개 단체 참석

Ⅱ. 주요 회의 내용

1. 몰디브 정부 지진해일피해 및 복구재원 소요 현황 설명

1) 몰디브 지진 · 해일 피해현황

□ 몰디브는 금번 지진 · 해일 피해금액은 470.1백만불로 몰디브 GDP의 62%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었음.

– '04년 현재 인구 29만 명 중 83명 사망, 26명 실종, 약 21,500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고 몰디브 전체인구의 약 33%인 10만 여명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음.

– 전체 1192개 섬 중 199개 섬에 사람이 거주하고 있으나 그 중 104개 섬이 피해를 입었으며 전기 두절 26개 섬, 통신시설 피해 70개 섬, 학교 · 병원 등 공공시설 피해 50개 섬 파손, 어선 50척, 리조트 시설이 있는 87개 섬 중 21개 섬이 폐쇄중임.

- 환경적으로는 해안침식, 지하수 오염, 산호초 파손, 육지의 염분화 등의 피해를 입음.

2) 몰디브의 복구 · 재건

□ 지진해일 피해 발생후 몰디브 정부는 1월 26일 이후부터 본격적인 재건복구 프로그램 준비를 시작하였으며 동 재건복구사업을 총괄하기 위해 국가재난관리센터(National Disaster Management Center)를 설치하고 복구작업을 본격화 함.

- 몰디브 정부는 '05년 3월 현재 상수도, 전기, 통신, 임시거주, 학교수업 개시 등 응급복구 상태는 성공적으로 완료된 상태이나 완전히 재건 · 복구하는데는 주택건설, 통신시설 개선, 해양방조시설 등 향후 5~8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몰디브 정부는 구호 · 재건 · 복구 기금 운영의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해 감사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감시위원회(Board of Trustees)를 설치하여 운영중임

□ 추정 소요비용

- 몰디브 정부는 관광산업 재건에 100백만불, 주택건설분야에 74백만불, 통신시설 복구 등 행정분야에 50백만불, 상수도 및 염분화된 토지 담수화 사업에 45.6백만불 등 총 406.3백만불의 비용이 소요되며 총 소요비용 중 국제사회의 지원이 필요한 비용은 304.2백만불이라고 설명함.

□ 몰디브 정부는 그간 몰디브를 위해 구호금 및 현물 지원을 해준 한국, 일본, EU, 국제기구 및 NGO 등의 적극적인 지원에 사의를 표명함.

3) 재건 · 복구과정에서 문제점

□ 20개 산호군으로 구성된 섬지역에 복구 · 재건 지원을 위한 접근 곤란

□ 섬들 지역으로 수송비용의 과다

□ 복구 · 재건 자원 부족 등

2. UN 지원현황(UNDP의 몰디브 UN 상주 조정관 Partice Coeur-Bizot 발표)

□ 긴급수요 우선순위:국민들의 삶 재건(Livelihood), 주택, 수송 및 인프라, 재해위험관리, 수자원 및 담수화 작업 및 공공행정 분야 순으로 재건 · 복구 과정에서 특별한 조정이 필요함.

□ UN은 몰디브 재건 · 복구를 위해 66.5백만불을 가용할 계획이며 3월 17일 현재 각국 정부, 정부간 기구 및 9개 UN기관(OCHA, UNICEF, UNDP, WHO, FAO, UNEP 등)으로부터 63.4백만불을 확보하였으며 '05년 12월까지 추가기금을 조성할 계획임.

□ UN지원 우선분야

- 이재민 구호 및 지원
- 몰디브 경제회복 및 수산업, 농업 및 중소기업 복구
- 교육, 보건, 수자원 등에 대한 사회서비스의 복구
- 수자원 및 산호초 보존 등 환경보호

□ 재건 · 복구시 유의사항

- 현재의 구호단계로부터의 장기개발계획으로 이행단계에서 연계 및 철저한 준비 필요
- 수자원, 담수화, 환경 등 복구단계시 통합적인

개발계획 필요

- 미래를 대비한 탄력 있는 피난대책 및 인프라 설치
- 재건이 필요한 적재적소에 필요한 재원을 투입하여 수산업, 농업 등의 재건
- 재난대비태세 및 조기경보체계 구축
- 재건복구과정에서의 환경보전에 대한 충분한 고려 등

3. 국제기구 對몰디브 지원

□ 아시아개발은행(ADB):ADB는 쓰나미 피해복구를 위해 설립한 아시아쓰나미기금(ATF) 중 몰디브의 인프라, 주택재건, 빈민층을 위해 무상 20백만불 및 Loan으로 1.8백만불을 지원할 계획임.

□ 이슬람개발은행(IDB):IDB는 쓰나미 피해국가를 위해 500백만불을 지원할 계획인 바, 그 중 55.5백만불을 몰디브에 지원할 예정이며 세부적으로 긴급원조를 위해 50만불을 전달하였으며 무이자 Loan으로 20백만불, 통상 금융이자로 15백만불 및 수입무역(Import trade) 자금으로 20백만불을 각각 지원예정임.

- 주요 지원희망 분야는 수송, 공공시설, 교육, 보건분야이며 구체적인 사업분야는 4월 초에 몰디브 정부와 협의할 예정임.

□ 세계은행(WB) : WB는 몰디브에 총 40백만불을 지원할 예정이며 그중 40%를 무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금번 회의 종료후 몰디브 정부와 서명할 예정임.

□ 기타 : 사우디 펀드(20백만불) 및 쿠웨이트 펀드대표(30백만불)는 몰디브 지원을 약속함.

4. 각국의 對몰디브 지원

□ 아국 : 우리 정부는 對몰디브 지원계획으로 금년부터 3년간 2백만불 지원 약속, 즉 긴급구호자금 0.14백만불, 긴구호물자 0.2백만불 및 도서간 무선통신설비 복구분야(2.262백만불 소요)에 1.65백만불을 지원하되 추가 소요예산 지원여부는 추후 몰디브 정부와 협의할 예정임.

- 아울러 우리 정부는 KOICA를 통해 91년부터 14년간의 무상원조실적(0.6363만불) 및 금년도 9만불 규모의 무상원조를 계획중임.

□ 미국 : 미국대표는 금번 지진해일 피해를 입은 서남아시아국에 지원할 10억불 규모의 예산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회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며 의회가 승인하는데로 몰디브 지원계획을 발표할 예정임.

□ EU : EU는 2.7백만 유로를 긴급 지원하였고 14백만불을 상수도, 어선 및 환경재건을 위해 구호금을 사용할 것을 발표하였고 대몰디브 참시 수입쿼터 및 무역관련지원을 하기로 하였으며 유럽투자은행(EIB)을 통해 향후 중소기업, 관광, 어업 등에 50백만불의 soft loan을 추가 지원할 예정임.

□ 일본 : 일본국제협력은행(JBIC)은 몰디브에 20백만불을 지원약속하였고 3월 말경 JICA를 통해 공공건물, 어업분야 등의 기술자를 몰디브에 파견할 예정임. 특히 일본 정부는 몰디브 정부로부터 soft loan 지원요청이 있었으며 현재 일본 정부는 지원여부를 심의중임.

Ⅲ. 관찰 및 평가

□ 몰디브 정부는 금번 원조공여국 회의를 통해 재건 · 복구를 위해 필요한 소요비용의 약 80%를 국제사회로부터 지원약속을 받음으로써 향후 몰디브 재건을 위한 각종 사업 이행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동 사실은 금번 지진해일 피해 이후 재건복구를 위한 몰디브 정부의 노력이 국제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으로 평가되며 특히 원조금액의 집행과정에서 감시를 철저히 하기 위해 구성된 감시위원회에 국제기구 인사를 임명하는 등 투명한 행정확보를 위한 노력과 지진해일 피해 이후 약 80일이 경과한 현재 재건복구 프로그램 및 사업을 분야별로 철저히 준비한 것으로 평가됨.

□ 우리 정부가 몰디브에 지원예정인 도서간 무선통신사업 관련, 몰디브 대표단은(외교부 외자국 부국장 Ms. Aminath Didi) 우리 대표단을 만나 동 사업 소요금액과 우리 지원금액 간의 차액 61만불에 대해서는 금번 회의 후 양국 정부간 추가 협의하기를 희망하여 왔음.

□ 참고로 몰디브 대표단이 일본의 JBIC에 EDCF 자금지원을 요청하였음에 비추어 우리 정부에 대해 EDCF 자금 지원 요청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판단됨.

[자료:주몰디브 대사관]

파키스탄 개발포럼 개최 결과

주요 원조공여국 외교단 및 정부대표, ADB 등 국제기구대표 및 NGO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05년 4월 25~26일 파키스탄 정부 주관으로 파키스탄 개발포럼(PDF)이 파키스탄에서 개최되었는 바, 포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Ⅰ. 핵심요지

□ Shaukat Aziz 총리는 기조연설을 통해

－국민총생산 6.5% 성장 달성, 해외직접투자증대, 외환보유고 안정 등 각 부문에서 경제상황이 호전되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파키스탄에 대한 국제이미지 개선 노력강화, 각종 규제완화를 통한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주요국 · 공영 기업민영화 지속, 금융 및 조세제도 개혁을 통한 투명성 제고, 에너지개발 국제협력 강화정책 등을 통해 7~8%대의 경제성장을 달성 · 유지한다는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위해 수자원 확보, 에너지 안보, 인프라개발, 인적자원개발이 최우선과제임을 강조, 각국 원조공여국 및 국제기구 등의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함

□ 포럼에 참석한 WB, ADB, IMF 등 국제기구는 최근 3~4년간 파키스탄의 경제여건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 향후 파키스탄의 정치 · 안보 상황이 안정될 경우 7~8% 이상의 경제성장 달성이 가능하다고 예측하면서 도로, 댐, 에너지분야 인프라 개발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고 파키스탄 정부에 행정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노력을 촉구함.

Ⅱ. 주요내용

1. 전체회의(개막식)

□ ADB는 2005 회계년도 6.6% 경제성장을 전망하

고 향후 5년 내에 8%대 성장 가능성을 예측하면서 경제개혁 지속이 관건이며 경제성장 성과가 빈곤층 및 지방에 확산되도록 하는 정책이 긴요함을 강조함

□ WB는 금년도 7% 경제성장 가능성을 예측하면서 경제성장 과실이 빈곤층, 사회적 약자 및 지방에 침투되도록 하는 노력이 요망되며 21세기에 대비한 인프라 개발, 노동시장 육성, 조세행정 개선, 지방개발 확충 등의 분야에 대한 배려가 필요함을 강조함.

□ IMF는 파키스탄이 2004년도에 IMF 체제를 졸업한 점 등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을 달성했으나 IMF 졸업 이후 물가상승 압력, 주식시장의 불확실성 등 불안요인에 대한 관리문제가 남아있음을 지적하고 민간여신 확대 등 은행분야 개혁 필요성을 강조함.

2. 빈곤퇴치 및 고용창출

□ EU는 파키스탄 정부가 추진 중인 각 분야별 '천년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s : MDG)'가 양성간, 지역간, 계층간 불평등 해소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부재하며 경제성장 자체가 절대빈곤층 해소를 보장하는 것이 아님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방안 제시가 필요하며 MDG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기개발계획의 이행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능력 배양을 위해 국가 차원의 통계시스템 구축이 필요함을 지적함.

3. 사회 인프라 개발 및 민영화

□ 파키스탄 정부는 MDG 달성을 위해 수자원 관리, 도로, 항만, 에너지 개발 및 유통구조 개선에 필요한 소요재원 등 인프라 개선 기본 구상을 제시하면서 원조공여국의 지원을 강조함.

- ADB는 파키스탄 정부의 각종 사회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사후 평가와 관리부실로 막대한 투자자원이 낭비되고 있는 사실을 지적하고 사후관리 능력배양 지원 필요성을 강조함.

□ 파키스탄 정부는 통신, 건설, 전력, 에너지 분야 주요 공기업 민영화가 착실히 진전되고 있으며 민영화 추진과정에서 특정 외국기업에 대한 우대 문제점 제기에 대해 향후 투명성 제고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을 제시함.

4. 고용 및 인적자원 개발

□ 파키스탄 고등교육위원회(HEC)는 사회 · 경제 개발을 위해 인적자원개발(HRD)이 기본 요건임을 강조하면서 기초교육 확대, 문맹퇴치 및 기술 · 직업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수요원 확보 및 교육시설 정비가 필수적인 바, HRD 분야에 향후 2~3년간 약 700억 루피(약 10억불)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함.

5. 산업 · 통상 · 농업 정책

□ 파키스탄 산업부는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20년간 20%에 못 미치고 있으며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이 0.18%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부진요인으로 10~15년 주기의 정정불안 반복과 산업생산 부진 사이클이 일치한다는 사실을 지적, 정치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섬유, 기계, 중소기

업 육성 등의 전략을 통해 2010년까지 제조산업 비중을 25%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함.

□ 상무부는 수출 지역 및 품목 다양화를 통한 수출확대와 수출환경 개선 등 두 가지 전략을 제시하면서 수출환경 개선을 위해 원자재 수입 등에 대한 최고 관세율을 25%까지 완화하였으며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와의 FTA(또는 PTA) 추진, SAFTA 발효 노력 강화 등 국제적 차원의 수출환경 개선 방안을 발표함.

□ 식량 · 농업부는 파키스탄의 농업부문이 GDP의 25%, 고용의 49%, 직 · 간접 포함시 전체 수출비중의 70%를 차지하는 바, 높은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WTO위생검역(SPS)에 따른 규제 등이 수출증대에 장애가 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품질, 위생관리 능력 배양을 위한 원조지원을 요망함.

Ⅲ. 관찰

□ 파키스탄 정부는 금번 포럼을 통해 중기개발계획 및 MDG 이행을 위해 총 410억불 규모의 재원이 소요됨을 강조하고 국제기구 및 주요 원조공여국의 재정지원과 투자를 유인하는데 노력을 집중함.

□ WB, ADB, IMF 등은 최근 3~4년간의 경제성장 성과를 평가하고 사회 인프라 개발, 에너지분야 개발 지원 의사를 표명하고 파키스탄 정부에 대해 행정 효율성 및 각종 프로젝트의 이행과 관련한 투명성 확보를 요망함.

□ 미국측 USAID 대표는 인적자원 개발이 사회경제 개발의 관건임을 강조하면서 기초교육 및 기술 · 직업교육에 개발의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하며, 농업분야 발전과 사회적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방유력자(일종의 영주)의 대토지 소유관행 등에 대한 개혁 필요성을 제기함.

  – 미국대표는 또한 국제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적소유권 제도 등이 정비되어야 함을 강조

□ 일본은 4월 30일~5월 1일간 고이즈미 총리의 파키스탄 방문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학계, 원조기관(JICA) 및 외무성 대표로 구성된 본부대표단을 포럼에 파견하는 등 관심을 표명하였으며 98년 이후 중단된 엔차관 재개 등을 강조함.

□ 네덜란드, 스위스 및 EU 등은 개발계획 자체도 중요하지만 각종 지원이 원활히 이행되는지 여부에 대한 사후 평가와 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제기함.

[자료: 주파키스탄 대사관]

2005년 필리핀 개발포럼 및 제26차 필리핀 원조공여국 회의 결과

3월 7~8일간 Davao市에서 필리핀 정부와 World Bank 공동 주최로 필리핀 정부인사, 원조공여국 및 국제기구대표 250명이 참석한 가운데 표제회의가 개최된 바, 회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Ⅰ. 핵심사항

□ 필리핀 정부는 작년 Arroyo 대통령의 재집권이래 추진해 온 10대 공약(10-Point Agenda) 및 중기 개발계획(Mid-Term Philippine Development Program)을 중심으로 각종 개혁조치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원조공여국/국제기구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으며 원조공여국들은 개혁을 신속하고 철저히 추진함으로써 경제발전과 빈곤타파을 위한 선순환을 이끌어낼 것을 주문하였음.

□ 유명환 주필리핀 대사는 우리의 對필리핀 ODA 현황과 다바오직업훈련원 개원식을 소개하고 필리핀 경제발전과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우리 정부의 지원의지를 표명하였음.

Ⅱ. 회의개요

1. 회의제목

□ 2005 Philippines Development Forum:a Meeting of the Philippines Consultative Group & other Stakeholder

2. 참석자(약 250명)

□ 필리핀정부:대통령, 재무부, 경제개발청, 통상산업부, 에너지부, 교통통산부, 민다나오개발청, 농업부 등 경제부처 장관 전원 및 하원의원 수 명

□ 원조공여국/국제기구

-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영국, 독일 등 24개국
- World Bank, IMF, ADB, EU, UN 등 22개

국제기구

※우리 대표단은 유명환 대사, 배한진 서기관, 최성호 KOICA 소장이 참석

Ⅲ. 주요 논의내용

1. 회의 전반

□ 금번 회의에서 필리핀측은 Arroyo 대통령을 비롯한 경제각료 전원이 참석하여 10대 공약 및 중기 발전계획에 따른 필리핀 정부의 개혁 노력을 소개하고 문제점과 개선책에 관한 원조공여국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였음.

- ①VAT 인상, Sin Tax 등의 증세조치, 전력공사 등 적자 국영기업 매각 등 재정적자 해소를 위한 개혁조치 ②투자 유치노력 ③부패, 무능 해소를 통한 good governance 육성 ④교육, 보건 강화 ⑤지방별 균형발전 방안 등을 소개

□ 원조공여국 대표들은 필리핀 정부의 개혁조치와 관련, 작년도 경제실적 호조(6.1% 성장) 및 세계경제 호조와는 달리 기회의 창이 줄어들고 있으므로(narrowing the windows of opportunity) 실기(失機)하지 않기 위해서는 개혁조치를 신속하고 철저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함.

- 아울러 각종 개혁조치에 대한 경과 및 미비사항을 세세히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정계획을 주문함.

□ 필리핀의 정치, 경제, 사회 발전은 빈곤층과 소외지역의 통합, 재정적자 해소, 부패무능 타파, 인구문제 해결 등의 종합적이고 동시다발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임이 재차 확인됨.

- 아울러 필리핀 전체의 정치안정과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낙후지역인 민다나오의 평화 정착과 경제개발을 통해 동 지역의 치안 불안을 해소하고 주류사회에 편입시키는 노력이 필수적임.

2. 주요인사 언급 요지

1) Arroyo 대통령(폐막연설)

□ 작년도 대통령선거 이래 강력한 개혁조치를 추진함으로써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는 바, 정치적 안정, 민다나오의 평화질서 회복, 투자유치에 유리한 대법원 판결, 재정개혁에 대한 의회의 협조 등이 중요한 사례가 되고 있음.

□ 재정개혁조치로 조세행정개혁, 국영기업 사유화, 예산적자 해소 및 빈곤타파조치 등을 추진하고 있는 바, 돈세탁 방지 비협조국 명단 제외, 일부 신용평가기관의 등급 상향 조정, 페소화 강세 등의 좋은 징조가 나오고 있음.

□ 경제개발을 위해 콜센터, 하이테크분야, 자동차산업에 대한 해외투자유치를 희망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농업, 주택, 광업 등의 육성 및 클라크-수빅 개발 등을 통해 천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대외정책과 관련하여서는 영토보존과 해외파견근로자 보호라는 대전제 하에 기존 우방국인 미국 및 아세안 제국 등과의 전략적 동맹을 강화하고 이슬람권, EU 등과의 파트너십을 육성해 나갈 것임.

2) Von Amsberg 세계은행 지역대표

□ 최근 세계경제의 침체 조짐 및 국제이자율 인상 등을 감안할 때, 경제개발을 위한 기회의 창이 점차 줄어들고 있으므로 경제개혁조치의 시급함이 강조되고 있음.

□ 최근 전력요금 인상, 주류, 담배세 부과, 재정건정성 확보 프로그램 도입, 에너지분야 개혁조치 등 필리핀 정부의 개혁의지를 평가하나, 막대한 부채 누적으로 인한 원리금 상환 부담이 경제발전의 최대의 걸림돌임을 감안할 때, 재정개혁의 강력한 추진이 필요함.

□ 재정개혁 조치로서 세원발굴뿐만 아니라 조세행정 개선 및 정부지출시 지출책임제도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부가가치세(VAT) 인상은 여러 단계의 복잡한 세제를 설정하는 것보다는 단순한 세제를 설정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국제사회는 필리핀의 개혁의지와 실천노력을 주시하고 있으며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는 경우 보다 많은 원조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있음.

3. 전체회의 및 분야별 회의

금번 회의는 전체회의 시간을 줄이고 5개 분야별로 working group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개개 사안에 대한 심층적인 토론을 유도하였으며 필리핀 정부 및 공여국/국제기구 외에 NGO 및 경제계 인사 등 이해관계자들을 초청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회의 형식을 변경함.

1) 전체회의

□ 전체회의에서는 필리핀 경제현황 및 개혁추진현황과 관련하여 ①재정개혁 및 금융제도 정비 ②중기개발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었음.

□ 아울러 민다나오 평화회담 및 개발계획에 관한 브리핑이 있었음.

2) 그룹별 회의

□ 그룹별 회의는 Social Progress, Growth and Investment Climate, Economic and Fiscal Reforms, Governance, Decentralization and Local Government 등 5개 그룹으로 나뉘어 각 분야별 현황을 점검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였음.

Ⅳ. 참가 성과

□ 금번 회의에서는 주재국의 경제현황, 중장기 발전계획, 국제사회의 평가 및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전반적인 토의가 이루어진 바, 이를 통해 우리의 원조방향을 점검하는 좋은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됨.

- 향후 對필리핀 원조는 필리핀이 당면한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주재국이 중장기적으로 설정한 개발계획 및 목표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효과적인 시행가능 여부 등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결정되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원조예상성과분석, 프로젝트 추진방안 및 일정에 대한 점검, 사후관리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다른 공여국 및 국제기구 등과의 정보 및 의견교환 등의 공조를 강화해야 할 것임.

- 아울러 World Bank 주도의 민다나오 다자신탁기금에도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자료:주필리핀 대사관]

Ⅲ. 기타

對필리핀 원조동향과 KOICA의 협력방향

최 성 호 / 한국국제협력단 필리핀사무소장

Ⅰ. 머리말

필리핀은 아시아에 속해 있으면서도 가장 아시아적 가치가 느껴지지 않는 이방인과 같은 존재이다. 전국민의 80% 이상이 카톨릭 신자인 아시아 유일의 카톨릭 국가이며 약 50여 개의 다양한 인종과 지역별로 따갈로그, 일로까노, 세부아노 등 지방언어가 산재에 있음에도 영어가 자유롭게 널리 통용되는 국가이다. 정치적으로는 대통령제 하에 행정의 지방분권화가 이루어지고 상 · 하원의 의회제도를 갖춘, 마치 미국 민주주의를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느낌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스페인 식민지 시대의 봉건적 잔재를 도처에서 발견할 수 있는 나라이다.

필리핀이 이러한 국가적 특성을 갖게 된 배경에는 무엇보다 서구 열강에 의한 식민지 역사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1521년 마젤란이 사마르 섬에 상륙한 이후, 1571년 국가형태를 갖추지 못한 이 지역을 정복한 당시 스페인 국왕 필립(Philip)에서 유래된 필리핀은 스페인 식민지 시대(1571~1898)를 거쳐 1898년 미국과 스페인 간 강화조약에 따라 스페인이 2천만 불의 대가를 받고 미국에 이양함으로써 미국 식민지 시대(1898~1946)를 겪었다. 1946년 미국으로부터 독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는 필리핀은 그러나 열악한 인프라 및 산업기반, 극심한 빈부격차, 만연된 정부 부패 및 무능, 높은 인구증가율과 실업률 등 국내적으로 많은 시련과 도전을 받고 있다.

본고에서는 아로요 대통령 집권 이후 최근 필리핀 정부의 국가개발목표 및 전략을 정리해 보고 1990년대 이후 최근까지의 주요 선진공여국의 원조동향과 특징을 살펴본 후, 끝으로 KOICA의 대 필리핀 협력현황과 지원실적을 평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Ⅱ. 필리핀 국가개발정책 현황

1. 국내 경제구조

필리핀은 아세안 국가 중 발전속도가 늦은 편으로 사회인프라 및 산업기반이 미비하고 전국의 15대 명문 가족이 국부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반면, 270불 이하 극빈층이 약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등 극심한 빈부격차로 인해 사회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농업국가로서 노동력의 38%가 농업부문에 종사하나, GDP 중 농업의 비중은 19%에 불과할 정도로 낮은 농업생산성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사회적으로 토지개혁의 실패로 토지무소유 소작인이 많은 것도 주요 요인의 하나가 되고 있다. 그밖에 카톨릭 국가로서 연 2.3%에 달하는 높은 인구증가율과 실업률, 정부의 부패와 세수부진에 따른 만성적 재정적자 등도 경제사회 발전의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특히 현재 필리핀은 탈세, 조세행정 낙후로 인한 세수확보 실패,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 외채누적 등으로 재정적자가 한계에 달한 상태로 외채상환 및 이자지급을 위해 매년 새로이 외채를 얻어야 하는 악순환에 처해 있다. 2003년 외채이자 상환 비중은 재정지출의 27%, 2004년은 33%, 2005년에는 36%에 달할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특기할 만한 사항은 현재 750만 명에 달하는 필리핀 해외근로자(Overseas Filipino Workers : OFW)가 본국에 송금하는 금액이 최근의 ADB보고서에 따르면 2003년에 73억불로 발표되었으나 비공식 경로를 통한 송금액을 합치면 사실상 100억불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필리핀이 지난 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를 피해갈 수 있었던 중요 요인의 하나로 평가된다. 2004년 말 현재 외채는 556억불로써 GDP의 64%를 차지하여 비교적 높은 편이지만, 외환보유고가 161억불이며 중장기채가 89%를 차지함으로써 당분간 외환위기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2. 필리핀 정부의 국가개발정책

2001년 1월 출범한 현 아로요 정부는 빈곤퇴치와 지속적 성장을 개발의 최우선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2004년 6월 대통령 취임시 발표한 국가개발 10대 국정과제(10-point agenda)는 ①중소기업 융자확대 및 농지개량을 통한 1,000만 개 일자리창출 ②교육투자 확대 ③세수증대 및 정부지출 삭감을 통한 균형예산 달성 ④도서간 선박연계망 및 IT 인프라구축을 통한 지방분권화 달성 ⑤벽지에 대한 전력 및 수도공급 ⑥루손, 비사야스, 민다나오의 균형발전을 통한 마닐라 인구집중 해소 ⑦수빅, 클라크 등의 경제특구 육성을 통한 아시아 중심 물류센터 구축 ⑧선거개표 전산화 ⑨이슬람반군과의 평화협상의 성공적 종식 ⑩국민대화합 등으로 현 정부의 국정운영의 근간이 되고 있다.

또한 필리핀 경제개발청(NEDA)은 2010년까지 1,000만개의 직업창출, 재정적자 해소와 절대빈곤층을 17%로 감소하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2004-2010년 중기개발계획을 발표하였다. 동 계획에 따르면 2010년까지 GDP성장률이 연평균 7%대에 이를 것이며 수출은 2004년 431억불에서 2010년 843억불을 각각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재정적자는

〈중기개발계획 주요경제지표(2004-2010)〉

지표 /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GDP성장율(%)	5.9-6.1	5.3-6.3	6.3-7.3	6.5-7.5	6.8-7.8	7.0-8.0	7.0-8.0
수출(10억불)	43.1	47.4	52.3	58.2	65.4	74.3	84.3
GDP대비 투자비중(%)	20.1	20.3	21.4	22.5	24.1	25.8	27.7
물가상승률(%)	4.0-5.0	4.0-5.0	4.0-5.0	3.0-4.0	3.0-4.0	3.0-4.0	3.0-4.0
GDP대비 재정적자(%)	△4.2	△3.6	△2.9	△2.0	△1.1	△0.2	0.0
고용창출(천 명)	1,004-1,028	1,090-1,177	1,271-1,320	1,350-1,416	1,436-1,568	1,651-1,711	1,725-1,790
극빈가구(%)	25.69	24.35	22.93	21.61	20.31	19.04	17.88

※ 자료: 필리핀 경제개발청(NEDA)

2004년도 목표 35억불 적자에서 2010년까지는 균형재정을 달성하고 빈곤가구수는 현재의 27%에서 20% 이하로 축소될 전망이다.

Ⅲ. 선진공여국의 대 필리핀 원조동향

1. 필리핀의 수원현황

필리핀은 개발원조에 대한 수원 행정체제를 잘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모든 수원업무는 경제개발청(NEDA)이 담당하고 있으며 NEDA 내의 부서별 담당기관이 세분화되어 공공투자국(PIS)은 우리의 프로젝트, 개발조사, 물자공여, 차관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학특별위원회(SCS)는 연수생초청 및 전문가파견 업무를, 그리고 필리핀봉사활동조정국(PNVSCA)은 각국의 봉사단파견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필리핀은 재정적자로 인해 국제기구 및 원조기관으로부터의 재원이 국내 인프라 분야 투자의 주요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2004년도 기준 총 6억불의 ODA중 77%가 동 분야에 지원되었으며 농업 및 자원부문, 사회개혁부문, 제도구축부문 순으로 재원이 배분되었다.

〈분야별 ODA 지원(2001-2004)〉

(단위: 백만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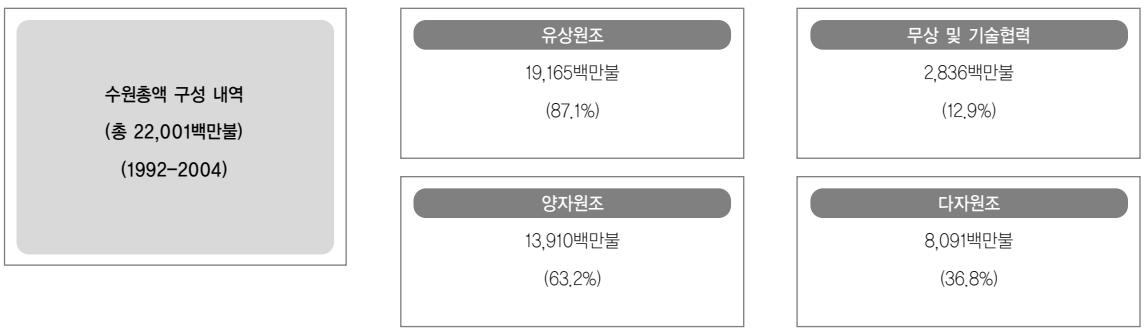
구 분	2001	2002	2003	2004
농업, 자원	308.99	126.77	97.15	59.97
정부, 제도	164.18	41.71	141.54	18.96
인프라	902.72	662.28	90.24	468.12
사회개혁	46.74	318.55	113.69	58.13
산업, 서비스	247.29	2.98	2.02	-
계	1,670.36	1,152.28	444.64	605.24

※ 자료: 필리핀 경제개발청(NEDA)

필리핀이 지난 1992~2004년간 공여국 및 국제기구로부터 받은 수원총액은 총 220억불로써 연평균 17억 불을 공여받았다. 이 가운데 차관형태의 유상원조(loan)가 87%, 무상 및 기술협력(grant/TA)이 13%를 각각 차지하였다. 유상원조는 국제기구 중에는 ADB 및 IBRD 차관이 대부분이고 공여국 중에는 일본이 양자간 유상원조의 80% 이상을 점유할 정도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무상 및 기술협력은 다자형태로는 EU, UN산하기관, ADB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았으며 양자형태로는 일본, 미국, 호주 순으로 많은 공여를 받았다.

동 기간 동안 유 · 무상을 합친 총 수원액 중 양자원조(Bilateral) 비중은 63%, 다자원조(Multi-lateral)는 37%를 각각 차지하였다. 특기할만한 사

〈필리핀 수원총액(1992-2004) : 22,001백만불〉



※ 자료 : 필리핀 경제개발청(NEDA)

〈주요 원조공여국 및 국제기구(1992-2004)〉

순 위	원조국/국제기구	금액 (비중)
1위	일본	10,286백만불(46.8%)
2위	IBRD/WB	3,909백만불(17.8%)
3위	ADB	3,622백만불(16.5%)
4위	미국	782백만불(3.6%)
5위	호주	496백만불(2.3%)
6위	독일	482백만불(2.2%)
7위	중국	462백만불(2.1%)
8위	영국	306백만불(1.4%)
9위	EU/EC	296백만불(1.3%)
10위	프랑스	289백만불(1.3%)
11위	스페인	276백만불(1.2%)
12위	UN	182백만불(0.8%)
13위	캐나다	146백만불(0.7%)
14위	오스트리아	104백만불(0.5%)
15위	한국	89백만불(0.4%)

※ 자료 : 필리핀 경제개발청(NEDA)

〈 최근 4개년간(2001-2004) 수원규모 추이 〉

(단위: 백만불, %)

구 분	2001	2002	2003	2004
무상	156(9.3%)	137(11.5%)	130(29.2%)	139(18.1%)
유상	1,514(90.7%)	1,050(88.5%)	315(70.8%)	630(81.9%)
계	1,670(100%)	1,187(100%)	445(100%)	769(100%)

※ 자료: 필리핀 경제개발청(NEDA)

항은 지난 13년간 필리핀에 대한 양자간 원조총액 139억 불 중 74%에 해당하는 102억불이 일본에 의해 공여된 사실이다. 또한 2004년 중국이 4억불 규모의 차관공여를 약속함으로써 원조공여 순위 7위에 오른 점이다. 그밖에 필리핀에 대한 주요 공여국으로는 미국, 호주, 독일, 영국 등을 들 수 있다. 한국은 8,900만불을 공여, 총 수원액의 0.4%를 차지하고 있다.

2. 주요 공여국 및 국제기구 원조동향

주요 공여국 및 국제기구의 대 필리핀 원조동향을 살펴보면 지난 13년간 102억불을 공여함으로써 필리핀 수원 총액의 약 47%를 점유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공여액의 90% 정도가 일본국제협력은행(JBIC) 등을 통한 차관공여로 이루어지고 있다. 중점 지원분야로는 ①경제 인프라 구축 ②산업 및 농업분야 구조조정 지원 ③빈곤완화 및 기본 생활환경 개선 ④환경보전 농촌개발, 재난예방 등이며 최근에는 민다나오 지역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다. 2002년 아로요 대통령 방일시 향후 5년간 29억불의 원조를 약속하였으며 이중 민다나오 개발에 6억 4,500만불 지원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필리핀의 전통적인 우방인 미국은 지난 30여년간 40억불 이상의 원조를 공여하였으며 최근까지도 양자간 원조에 있어서는 일본 다음으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다. 지원분야로는 ①경제발전: 민다나오지역의 경제성장 가속화 및 소득 균등배분, 무역 및 투자증진에 필요한 환경개선 ②환경보전: 산림 및 해양자원 관리 및 보호, 온실가스 방출 억제 ③인구보건: 가족계획 보급, 어린이 보건 및 영양개선, 에이즈예방 ④민주화: 권한 및 재원의 지방정부 및 시민사회 단체로의 이양 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항은 최근 테러근절 및 지역개발 등 정치경제적 관점에서 총지원액의 40% 이상이 민다나오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사실이다.

호주는 지난 13년간 4억 9,600만불을 공여하여 일본, 미국 다음의 공여국이며 중점지원분야는 교육기회 및 질 향상, 효율적인 정부행정 증진, 농촌개발을 통한 농촌지역 소득증대, 기초 의료혜택 증진, 사회소외계층 지원 등이다. 그밖에 캐나다는 동 기간동안 1억 4,600만불을 공여하였으며 이중 약 70%는 양자간 지원형식으로 20%는 다자간 지원형식으로 나머지 10%는 NGO, NGI 및 민간부문 등을 통한 파트너십 프로그램으로 지원되었다. 중점지원분야로는 ①Governance 증진(공공부문 운영관리 개선; 경제사회 정책 및 제도, 분권화 등) ②필리핀의 민간부문

〈2004년도 수원내역(잠정)〉

순 위	원조국/국제기구	2004년도 금액(비중)
1위	중국	400백만불(52.0%)
2위	호주	119백만불(15.5%)
3위	IBRD/WB	65백만불(8.5%)
4위	일본	54백만불(7.0%)
5위	한국	50백만불(6.6%)
6위	이탈리아	27백만불(3.6%)
7위	미국	20백만불(2.6%)

※ 자료 : 필리핀 경제개발청(NEDA)

능력구축(민간부문 개발환경 개선; 취업환경 개선, 임금 개선 등) ③BHN, 여성개발, 환경분야 등을 들 수 있다.

국제기구로는 세계은행과 마닐라에 본부가 있는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차관사업을 많이 실시하고 있다. 세계은행의 경우, 2001년 말 기준 차관사업은 29개 프로젝트에 10억 6,600만불이며 무상지원은 47개 사업에 5,700만불 상당을 지원하였다. 중점지원분야로는 경제회복 및 안정, 인적자원 개발, 환경친화적 농촌지역 개발, 도시화 가속지역 주민생활의 질 개선, 민간기업 성장 촉진, 정부의 부패방지 및 공공행정 개선 등이다.

그밖에 EU도 필리핀에 대한 지원을 증대하고 있는 추세인 바, 오지의 빈곤 농촌마을의 생활수준 향상(농업생산 및 판매 인프라개선, 소득창출 기회 제공, 소규모 융자제도, 보건의료혜택 증진), 보건, 농지개혁, 환경, 재난구호 등 분야에 중점 지원하고 있다. 특히, 최근 필리핀 EU 대표부는 2007~2013년도 국별전략보고서(CSP)를 통해 향후 4년(2007~2010)간 필리핀의 빈곤완화 및 천년개발목표(MDGs)에 부합하도록 보건 및 교육 부문을 중점지원 부문으로 그밖에 소규모 프로젝트, 민다나오 신탁기금(MDTF), 무역 및 개발 연계부문을 기타 지원부문으로 하여 총 90백만 유로를 지원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3. 필리핀 주재 외국봉사단 활동현황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필리핀은 경제개발청(NEDA) 산하에 봉사활동조정국(PNVSCA)을 두어 각국의 봉사단파견 업무를 조정, 승인하고 있다. 현재 필리핀에서 동 조정국을 통해 공식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봉사단 파견기관은 한국해외봉사단(KOV)을 포함, 총 9개 기관이다. 국별로는 호주가 AVI, AYAD 등 2개 기관, 일본은 JOCV와 OISCA, 독일의 DED, 영국의 VSO, 미국의 평화봉사단(USPC), 그리고 UNV 등에서 총 340여 명이 파견되어 활동중이다. 단원들은 대체로 필리핀 전역에서 활동중이나, 최근의 폭탄테러 등 치안 악화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루손 지역과 비사야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회교권이 많은 민다나오지역은 파견을 중단, 또는 자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필리핀 주재 외국봉사단 파견 현황〉

파견기관명	봉사단 파견체제 및 활동규모		
	파견회수	단원임기	활동인원
Australian Volunteers International(AVI)	비정기적	1~2년	1명
Australian Youth Ambassadors for Development(AYAD)	연간 2회	3개월~1년	7명
German Development Service(DED)	비정기적	1~6년	32명
Japan Overseas Cooperation Volunteers(JOCV)	연간 3회	1~3년	54명
Org. for Industrial, Spiritual & Cultural Advancement(OISCA)	비정기적	2~6년	1명
Voluntary Service Overseas(VSO)	연간 3회	1~6년	36명
United States Peace Corps(USPC)	연간 2회	2~3년	119명
United Nations Volunteers(UNV)	비정기적	6개월~6년	30명

※ 자료 : 필리핀 봉사활동조정국(PNVSCA)

Ⅳ. KOICA의 대 필리핀 협력사업 평가

1. 대 필리핀 지원실적(1991-2004)

KOICA는 1991년 설립 이래 2004년 말까지 필리핀에 2,397만불(잠정치)을 공여하였으며 특히 2000년 이후 지원 규모가 대폭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그동안 연수생초청은 1,057명을 실시하였고 최근에는 연간 100명 이상씩 초청하고 있으며 필리핀 경제개발정책 과정을 국별과정으로 매년 운영하고 있다. 전문가는 총 17명, 봉사단은 137명이 각각 파견되었다. 개발조사는 지질조사, 광물탐사 등 6건(188만불)을 실시하였으며 이 가운데 복합화력발전소 전환 타당성조사('93~'94년)는 이를 토대로 한국전력이 필리핀에 화력발전소를 건설하여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개발조사의 모범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물자지원은 95만불이 공여되었고 현재는 필리핀은 단순 물자공여를 지양하고 있다. 프로젝트형 사업은 총 5건에 1,123만불이 지원되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카비테 지역의 한-필 친선병원(380만불)과 다바오시 한-필 직업훈련원(500만불)을 들 수 있고, 한-필 IT훈련원(500만불)은 현재 건축 중에 있다. NGO 지원은 보건, 교육, 지역개발 분야 등 총 5개 단체에 57만불을 지원하였다.

〈연도별 지원추이〉

구 분	1991-93	1994-96	1997-99	2000-02	2003-04
합계 (천불)	2,080	2,524	1,704	7,073	10,589

〈KOICA 지원실적 세부내역(1991-2004)〉

사업명		세부내역
연수생초청	1,057명	공무원행정발전계획, 관세기법, 농업금융 및 협동조합경영 등
전문가파견	17명	공공행정, 수산양식, 광물자원탐사, 식품공학, 해양오염, 잠업 등
봉사단파견	137명	컴퓨터, 작물생산, 용접, 지역개발, 간호, 축산, 한국어, 원예 등
개발조사	6건	1. 동부 비사야스 공단 조성 개발조사('93-'94/300천불)
		2. 파나온섬 지질조사사업('92-'93/136천불)
		3. 복합화력발전소 전환 타당성조사('93-'94/374천불)
		4. 수리가오 해저광물 탐사사업('97-'00/219천불)
		5. 배전계통 개선 사전조사('02-'03/810천불)
		6. 아세안 6국 일본뇌염예방 백신 연구사업('02-'06/2,500천불)
물자지원		사무기기(컴퓨터, 프린터 등), 차량 등 총 95만불
긴급원조		화산폭발, 태풍, 산사태피해구호금 총 22만불
프로젝트	5건	1. 잠업개발사업('95-'96/500천불)
		2. 세부시 공항도로표지판 설치사업('96/120천불)
		3. 한-필 직업훈련원 건립('96) / 사전조사만 실시
		4. 한-필 친선병원 건립사업('99-'01/3,800천불)
		5. 한-필 직업훈련원 건립사업('03-'04/5,000천불)
		6. 한-필 IT훈련원 건립사업('03-'05/5,000천불)
NGO지원	5단체	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 선한사람들, 한국JTS 등 총 57만불

2. KOICA 지원사업의 효과성 평가

연수생초청사업은 경제정책관리 및 농업관련 분야를 위주로 빈곤퇴치를 위한 인적자원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관련 정부부처 인사들의 연수를 통해 필리핀 정부의 빈곤감소, 사회개발, 지역간 균형개발에 중점을 둔 중기개발계획의 추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02년에는 연수생동창회 모임인 PHILKOFA를 결성하고 활동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연수사업의 사후관리와 연수생간 유대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봉사단파견사업은 grass root 차원의 기술전수 및 개발의식 고취에 일차적 목표를 두고 필리핀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인 농어촌개발 분야에 적극 부응하며 직접적인 농어촌 주민과의 접촉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필리핀측으로부터는 KOV 활동에 대한 높은 평가와 함께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중이나, 한편으로는 단원수의 증가와 더불어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사전 수요발굴 및 파견계획을 보다 면밀히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개발조사사업은 필리핀의 빈약한 천연자원 개발과 전력난 해소사업을 중심으로 실시하였다. 바탄지역의 복합화력발전소 전환 타당성조사에 이어 한국전력의 발전소 건설사업 진출 등 가시적인 효과를 거둔 성공적인 케이스도 있으나 필리핀에서 실시한 지질조사나 광물탐사의 경우, 단기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사업이라고 판단된다. 이밖에 경제개발계획에 맞추어 항만, 도로,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타당성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프로젝트사업은 필리핀의 개발수요에 부합하는 보건의료증진, 빈곤퇴치, 인적자원개발 등을 목표로

지원하였다. 1995~96년 실시된 잠업개발사업은 지속적인 사후관리 미비 등으로 큰 가시적인 효과는 거두지 못하였다. 현재 카비테 공단 인근지역에 설립하여 운영 중인 한-필친선병원의 경우, 프로젝트사업의 지속성(sustainability)을 위하여 의료장비 보수 및 추가지원, 운영관리 등 정기적인 사후관리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2005년 3월에 개원하여 현재 학생을 모집 중인 다바오시의 한-필 직업훈련원은 1년간 우리측 자문관의 지도를 받지만 동 훈련원의 운영, 관리에 대한 전문적 노하우의 전수, 훈련원 장비의 사후관리, 수료한 기능공의 향후 진로 등에 대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사업의 취지에 맞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Ⅴ. 맺음말 : 원조중점분야 및 추진방향

필리핀은 수원체계가 비교적 우수하고 인력이 풍부한 반면, 정치불안, 극심한 빈부격차 및 지역 · 종교간 갈등, 전문산업인력 부재, 천연자원 빈약 등 국가발전의 저해요소로 인하여 경제사회 개발이 지체되고 있다. 현 아로요 행정부는 10년 내 빈곤극복 달성을 경제개발의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①자유경쟁체제 구축 ②농업근대화 중점 ③사회정의 및 소외계층 배려 개발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필리핀 정부의 중점 개발계획을 반영하여 경제개발 과정에 필요한 인적자원개발 분야, 보건의료 분야, 농업 및 교육훈련 분야에 중점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즉, 구체적인 중점지원 추진분야로는 ①직업훈련, 기술교육, IT분야 등 필리핀 경제개발과정에 필요한 인적자원개발 분야 ②행정능력 향상 및 기초산업 기술협력 분야 ③필리핀 정부의 경제개발 최우선순위인 농어업 분야 ④필리핀 정부의 민다나오 개발정책 등 지역간 소외지역 개발지원을 통한 사회통합 및 Good governance 지원 ⑤열악한 보건의료 및 복지수준 개선을 위한 의료시설 지원 ⑥선 · 후진국 간 정보격차(Digital divide) 해소를 위한 IT분야 ⑦개발의욕 고취형, 주민참여형 사업전개 확대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필리핀의 민다나오 지역은 국내적으로 지역간, 종교간, 빈부간 갈등을 야기하고 있으나, 향후 발전잠재성 등을 감안, 필리핀 국가개발 계획의 중점추진 사안인 바, 빈곤퇴치와 지역통합의 정책을 반영할 수 있는 협력사업이 더욱 고려되어야 할 지역으로 판단된다.

한편 대 필리핀 협력방향은 양국간 통상, 투자, 인적교류 등 실질적 관계가 심화되고 있고 지리적 인접성으로 인해 우리의 대 아세안 시장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 · 경제적 상호보완 측면으로 지원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정보통신분야 지원의 파급효과 등을 감안, IT 인프라구축 등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정치외교적인 관점에서 필리핀은 한국전 참전국인 전통 우방국으로서 특히 최근에는 탈북자와 관련된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함으로써 아국의 외교활동을 직 ·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통상경제적 관점에서는 아국의 주요 교역대상국(12위)이며 매년 20억불의 무역흑자 창출국으로서 교역량 및 아국의 무역흑자 규모가 지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원조실시의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개발수요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원조수단 투입을 통해 원조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국별원조계획(Country programming)의 조속한 수립이 필요하다. 세계은행, 일본, 미국 등 필리핀의 대표적인 원조기관은 기관특성에 맞게 국별원조 지침을 마련하여 보다 효과적인 원조재원 배분을 실시하고 있다. 그밖에 국별원조정책과 더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 원조목표와 수단의 계속적인 보완을 위해서는 상시적인 원조정책 대화 채널구축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Colombo Plan

김 태 형* / Colombo Plan 민간부문개발프로그램 과장 (Director, Program of Private Sector Development)

Ⅰ. 시작하는 말

콜롬보플랜은 세계에서 UN에 이어 두 번째로 오래된 역사를 가진 정부간 국제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이 기구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아 보인다.

이는 콜롬보플랜이라는 명칭에서도 한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콜롬보라는 이름은 이 기구가 스리랑카 콜롬보의 개발과 관련된 것이라 생각하게 만들며 플랜이라는 명칭도 한시적이며 도시개발 계획 같은 인상을 주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사실 콜롬보플랜은 유엔이 설립되고 난 지 몇 개월후에 설립되었으며 양자간 협력(Bilateral Aid)이 활성화되기 전에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회원국 국민들에게 많은 기여를 했던 기구이다.

모쪼록 이번 소개글을 통해 콜롬보플랜이라는 국제기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Ⅱ. 콜롬보플랜 개요

1. 콜롬보플랜이란

Colombo Plan은 아시아 · 태평양지역 국가들이 모여 만든, 아시아 · 태평양지역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간 기구(Inter-governmental organiza tion)이다. 동 국제기구는 아태지역 국가들의 경제 사회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체로서 그 정식 명칭은 *The Colombo Plan for Cooperative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in Asia and the Pacific*(아태 경제사회개발 계획)[1]이며 일반적으

*필자는 한국국제협력단에서 2004년 9월-2006년 8월간 콜롬보플랜에 파견되어 근무중임.
1) 1977년 12월 신헌장을 채택, 개명.

로 Colombo Plan 이라 줄여서 불리운다.

2. 콜롬보플랜의 역사

Colombo Plan이 탄생하게 된 계기는 Marshall Plan이 처음 유럽에 실시될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영국 등 영연방국가들은 세계 최초의 대규모 유럽경제 부흥계획인 Marshall Plan을 모방하여 아시아지역의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공산주의 확대를 방지하고자 Colombo Plan[2]을 설립하였다.

Marshall Plan

전후 1945년부터 1947년까지 미국은 유럽경제의 부흥을 도모하고 미국과의 무역을 촉진하는 반면, 공산주의 같은 급진주의를 저지하기 위하여 유럽에 약 90억달러의 有, 無償 경제원조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유럽은 여전히 심각한 재정적인 압박에 시달렸고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는 공산주의가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유럽에 대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경제원조계획 수립을 구상하게 되었다.

미국의 Marshall 국무장관은 유럽에서의 소련의 영향력 확대 저지와 유럽 경제부흥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국무성에 유럽의 경제부흥 지원을 위한 방안 모색을 지시했고 여기서 1947년 봄, 마샬플랜이 나타나게 된다.

Marshall Plan의 성공에 기인하여 1950년 1월, 8개국 영연방 외무장관[3]들은 스리랑카[4] 콜롬보에서 아시아 최초의 영연방 외무장관 회의를 갖고 남아시아 및 남동아시아 지역에서의 경제적 발전과 공산주의 확산을 막기 위해 아시아판 마샬플랜을 추진하기로 기본적 합의를 하였다.

그후 1950년 5월, Australia Sydney와 1950년 9월, England에서의 총회(Consultative Committee)[5]를 통해 1951년 7월 영연방 7개국은 18억 6천만 파운드의 기금을 모아 6개년 개발계획을 수립, 정식으로 콜롬보플랜의 활동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보면 콜롬보플랜은 처음부터 국제기구로서 활동을 시작한 것은 아니며 설립 당시에는 기한이 정해진 개발계획으로 시작되었으나 세월이 흘러가면서 국제기구화 되었다. 그 후 총회에서 5년 시한으로 계속 콜롬보플랜의 활동이 연장되었으며 마침내 1980년 11월 자카르타 총회에서 콜롬보플랜 활동을 항구적으로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콜롬보플랜 회원국은 발족 당시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 등 7개국이며, 현재는 한국, 일본, 미국, 호주,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폴 등 26개국[6]으로 확대되었고 IBRD와 UNDP 등의 국제기관은 옵서버로 참여하고 있다.

---

2) 콜롬보플랜이라는 명칭은 최초의 7개국 영연방 대표 중 스리랑카 대표 JR Jayawardene와 호주의 대표 Percy Spender가 각각 본인의 이름을 딴 Jayawardene Plan과 Spender Plan의 이름을 주장했기에 절충안으로 Colombo Plan으로 부르기로 합의함.
3) 캐나다, 인디아, 오스트랄리아, 영국, 스리랑카, 파키스탄, 뉴질랜드, 남아프리카.
4) 당시에는 국명이 실론.
5) Colombo Plan was conceived in Colombo, nurtured in Australia and born in London.
6) Afghanistan, Australia, Bangladesh, Bhutan, Cambodia, Fiji, India, Indonesia, Iran, Japan, Korea, Laos, Malaysia, Maldives, Mongolia, Myanmar, Nepal, New Zealand, Pakistan, Papua New Guinea, Philippines, Singapore, Sri Lanka, Thailand, USA, Vietnam.

최초 회원국이던 영국과 캐나다[7]는 1991년 콜롬보플랜을 탈퇴하였다.

3. 콜롬보플랜의 설립 목적

동 기구의 설립 목적은 아시아 · 태평양지역 국가들의 자립과 상호 협력을 통해 동 국가 국민들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동 노력을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 아시아 · 태평양지역의 경제 · 사회적 발전에 대한 공동의 이해를 증진하고, 지원하며
- 회원국 간 기술협력을 증진하고 기술의 공유와 이전을 지원하며
- 회원국, 다자간기구 및 다른 기관과의 기술협력에 대한 관련 정보를 검토하여 제공하며
- 남남협력의 이념 하에 지역 내 회원국 간의 개발경험을 이전하고 공유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다.

4. 콜롬보플랜의 구성

콜롬보플랜은 총회(Colombo Plan Consultative Committee Meeting, CCM)와 이사회(Colombo Plan Council), 그리고 콜롬보플랜 사무국(Colombo Plan Secretariat) 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고정책결정기관인 총회(CCM)는 회원국 고위실무자(대사 또는 국장급)들로 구성되며 매 2년마다 회의를 개최하여 지난 2년간의 기술협력 활동 결과, 각국의 개발경험 및 의견교환과 향후 협력방향에 대해 협의한다.

콜롬보플랜 이사회는 스리랑카에 주재하는 중요한 모든 회원국 대표(주로 대사)로 구성되며 중요한 개발이슈를 협의하고 필요한 조치에 대해 조언을 하거나 총회 권고사항의 추진을 확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콜롬보플랜 사무국은 스리랑카의 Colombo에 소재하고 있는데 Consultative Committee와 Council 행정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회원국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개발경험 및 기술 공유 등을 위해 콜롬보플랜 연수프로그램 및 워크샵을 실시하고 있다.

5. 콜롬보플랜 예산

콜롬보플랜의 회계연도는 당해연도 7월 1일부터 다음년도 6월 30일까지이며, 주요재원은 각 회원국의 정기적 회비와 회원국의 자발적 기부금으로 대별된다. 회원국 회비는 각국이 균등하게 1년에 US$14,500로써 Council과 사무국(Secretariat) 행정비용 등에 사용하고 있으며 연수프로그램 재원은 회원국, 비회원국, 다른 국제기구의 자발적인 기부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콜롬보플랜의 연수프로그램은 주로 선진회원국 등의 자발적인 기부금으로 충당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연수프로그램을 수립하기가 쉽지 않으며 회원국이 기부하겠다고 선언(pledge)하는 시기와 기부금이 실제로 콜롬보플랜으로 입금되는 시기에 시차가 있으므로 비록 계획을 수립했다 해도 실제적으로 기부금이 입금되지 않거나 계획보다 뒤늦게 전달되면 연

7) 영국과 캐나다는 1991년 콜롬보플랜이 그 역사적 소명을 다했으며 이제 국제무대에서 명예롭게 은퇴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콜롬보플랜을 탈퇴하였음. 이에 자극을 받아 다른 회원국들은 일본의 제안에 따라 1994년 서울총회를 통해 콜롬보플랜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작업(Revitalization)을 시작하였음.

수계획이 뒤로 늦추어지거나 취소되어야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Ⅲ. 콜롬보플랜의 주요 사업

콜롬보플랜은 현재 4개의 주요 프로그램과 비정기적 프로젝트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3개의 프로그램은 콜롬보플랜 사무국이 실시하고 있으며 콜롬보플랜 기술교육대학은 필리핀 마닐라에 소재하고 있다.

1. 공공행정사업(Programme for Public Administration, PPA)

1995년 일본 정부[8]의 기금 지원으로 설립되었으며 세계화(Globalization) 및 시장경제(Market Economy)의 필요성에 부응하기 위하여 공공행정 및 행정능력 향상 등을 목적으로 주로 회원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수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주요 자금 제공국가는 일본으로 Japan division으로도 불리운다.

현재 PPA는 주로 공공행정 분야 중 거시경제관리, 빈곤퇴치, 환경, 생산성향상, e-government 등의 분야에 집중하여 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2005년에는 APO[9]와의 공동연수 7건을 포함, 말레이시아 태국 등과 협력하에 15개 프로그램을 추진 중에 있다.

2. 민간개발협력프로그램(Programme for Private Sector Development, PPSD)

민간부문의 발전이 국가경제발전과 빈곤퇴치를 위한 필수적인 부분임을 인식하고 1995년 한국 정부가 50만 불을 지원하여 중소기업부문 활성화를 위해 개설한 연수프로그램으로 주로 중소기업(Small and Medium Enterprises, SMEs)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국가 공무원이나 상공회의소 직원 및 중소기업 고위실무자를 대상으로 Business management, Finance, Marketing technology, e-commerce, Regional cooperation 분야를 집중하여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주요 자금제공 국가는 한국, 노르웨이 및 OPEC Fund이며 동 프로그램이 한국 정부의 지원으로 시작되었음을 고려하여 일명 Korean division이라 불리운다. 2005년에는 APO와의 공동연수 2건을 포함 총 9건의 연수 프로그램을 추진 중에 있다.

3. 마약프로그램(Drug Advisory Programme, DAP)

콜롬보플랜의 가장 오래된 연수프로그램으로 미국의 재정 지원으로 1973년 시작되었으며 인적자원개발(human resource development) 역량 강화를 위해 마약의 생산방지, 마약 남용방지 및 통제, 마약치료 등을 위한 워크샵 및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며

8) 일본은 1954년 콜롬보플랜 가입을 계기로 ODA를 시작한다.
9) Asian Productivity Organization(아시아 생산성 본부). 일본에 사무국을 두고 19개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생산성 향상을 통한 회원국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다.

회원국의 마약담당 공무원 및 NGO를 대상으로 연수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재원이 주로 미국에서 오기 때문에 일명 USA division으로 불리운다

DAP은 현재 마약으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과 미얀마의 마약 근절 지원에도 관심을 집중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인니, 태국 등 다양한 지역에서 마약퇴치 운동을 벌이고 있다.

4. 콜롬보기술교육대학(Colombo Plan Staff College for Technician Education, CPSC)

콜롬보플랜 기술교육대학(CPSC)은 1973년 Colombo Plan에 참여했던 국가들의 직업기술교육 체제개발을 돕기 위하여 설립된 전문 직업기술교육 및 연구기관이다. CPSC의 주요 목적은 회원국들의 직업기술교육/훈련 체제 개발 및 직업기술 교육/훈련 담당자들의 능력개발을 통하여 해당 국가의 경제 · 사회적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다.

CPSC는 콜롬보플랜 사무국과 별도의 이사회를 가지고 있으며 회원국은 18개국으로서 우리나라는 1974년에 가입하였으며 회원국은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부탄, 미얀마, 피지, 인도네시아, 인도, 이란,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네팔,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아, 필리핀, 싱가포르, 스리랑카, 태국이다.

현재 CPSC가 콜롬보플랜의 이사회와는 별도의 이사회 및 예산을 운영하고 있어 양자의 관계가 명확히 설정되지 않아 명료한 관계설정이 필요한 상황이며 CPSC 주재국인 필리핀 정부는 다른 회원국이 CPSC를 유치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Ⅳ. 콜롬보플랜의 문제점

1. 콜롬보플랜 역할 축소

콜롬보플랜의 역할은 국제사회에서 각 원조국들이 자신들의 원조기관 설립에 따른 양자간 원조(Bilateral Aid) 확대, 그리고 범세계적 특별기구(Special Agency)의 설립 등으로 60~70년대에 비해서 급격히 축소되었다. 이에 따라 콜롬보플랜의 역할 및 활동을 중간평가하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1994년, 전문가그룹(Eminent Persons Group, EPG)이 구성되어 콜롬보플랜의 활동에 대한 Reorientation이 제시되었다. EPG 그룹이 제안한 대안은 대략 2가지로 ①회원개도국이 필요로 하는 주제에 대한 정규적인 연수프로그램의 실시와 ②Project-based 훈련프로그램 제공에 콜롬보플랜의 역량을 집중한다는 것이다.

2. 안정적 사업예산의 확보 필요성

콜롬보플랜이 EPG 그룹이 제안한 사업 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사업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나 현재로서는 정기적인 회비는 Council과 사무국 행정운영비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비 예산 항목은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는 미국, 일본, 한국 등 소수의 원조국에 의한 자발적인 현금지원으로 연수사업을 추진해 가고 있으나 이는 불안정적인 재원조달로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조달 방식 확보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안정적인 재원 조달 없이는 장기적인 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이나 기술협

력을 확대 추진해 나가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안정적 사업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콜롬보플랜 헌법 개정을 통한 사업비 회비 신설이나 회비에서의 사업비로의 일정부분의 전용이 승인되어야 하는데 이 또한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3.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개도국의 개발경험 및 기술이전 등을 위해서는 회원국간 개발경험과 기술에 대한 정보 공유가 필수적이나 회원국 중 저개발국의 경우, 정보통신설비(ICT Facility) 수준이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인터넷 등을 통한 정보공유가 어려운 형편이다. 아울러 정보 공유의 중심 (clearing house)이 되어야 할 콜롬보플랜 사무국의 홈페이지를 비롯한 정보통신 인프라(ICT Infrastrue) 자체도 열악한 실정인 바, 이의 적극적 개선이 필요하다.

4. 연수분야 및 대상자의 구체화

콜롬보플랜과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아태 지역에서 활동 중인 UN 아태 경제사회이사회 (UNESCAP)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회원국을 위해 워크샵 및 세미나 등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워크샵 및 세미나는 주로 5일 이내-주로 각 회원국의 고위 정책 결정자를 대상으로-단기 workshop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는 고위정책자에 대한 워크샵 및 세미나 등이 실제적으로 국가정책을 변경시킬 수 있고 실질적인 경제개발을 가져온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콜롬보플랜은 중견 공무원을 대상으로 2주일부터 1년간의 장기적인 기술 이전을 목표로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고위공무원을 위한 정책적 workshop도 필요하지만 중견 공무원 및 민간부문을 대상으로 기술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연수프로그램도 국가경제발전에 필요하다고 판단, 현재로서는 콜롬보플랜은 중장기 연수프로그램에 보다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Ⅴ. 콜롬보플랜의 특징

1. 남남협력

남남협력(South-South Cooperation)이란 간단히 개발도상국간의 경제 · 기술협력을 말하는데, 이는 개발도상국이 종래처럼 선진국에 일방적으로 의존하여 경제개발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역사적으로 경험하고 선진국의 자본 · 지식집약적인 기술보다는 오히려 개도국의 실정에 맞는 노동집약적인 기술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개도국 간의 협력에 의한 경제발전을 이룩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이미 역동적인 아시아 지역의 특성, 개도국 간의 경제적 격차, 그리고 국제화 시대를 고려할 때, 남남협력은 이미 적합한 용어가 아니며 오히려 Grouping 형태로 추진되는 세부지역차원 접근법(sub-regional approach가 더 적합하다는 주장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의 일방적인 원조보다는 경제적 여건이 비슷한 개도국들이 주인의식(ownership)을 가지고 상호 협력하여 경제발전을 이룩하자는 남남협력의 취지는 지금도 그 의미가 퇴색

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콜롬보플랜은 인적자원개발(human rresource development) 및 남남협력(South-South Cooperation)을 지향하는 소수의 국제기구 중 하나이며 UN 다음으로 오랜 역사를 가진 국제기구이다. 콜롬보플랜이 남남협력을 주창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진 원조국으로부터의 원조가 실제적으로 개도국에 도달하는 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실제 원조가 도달할 시점에서는 환경이 변화되어 적합하지 않은 기술 원조 등이 지원되는 한계가 있다. 둘째,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기술격차가 커서 실제로 수원국에 전달되는 기술이 개도국 실정에 맞지 않아 무용지물이 될 경우가 많다. 셋째, 선발개도국의 개발경험 및 기술이 후발 개도국의 수준에 더욱 도움이 된다. 넷째, 선진국이 원조제공시 이런저런 조건을 다는 경우가 많아 수원국과 공여국 사이에 갈등이 유발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선진국으로부터의 원조를 기다리는 수동적인 자세에서 탈피하여 기술수준이 비슷한 선진개도국과 후발개도국간의 상호협력을 통해 경제개발을 추진해 나가자는 것이 콜롬보플랜이 남남협력을 주창하는 이유이다.[10]

현재 남남협력의 정신을 기반으로 한 콜롬보플랜의 주요 연수파트너국은 한국, 싱가폴,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 이란으로 인도의 경우, 콜롬보플랜 새천년 기금(Millennium Fund for Colombo Plan)을 만들어서 콜롬보플랜의 연수사업을 지원하고 있고 싱가폴 외무부, 태국의 TICA[11], 말레이시아 EPU[12] 등도 주요 협력파트너이다. 이러한 남남협력을 통해 아시아에서의 새로운 수원-공여국(Recipient-Donor Countries, RDCs)[13] 출현을 유도하여 일방적이 아닌 상호 협력하는 원조라는 새로운 방식이 출현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2. 작고 유연한 조직규모

콜롬보플랜의 활동은 자립정신에 의해 기본적으로 회원국 정부가 콜롬보플랜의 연수프로그램을 주관하고 사무국은 기술협력 및 정보확산 등의 최소한의 활동을 유지하는 사무국을 둔다는 것인데, 이러한 이유로 다른 국제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사무국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이는 기금의 성격 및 일반적 목적을 고려시, 분권화된 형태가 가장 효율적인 결과와 행정 유연성을 가져올 것이라는 동 플랜의 초기설립자(founding leader)들의 생각이 반영된 것으로 다자적 틀(multilateral framwork) 내에서 회원 간의 양자간 원조(bilateral aid) 형태로 상부상조하는 독특한 지원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10) 남남협력(Soth-South Cooperation)에 대해서는 각 개도국이 이미 기술수준, 경제수준, 사회적 수준이 다르고,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목적을 추구해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구시대의 산물이라는 주장도 있다.
11) Thai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gency(DTEC의 후신).
12) Economic Planning Unit under Prime Minister's Office in Malaysia.
13) 한쪽으로는 원조를 받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더 열악한 후발 개도국을 지원하는 국가군을 의미하여 태국, 인도, 중국, 말레이시아 같은 신흥 선진 개발도상국을 의미한다.

3. 비용효과적(Cost-Effective) 사업추진

콜롬보플랜은 사업예산을 절감하고 주최국의 주인의식(ownership)을 강조하기 위하여 콜롬보플랜의 연수프로그램을 연수 주최국과 공동비용 부담 형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통상 콜롬보플랜이 연수생의 항공료와 일비(DSA)[14]를 부담하고 연수 주최국인 회원국은 숙박, 식사, 강의 등의 Local host expenses를 부담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공동비용 방식을 통해 개도국이 인근 개도국가의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경제적 교류를 확대하고 유사한 개발경험 및 기술을 공유하며 주인의식을 고취함으로써 경제개발에 기여하는 한편 예산을 절감하여 비용효과적인 사업형태를 추진하고 있다.

4. 시너지 효과 제고(Synergy of Similarly Placed Institution)

콜롬보플랜은 현재 아시아 · 태평양지역에서 콜롬보플랜과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다른 국제기구와의 사업중복을 지양하고 비용을 절감하며 개발경험과 기술정보를 공유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회원국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들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협력관계가 APO 및 UNESCAP,[15] ADB 등과의 협력이다.

-콜롬보플랜은 2004년 APO와 공동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2005년 9개 사업에 대해 공동비용부담으로 공동 연수를 추진키로 합의하였고

-아울러 콜롬보플랜과 UNESCAP은 지난 몇 년 동안 매년 2건 정도의 공동 워크샵을 개최하고 있으며 UNESCAP에서 콜롬보플랜의 연수에 Resource person[16]을 파견하여 지원하기도 하였으며 2005년 6월 중국 북경에서 Workshop on Post Multi-Fiber Arrangement를 공동 비용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5. 우수기관 간의 연계강화(Linking Centers of Excellence)

콜롬보플랜은 아태지역에서 기술이전 및 인적자원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양자적 기술협력 프로그램도 실시하고 있는데, 선발개도국의 우수 국가기관 및 연구기관과 후발개도국의 국가기관 및 연구기관간의 기술협력을 강화하고 네트워킹을 구축해 나감으로써 비슷한 수준의 개발경험과 기술을 공유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제고하고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6. 민간부문의 지원 강화(Importance of Private Sector Development)

많은 원조국과 원조기관들은 개도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민간부문의 발전이 필수적 요소임을 강조하고 있는 바, 콜롬보플랜은 1995년 민간부문개발프로그램(Program for Private Sector Development)을

14) DSA: Daily Subsistence Allowance
15) UN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UN 아태 경제사회위원회).
16) Resource person이란 연수강의에서 전통적 의미의 Instructor를 의미하는 것으로 일방적 주입식 교육이 아닌 상호 토론 형태의 연수를 지향한다는 의미에서 Instructor가 아닌 Resource person이라고 대체하여 부르는 경향으로 바뀌고 있다.

콜롬보플랜 사무국내에 설립, 민간부문(Private Sector)의 실질적 발전을 통한 개도국 경제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각 회원국들의 상공회의소(Chamber of Commerce)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민간부문에서도 우수한 인재가 연수프로그램 등에 참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Ⅵ. 한국과의 협력관계

1. 가입

한국은 1962년 콜롬보플랜 회원국으로 가입을 신청, 1963년에 정식으로 가입하였다. 이는 1961년 5.16쿠테타 이후 대외적으로 적극적인 반공정책 및 경제개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동남아 및 서남아 국가들과의 정치 · 경제적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함이었다.

2. 참여 및 지원 현황(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1 참조)

- '94. 10. 26-28 제35차 총회 서울 개최
- 사무총장으로 김학수 박사 선출('95. 1-99. 1)
- KOICA 직원 3명, 콜롬보플랜 사무국에 파견
- 117만 불 상당의 현금지원 및 연수생초청, 전문가파견 지원

3. 한국의 콜롬보플랜 활용방안

90년대 이후 콜롬보플랜의 역할이 많이 축소되어 콜롬보플랜의 활동이나 기여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있으나 콜롬보플랜은 나름대로의 존재의미를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 무엇보다도 회원국 대부분이 개도국으로 선진 개도국이 후발 개도국을 지원하는 남남협력의 형태를 취함으로써 수원국의 현실에 적합한 보다 현실적인 기술이전이 가능하고 주인의식을 강조함으로써 여전히 아시아 · 태평양지역의 정부간 기구로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한국이 선발 개도국을 넘어 선진국으로 진입하고 있음을 보고 아태지역의 많은 개도국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보다도 자신들에게 보다 적합한 한국의 개발 경험과 기술을 전수받고자 하는 기대가 커져가고 있어, 한국은 콜롬보플랜을 통한 아태지역 개도국의 지원에 적극 기여함으로써 아태지역에서의 지도적 국가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한국이 UN 사무총장 선출 등 국제정치무대에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아태지역 국가들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적극적으로 콜롬보플랜에 참여하여 도덕적 국가, 기술 우위국가로서 한국의 이미지를 더욱 확산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각 회원국당 회비가 US$14,500/1년으로 유사한 활동을 하고 있는 다른 아태지역 정부간 기구인 APO(1년 회비 : 약 US$900,000)에 비해 비용효율적(Cost-effective)인 것을 감안해도 현재 콜롬보플랜에 대한 지원규모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한국의 역할을 조금 더 증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Ⅶ. 맺음말(콜롬보플랜의 나아갈 방향)

콜롬보플랜은 양자간 원조의 출현 및 전문 국제기구의 등장 등으로 인한 그 역할과 활동의 축소에도 불구하고 남남협력의 전형적인 정부간 국제기구로서의 존재의의를 가지고 있으며 아태지역 내의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는 UNESCAP, APO 등과의 협력 확대를 통해 아태지역 개도국의 경제적 · 사회적 발전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개도국 간의 경제격차 발생, 세계의 국제화 및 지역화의 흐름을 고려할 때, 남남협력도 지역주의(regionalism)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남남협력의 큰 틀 안에서 지역주의와 세계화, 그리고 북남협력(North-South Cooperation)을 복합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 Colombo Plan은 향후

- 아태지역에서 회원국들이 지식경제(Knowledge Economy)로 갈 수 있도록 더 많은 기술이전, 기술협력, 인적자원 교육 기회 확대를 추진하고
- 남남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선진 원조국의 지원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자세가 아닌 개도국 스스로가 자립하여 경제개발을 이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 성공적인 선진 개도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 · 경제적 발전을 위한 창조적 아이디어를 전파하는 선도적 지역기구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콜롬보플랜 회원국의 ①인적 자원개발(Human Resource Development) ②기술협력 강화(Technical Cooperation) ③정보공유 확대(Sharing of Information)를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현재 부정기적으로 선진국에 의해 지원되는 원조자금으로 운영되는 연수사업을 보다 안정적이고 장기적 계획에 따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안정적 사업예산의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둘째, 아태 회원국 간의 기술협력을 위해서는 정보의 공유가 필수적이나 개도국의 낮은 ICT 수준으로 인하여 기술이전 및 정보 공유가 낮아 콜롬보플랜의 홈페이지 활용 강화 등을 통한 정보공유 및 확산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며 셋째, 남남협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비정부기구(NGOs)의 활동에 주목하고 개도국간(South-South)의 경제 · 사회적 격차를 어떻게 극복해 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다루어 나가야 하며 넷째, 아태지역의 유사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는 다른 국제기구와의 사업 중복을 방지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효용을 극대화 하기 위하여 다른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공동비용 형태로 연수효과를 제고하고 비용을 절감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KOICA 對 콜롬보플랜 지원실적

1. 총괄

구 분	계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기 금	1170			70	500			100				200		100	200	
전문가(CPSC)	7	1	1	1	1	1		1	1							
프로젝트	150															150
공동연수	107					1개 29명									2개 33명	3개 45명
직원파견(사무국)	3															

2. 세부내역

가. 기금

- '93 기술자교육대학 (CPSC) 지원금70천불
- '94 기술협력기금 500천불
- '97 기술협력 Databank 구축을 위한 기금 100천불
- '01 Programme for Private Sector Development 지원금 200천불
- '03 Programme for Private Sector Development 지원금 100천불
- '04 Programme for Private Sector Development 지원금 200천불

나. 연수생초청

- '95 1개과정(중소기업 육성과정) 29명
- '04 2개과정(벤처경영과 전자상거래 응용/WTO 협상능력개발) 33명
  (각각 15명 / 18명임)

다. 전문가파견

- 콜롬보플랜 기술자대학 (CPSC)에 '91–'98년간 총 7명 파견
  – 직업훈련 기술교육 5명, 컴퓨터 2명

라. 사무국지원

- 콜롬보플랜 사무국에 협력단 직원파견
  – 안남기(3급) : '95.1–'97.5
  – 전준호(3급) : '97.5–'99.1
  – 김태형(4급) : '04.9–현재.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윤 영 옥 / 국제협력팀

20세기의 성공적인 인구가족계획 사업에도 불구하고 전세계에서는 여전히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다양한 인구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 각국은 인구고령화, 생식보건 및 생식권리, 성비 불균형, 가족구조의 변화, 인력 공급 등과 관련된 문제를 안고 있으며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우, 이러한 문제들이 집중적인 인구 증가 현상으로 인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제사회는 인구 문제를 개발의 핵심 요소로 인식하고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다음은 협회의 조직 및 역사를 소개하고 전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인구 문제들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과 60년대 우리나라 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의 최우선 정책이었던 인구 및 개발 목표를 달성하는데 중대한 역할을 한 해외원조 지원 현황을 소개하고자 한다. 덧붙여 협회에서 추진해온 국제협력활동과 인구, 생식보건에서의 역할을 소개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직면한 인구 및 개발의 과제와 국제협력분야에서의 우리의 중추적 역할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Ⅰ. 협회의 조직 및 역사

인구사업은 국가 경제사회개발계획과 통합하여 운영된다. 따라서 '인구'와 '국가개발'은 상호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또한 상호 의존적이라 할 수 있다. UN경제사회이사회(ECOSOC)의 협의자문기관인 본 회는 1961년 창립된 비영리단체로서 다양한 인구 및 가족계획사업, 모자보건사업을 수행하면서 국내의 인구안정화 및 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했다. 또한 경제개발 5개년계획과 더불어 실시된 가족계획 사업을 주관하며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등의 홍보 사업을 통해 인구의 양적 억제 정책을 성공리에 실현했다.

70, 80년대 가족계획사업을 성공으로 이끈 대한가족계획협회가 1999년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로 명칭을 바꾸면서 개발도상국의 보건 사업 및 교류 활동을 전개하는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고자 하였다. 이후

국제인구개발회의(ICPD) 생식보건 증진 사업을 추진하여 한국의 인구사업은 국가경제사회의 성공적인 발전으로 이어져 출산력은 계속 떨어지고 인구 성장률 또한 지속적으로 저하되면서 2003년 현재 합계출산율은 1.17% 그리고 인구성장률은 0.5% 수준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인구학적인 여건이 호전되면서 인구사업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정책지원과 재정투자는 점진적으로 하향 조정되고 가족보건 측면에서 그동안 주력해 오던 양적인 출산조절사업은 질적인 사업으로 전환되어 생식보건을 강조하고 추진하게 되었다.

연도	연혁내용
1961. 4. 1.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창립 (PPFK)
1961. 6. 30.	국제가족보건복지연맹(IPPF) 회원 가입
1962.	협회 시도지회 설립
1965.	시도지회 부속의원 설치
1968. 8.	가정의 벗 창간
1983. 7. 29.	11개 의원 및 영상개발원 신축
1986. 5. 10.	개정 모자보건법을 근거로 공공법인화
1993. 12. 17.	개정된 정관으로 주요사업에 청소년 사업 추가
1994. 5. 17.	교육부 학교 청소년 성교육/성상담 교원연수기관 지정
1995. 1. 1.	교육훈련원 설립
1996. 7. 1.	한국성문화 연구소 개소
1997. 4	보건복지부 공무원 성교육/성상담 연수기관으로 지정
1997. 6	가족계획과 생식보건 국제훈련 실시
1999. 3. 1.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로 명칭 변경
2000. 4.	연변조선족자치주 원조사업 착수
2000.12.	성폭력성상담 요원 훈련 실시
2002. 1.	APA/ICPD (아태지역 인구개발협의체) 사무국 업무
2003. 3.	밸런스캠페인 출범식
2004.	유엔 지정 인구 생식보건의 자문적 지위 획득

그리하여 국가 인구개발계획의 목표는 전반적인 경제사회발전과 더불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복지 향상에 두었고, 협회는 이에 부응하면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의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아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국내 사업구성은 크게 본부 및 교육연수원, 그리고 전국 13개 시 · 도 지회로 되어 있다. 세부적으로 소개하면 본부에는 기획조정실, 홍보실, 저출산대책사업본부, 고령화대책사업본부, 교육연수원 등이 있으며 하부조직으로 각 2실, 3본부, 1개 교육연수원에 13개팀이 있다. 그리고 동시에 전국 13개 지회 12개 클리닉이 있으며 현재 340여 명의 협회 임직원이 활동하고 있다. 본부와 지회활동을 통하여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5대 암 검진사업, 재가노인복지사업, 교원연수, 청소년 성건강 클리닉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국제사업으로는 국내에서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었던 가족계획사업을 개발도상국에 전수하고 국제연수 및 교류사업, 개발도상국 성 · 생식보건지원사업을 수행하여 왔다.

경제개발과 결부되어 이룩한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양적 인구억제 정책은 우리의 노력과 더불어 그동안 해외 원조국의 지원이 큰 기여를 하였다. 가족계획과 생식보건, 가족보건사업의 국제 협력 사업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혜국들의 사정을 원조국의 입장에서 먼저 이해해야 한다는 점에서 한국은 오랜 기간 동안 수혜국의 경험을 가진 국가로서 개발도상국을 보다 쉽게 이해하며 원조국의 역할을 매우 포괄적으로 수행하여 온 단체로 국제사회에서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

Ⅱ. 국제인구문제와 개발원조 지원현황

1. 아직도 인구문제는 존재한다

세계인구는 1800년 초 10억 명에서 1920년대 20억 명에 도달하기까지 120여년이 걸렸으나 1960년 이후 매 12-13년에 10억 명씩 증가하면서 비록 현재 감소추세이지만 1.33%의 증가율로 매년 한반도 인구보다 많은 7,800만 명씩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현재 전세계 여성의 출산율은 50년대에 비하여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아 인구증가율은 감소하였지만 전체적인 인구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증가될 전망이다.

이렇게 여성의 출산율은 감소하였으나 인구수가 증가하는 원인은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평균결혼 연령의 지연, 도시화, 피임의 확산 등으로 가임율과 출산율은 현저히 떨어졌지만 인구구조상 청소년이 10억 명을 차지하고 있으며 보건서비스의 향상으로 기대수명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즉, 인구문제를 접근하는 데 있어 우리는 출산력 감소만을 생각하지만 이는 전세계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면에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중요한 국제문제로 인식 할 필요가 있다.

2. 인구문제는 개발도상국가에서 더욱 심각하다

60억 명의 인구 중 4/5가 개도국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중 1/3인 15억 명이 1인당 1일 1달러 미만으로 생존하는 절대빈곤층이라는 점에서 인구문제는 오래전부터 중요한 국제개발과제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10억의 청소년 중 90% 이상이 개도국에 있으며 향후 인구증가는 개도국에 집중됨에 따라 개발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3. 국제사회에서는 개발도상국 인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왔다

일찍이 국제사회에서 인구문제는 개발의 핵심요소로 인식되어 부카레스트(1974), 멕시코(1984), 그리고 카이로(1994) 인구회의에서 개발과 인구정책간의 연계, 인권중심 그리고 주권 존중이라는 세 가지 원칙 하에 각종의 인구관련 문제를 논의하였다.

특히, 카이로 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ICPD)는 유엔환경회의(1992)의 주제인 '지속적 개발'을 명시적으로 수용하여 인구와 환경을 연계시켰을 뿐만 아니라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포괄적이고 개발 정책적인 접근방식을 행동계획으로 채택하여 오늘날 인구문제 접근의 준거 안을 제시하였다.

카이로 회의에서는 1995~2015년 간의 장기 행동계획을 결의하였는데 이 행동계획은 경제발전과 빈곤완화, 여성지위향상, 생식보건(Reproductive health) 및 기초의료 서비스 확충, 교육기반 확충, 시민사회와의 공동노력 등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동 행동계획은 기존의 인구정책 목표인 인구조절 수단으로서 가족계획사업이라는 양적 개념과 피임이라는 범위를 뛰어 넘어 생식보건, 생식권리(Reproductive Right) 그리고 개발권리(Development Right)라는 비교적 새로운 개념 및 인권에 기초를 두어 인간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둔 질적 인구정책으로의 전환점이라는 사실에 매우 큰 의의가 있다.

또한 많은 정책결정자들이 빈번하게 언급하고 있는 MDG(Millennium Development Goals)에서도 인구문제를 첫 번째 조항으로 다루고 있다. MDG는 2000년에 189개국의 정부대표가 유엔에서 2015년까지 실현할 내용으로 8가지 '세계인의 삶'의 변화가 목표이다.

그 내용을 소개하면 첫째, 극심한 가난과 기아의 박멸을 위하여 2015년까지 세계 극빈 인구를 절반으로 감소시킬 것, 둘째 기초 교육 달성, 셋째 성평등 및 여성 권익 향상, 넷째 영아 사망률 감소, 다섯째 모성건강 증진, 여섯째 HIV/AIDS, 말라리아 및 다른 질병과의 전쟁, 일곱 번째 환경사업의 지속성 강화, 마지막으로 개발에 대한 국제협력 증진을 강조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ICPD와 MDG를 통해서 2015년까지 빈곤층을 반으로 줄이자는 목표 달성에 합의하였으며, 기본 인권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빈곤 퇴치에 접근하고 있다. 이 기본 인권은 ICPD 행동계획(PoA)에서 합의되었던 목적을 출발점으로 하고 있다.

ICPD 목적을 달성하지 않고는 빈곤문제의 퇴치는 불가능하다. 교육과 생식보건 서비스의 접근성 측면도 빈곤을 퇴치하는데 중요한 선결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ICPD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MDG에 도달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국제사회는 교육과 보건(생식보건과 가족계획)에 대한 투자확대 및 여성권리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4. ODA에서의 원조 현황

한국은 해방 후 그리고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외국으로부터 많은 원조를 받으며 경제사회 발전을 이룩하여 왔다. 60, 70년대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국제개발 협력에 참여하기 시작하였고 유엔을 통해 ODA 자원을 조성,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우리나라 공여의 역사를 보면 각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실시되던 기술원조 및 인적교류 등이 1991년 한국국제협력단의 설립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적으로 이루어졌다.

우리나라의 공적 개발원조 실적은 대체로 매년 증가하여 1991년 GNP대비 0.02%이던 것이 2002년도에는 0.06%에 이르렀다. 1996년부터 2002년까지 최근 선진국들의 ODA 규모는 경기침체로 점차 감소한 수준이어서 1992~2001년 동안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회원국의 총 원조금액은 약 12%가 감소하였다. OECD 개발원조위원회 멤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1992~2001년 간에 원조금액이 거의 3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1997년 IMF 위기이후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997~2002년에는 원조금액이 약 50.3%나 증가하였다.

우리 정부는 향후 GNI 대비 ODA 규모를 0.1% 수준까지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자료출처: 우리 ODA 현황 및 향후 정책과제-지속가능발전위원회 ODA 정책토론회 자료, 2003. 2. 11, 외교통상부 국제경제국

우리나라 연도별 공적개발원조 실적

(단위: 백만불)

구 분	'91	'92	'93	'94	'95	'96	'97	'98	'99	2000	2001	2002
ODA총계	57.4	76.8	111.6	140.2	116.0	159.2	185.6	182.7	317.5	212.1	264.7	278.8
증가율(%)	▽6.0	33.6	45.3	25.7	▽17.3	37.2	13.8	▽1.6	73.8	▽33.2	24.8	5.4
ODA/GNP 비율 (%)	0.02	0.03	0.03	0.04	0.03	0.033	0.042	0.058	0.079	0.047	0.063	0.060

※ 자료출처: 한국국제협력단, 2003

5. 원조를 받은 수원국 중 한국의 경우 인구는 대표적인 비교우위분야이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인구사업을 수행한 국가 중 하나이며 인구분야에 있어서 외국으로부터 지원을 가장 많이 받은 국가 중 하나이기도 하다. 또한 한국은 인구사업에 있어서 해외원조를 가장 효율적으로 국내자원과 연계하여 활용한 국가로 평가받았다.

UNFPA도 1980년대부터 한국을 인구문제 성공국으로 인정하고 한국을 현장 학습장으로 지정하여 연수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인구문제와 관련하여 인구정책수립, 재원의 관리, 가족계획 보급, 피임시술, 홍보교육, 기관설립 및 운영(capacity building) 등에서 비교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Ⅲ. 협회의 현재 국제협력활동

1. 각종 국제연수 및 개발도상국 지원프로그램

인구정책/시책 및 생식보건 사업은 1991~2001년 전체 무상원조사업 중 0.3%를 차지하였으며 매년 미미하게나마 증가하여 왔다. 연수생초청사업이 전체의 49.2%를 차지할 만큼, 대부분의 인구생식보건 분야 지원은 인력개발 중심으로 정부와 민간단체간 협력 하에 이루어졌다. 특히 대부분의 인력개발 지원사업은 정부와 민간단체와 협력 하에 이루어졌다.

정부의 지속가능한 개발원조 우선정책에 발맞추어 협회에서는 인력개발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개발도상국의 인구개발사업을 지원해왔다. 지난 10년간 개발도상국 인구개발 및 여성분야의 다양한 인력을 초청하여 훈련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며 2000년도부터는 중국 연변지역을 시작으로 개발도상국 생식보건 사업을 직접 지원해왔다.

1) 인력개발원조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에서는 여성, 인구개발 및 가족계획 분야의 연수프로그램에 있어서 1994년부터 2003년까지 전세계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연 평균 75명 이상, 730여 명의 연수생초청 실적을 거두었다.

연도별 인구개발분야 인력개발을 위한 연수생 수

연도	연수생 수
1994	39
1995	42
1996	74
1997	68
1998	62
1999	110
2000	125
2001	48
2002	85
2003	77
2004	100
평균	75.5명

※ 자료출처: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국제협력팀

2) 개발도상국 지원사업

가. 연변조선족 자치주 인구/생식보건 기술원조사업

1995년 이래로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는 중국 가족계획협회와 상호 교류 활동을 통하여 양국의 모자보건 및 청소년 생식보건사업에 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교환프로그램을 실시해 오고 있다. 특히 연변 조선족 자치주에 대해서는 2000년도부터 한국국제협력단과 공동으로 인구생식보건 기술원조 사업을 실시하였다. 지원규모는 2000년도부터 4년간 총 약 3억 6천여만 원에 이른다. 주요 사업으로는 모자보건 사업, 청소년 성교육 및 교재개발, 여성 질병 검진 등이 있었다. 특히 2002년도에 제작된 청소년 성교육 교재는 중국 최초의 성교육 교과서였다. 사업지역은 2000년도에 화룡시와 용정시 2개 시범지역에서만 실시되었으나 2001년도에는 왕청현과 훈춘시, 2003년도에는 도문시까지 확대되어 총 5개 현과 시에서 실시되고 있다. 그리고 지난 해에는 사업실시에 관한 모니터링과 평가에 주력하였다.

나. 캄보디아 인구/생식보건 기술원조사업

동 원조사업은 캄보디아 생식보건협회(Reproductive Health Association of Cambodia)의 요청으로 이루어졌으며 2003년 7월부터 12월까지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지역 젊은 어부들을 대상으로 에이즈 예방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시아누크빌(Sihanoukville)은 캄보디아 남서부 항구지역으로 인구 14만 명의 대부분이 어부, 항구 건설직, 의류 공장직 등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에이즈문제가 특히 심각한 지역이다. 어부로 종사하는 사람들(2,610명 등록)중 14.5%가 HIV 양성자이고 그 중 65%가 25세 미만의 청년으로 대부분이 캄보디아 내륙지방에서 직장을 찾아 온 이주자로서 HIV/AIDS를 캄보디아 내륙지역으로 확산시킬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지역 어부들의 생식보건 이용접근도 증대 및 올바른 콘돔 이용법 습득 등을 통하여 HIV/AIDS의 확산을 예방하며 어부들의 생식보건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 파키스탄 인구개발 HRD 훈련능력 강화 사업

한국의 성공적인 가족계획 사업이 파키스탄의 인구 생식보건사업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국제협력단과 공동으로 파키스탄 인구복지부 산하 정부기관인 국립인구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Population Study)의 인구개발 HRD(Human Resource Development) 훈련능력 강화사업지원을 위해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자문단파견, 물품지원, 인력개발연수, 전문가파견 등의 지원을 하였다.

라. 베트남 청소년 HIV/AIDS 예방사업

현재 베트남에서는 HIV/AIDS 감염자수가 몇몇 지방과 주를 중심으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HIV/AIDS 예방사업은 7대 국가 전략사업 중 하나로서 신속한 해외원조가 필요한 실정이다.

베트남가족계획협회(Vientnam Family Planning Association)는 거의 10년 동안 수 차례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를 방문하여 인력연수를 받은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단체이다. 2004년 2월,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는 한국국제협력단과 공동으로 베트남 원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현재 대상지역은 다낭시, 하이퐁주, 칸호아주이며 베트남가족계획협회 본부 및 지회를 통하여 에이즈검진상담 사업, 시범클럽 활동, AIDS 예방 홍보사업, 상담사업, 및 워크샵 개최 등을 실시하고 있다.

2) 밸런스 이니셔티브

밸런스 이니셔티브는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자원 불균형이 인구문제에서부터 비롯되었다는 자각에서 시작하여 정부, NGO, 기업 및 일반 국민 모두가 협력하여 인구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여성, 환경, 아동문제를 함께 풀어가기 위한 자원을 마련하는 글로벌 지원 활동으로서 패커드 재단의 지원으로 시작되었다.

한국의 인구사업 모형은 국내적으로 인구성장 안정에 기여함과 동시에 국제적인 성공사례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국제협력 역사가 짧을 뿐 아니라 해외원조와 국제인구문제에 대한 인식이 저조한 상황이다.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는 인구문제가 여성과 환경, 아동 빈곤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근본적인 이슈임을 착안하여 개발도상국 지원에 관한 밸런스 이니셔티브 사업을 패커드 재단에 제안하였고 재단은 한국이 인구사업 지원대상국은 아니지만 향후 국제인구문제에 기여할 잠재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아시아 · 태평양지역 인구사업 재원확보를 위한 정책개발 및 홍보사업을 지원한 것이다.

이에 밸런스 이니셔티브는 아태지역의 인구와 관련된 여성, 환경, 아동, HIV/AIDS 등의 국제인구개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원조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이를 기반으로 국제인구개발사업 지원에 필요한 자원을 동원하려는데 목적을 두고 2001~2004년까지는 국제인구개발 원조사업에 대한 기초조사, 국제인구개발 원조사업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식 제고, 정부 · 민간단체 · 기업 · 재단 간의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2005년 현재는 국제 인구개발문제 해결을 위한 자금모금 활동을 주로 하고 있다.

3) 아태지역인구개발협의체(Asia Pacific Alliance advancing the ICPD agenda) 활동

본 협회는 1961년 4월부터 국제가족보건복지연맹(IPPF)의 회원협회로 가족계획과 생식보건분야에서 성공적으로 활동해왔으며, 이를 인정받아 2004년에는 UN경제사회이사회 (ECOSOC) 의 협의자문기관으로 지정되었다. 동시에 국제협력활동으로 아태지역인구개발협의체가 1999년 창립된 초기부터 꾸준히 활동하였고 2004년도에는 아태지역인구개발협의체 사무국 운영도 담당하였다.

아태지역 인구개발협의체란 아시아와 태평양 연안

공여국(donor)의 정부 공적개발원조 기구와 해외원조 비정부기구, 지역기구, 국제적 재단, 기타 유관 단체들의 연합체로서 태평양 연안(미국, 캐나다), 아시아 지역(일본, 한국, 태국), 오세아니아 지역(호주, 뉴질랜드) 등의 7개국이 포함되어있다. 동 협의체는 인구와 지속 가능한 개발 등 국제인구개발회의(ICPD)의 행동계획(Programme of Action) 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관련 분야에서 활동하는 각국의 비정부기구와 정부기관, 재원 간의 협력을 증진하고자 창설되었으며 부분간 협력 증대(공여국의 인구와 개발 NGO 간의 협력체계 구축), 국가간 협력 증대(국제인구개발사업을 위한 아태지역 내 자원의 효율적 활용), 공여국 지원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제인구개발문제 해결을 위해서 공여국과 수원국간 정부와 민간단체 사이의 협력모델을 구축하고 한국이 OECD 가입국으로서 국제사회에 대해 책임을 다하고 있음을 외교적으로 알리는 것이며 동시에 협회 및 관련 단체 활동을 통하여 한국이 아태지역 인구개발 사업의 핵심부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Ⅳ. 우리나라가 당면한 인구 및 개발 과제

인구사업을 조직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원조사업의 재편도 고려하여 인구사업에 대한 예산 비중을 제고하여야 한다. 예산규모의 확대와 함께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 같이 인구전문팀을 설치하는 등 전문성 있는 인구사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한 기반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단기적인 문제점으로는 조기에 인구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함에 따라 인구문제에 대한 정부와 국민의 관심이 약화되면서 지난 40년간 축적하였던 인구사업의 경험과 기술이 사장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인구사업의 분출구는 해외, 특히 전세계 인구 증가의 90%를 차지하는 개발도상국에 있으며 아직 민간원조기관이 성숙하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한국국제협력단이 주도적으로 인구사업을 확대해 나가며 사장되어 가는 인구기술을 부활시켜야 한다. 가족계획에서 시작하여 가족보건, 생식보건 사업으로 확대해가는 우리의 인구기술과 인구사업 지원은 우리나라에서는 중요하지 않을지라도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발전에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므로 이를 위하여 현재 기존의 가족계획사업을 새로운 패러다임에 부합되게 발전시켜 인구사업 기술협력 모델을 구축해 정리해 나가고자 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우리나라 국민과 정부, 비정부기구, 재단 및 민간단체들이 국제인구개발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 협력의 필요성을 인지하여 국제사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기회의 발판으로 삼길 바란다.

연구자료 협력정책 2005-2-12

국제협력 동향

발 행	2005년 5월
편집 · 발행처	한국국제협력단 협력정책반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128
전 화	(02)740-5114
팩 스	(02)744-1092
홈 페 이 지	www.koica.go.kr
인 쇄	신라애드/(02)3444-0223

KOICA
한국국제협력단
110-782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128 Tel. 740-5114 Fax. 744-1092 http://www.koica.go.kr